

제4장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 출산력 분석

최은영·박영실

제1절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출산은 개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사적인 일이지만, 저출산은 인구 감소·고령화의 근본 원인이 되는 국가·사회적인 문제이다.¹⁾ 지난 반세기 동안의 인구 억제 정책과 함께 출산율 감소 경향이 지속된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개념적으로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960년대 6.0명 수준에서 1983년에는 인구 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졌고, 2005년에는 가정적인 상태에서 한 세대 후면 인구가 반으로 줄게 되는 1.08명을 기록하였다(권태환, 2008).

우리보다 일찍 저출산 문제를 겪기 시작한 서구 사회의 경험에서 보듯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요된다.²⁾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장·단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적실한 자료에 기반한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 Mason(1997)에 의하면 유럽의 진정한 인구학적 문제는 고령화가 아니라 낮은 출산율로, 출산율은 인구 현상 변화의 근본 원인이다. 스코틀랜드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유럽에서 총인구의 감소를 겪은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Boyle, 2003). 스코틀랜드는 1997년 이후 자연적 인구 감소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2001년 출생자수는 52,527명, 사망자수는 57,382명으로, 출생자수에 비해 사망자수가 더 많았다(General Register Office for Scotland, 2002).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출생아수는 465,892명, 사망자수는 246,113명이다(통계청, 2008, 인구동향조사).

2) 서구 산업 사회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 말에 이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민족의 자살'이라는 담론이 확산되었으며(민유기, 2006), 스웨덴에서도 1920년대에 대체출산율 이하의 출산율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후 국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저출산 정책의 시행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출산력(fertility)은 실제의 출생아수에 기초한 현실적인 출산 수준을 의미하는데, 출산력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하위 인구 집단(subpopulation group)별로 다르며, 지역별로도 다르다. 인구학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기준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를 ‘차별 출산력’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출산력 감소의 현황과 인과구조를 알고 이에 기반해서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집단과 지역에서 어떠한 속도로 출산력이 감소하고 있는지, 즉 차별 출산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출산율의 변화는 다양한 제도·문화·환경적 조건하에서 발생한다(Mason, 1997).³⁾ 따라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가설들은 시공간에 따라 대립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출산율의 관계는 수십 년 전과는 정반대로 변하기도 한다(Sleeboos, 2003; Billari and Kohler, 2004; Allison, 2009). 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출산율 감소, 혹은 국가별로 다른 출산율 감소의 시기와 속도의 차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Fahey and Speder, 2004). 유엔 인구분과에 의하면 저출산 사회에서 설득력 있고 계량화할 수 있는 출산 행위에 관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1999).

특정한 시간·장소·조건이라는 맥락하에서만 의미가 있는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조건하에서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 출산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은 여러 연구에서 공유되어 관련 조사와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하지만, 수행된 조사의 대부분이 비슷비슷하여 중복된 자료를 생산해 냈으며, 다른 조사 자료와의 통합적인 분석이 실시되지 않아 단편적이고 과제 지향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권태환, 2008).

출산력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해서 현상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출산력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기혼 여성의 출산율과 미혼율이 어떻게, 어떠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혼 여성의 출산율과 미혼율이 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별 출산력을 통해 기혼 여성의 출산율 변화 원인을 살펴 보았다. 정책은 바람직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행위로, 정책 대상이 되는 특정 인구 집단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하위 인구 집단의 출산력 변화를 다각도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3) 미국의 경우 북동부 지역과 같이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지역의 출산율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Pandit and Bagchi-Sen, 1993). 또한, 종교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로 보면, 미국에서는 주 종교가 가톨릭인 히스패닉 여성의 출산율이 높지만(Dye, 2008), 남부 유럽에서는 주 종교가 가톨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출산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종교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관되게 설명하기 힘들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김두섭, 2007), 이는 교육수준·경제활동상태 등의 개별 변수에 따라 분석 대상이 되는 전체 인구를 몇 개의 숫자로 집계한 거시적 분석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를 통해서는 하위 인구 집단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연령별로 사회경제적 특성 차이가 크지만 이를 고려한 하위 인구 집단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 출산력은 편향된 해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인 선진 산업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기존의 일반화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나(Chesnais, 1996), 기존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적실한 자료에 기반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에 부합하는가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에 기반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적 함의가 제한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출산력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하위 인구 집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일반화되었던 사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나 또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령을 통제한 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하위 인구 집단의 차별 출산력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자료에서 20~59세의 여성이 포함된 가구로 분석 대상 집단을 한정함으로써 연령효과를 줄이고자 하였다.⁴⁾

둘째, 혼인·출산을 선택했는지 혹은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의해 구분되는 인구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통해 미혼율과 유자녀율의 변화 원인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기혼유자녀 여성을 분석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과 함께 결혼과 출산에 있어 다른 선택을 한 집단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집단 간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미혼 여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결혼관계 내로 들어가기를 꺼리는 미혼·비혼 집단의 증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미혼 여성·기혼 무자녀 여성·기혼유자녀 여성·기혼무자녀 남성·기혼유자녀 남성으로 구분하여 그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기혼 여성의 출산율과 미혼율의 변화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지역별 차별 출산력의 변화와 원인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4) 분석 대상 집단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연구 방법에서 기술하였다. 한편, 10% 표본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특징 중 하나는 대도시 지역의 저출산 경향과 같은 지역별 차별 출산력이다(은기수, 1997; 유삼현, 2006).⁵⁾ 출산은 여러 가지 다른 지리적 스케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어떤 변화는 국가적 수준에서 발생하며 그리고 또 어떤 변화는 지역 특수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Franklin and Plane, 2004). 유사한 사회적 계급과 직업을 가진 개인들이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차별적인 출산율을 보이기 때문에 출산율의 변화와 관련하여 지역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Boyle, 2003). 지역별 차별 출산력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어떠한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어떠한 속도로 출산력이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출산력 감소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지역을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지역을 설정 가능하게 해주는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출산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의 마련은 국가 수준에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중요한 현안 과제로, 지역별 차별 출산력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은기수, 1997). 이에 따라 출산력과 관련하여 지역별 시계열 분석의 필요성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었으나(유삼현, 2006; 신효영·방은령, 2008; 김정호, 2009), 관련 연구는 지체되어 있다. 지역을 분석한 경우에도 도시·농촌과 같은 2~3개의 지역 유형별로 집계한 자료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다 상세한 지역 단위에서 차별 출산력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저출산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단위일 뿐 아니라 저출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수준의 분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유형·시도·시군구별로 차별 출산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력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둘째, 연령 변수를 통제했을 때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 여성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셋째, 혼인·출산의 선택에 따라 구분되는 하위 인구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으며, 미혼율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넷째, 시도·시군구별 차별 출산력 현황은 어떠하며, 지역의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5) '대도시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졌다'(마이데일리, 2009년 8월 19일자), '출산장려금 지역별 천차만별'(파이낸셜 뉴스, 2009년 9월 7일자) 등과 같은 신문기사의 제목은 지역별 차별 출산력 연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지만 최근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자료 및 연구 방법

우리나라 출산력 변화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이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적실한 자료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구학적 연구가 어느 정도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지느냐의 여부는 일차적으로 자료의 종류와 질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이희연, 2003).

많은 사례에 대한 관찰과 장기 시계열 분석이 요구되는 차별 출산력 연구에서 전수 자료이자 대규모 표본 조사인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및 인구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는 그 활용 가능성이 크다.⁶⁾ 특히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은 많은 표본 수와 전국에 걸친 표본 구성으로 인해 어떠한 표본 조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패널 자료나 설문 자료에 기초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김우영, 2003; 권용은·김의철, 2004; 김지경, 2004; 윤소영, 2005; 장진경, 2005;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2005; 한은주·박정운, 2006; 김두섭, 2007; 최형재, 2008).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가 사용된 경우에도 마이크로데이터가 활용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집계 결과를 사용하거나(은기수, 1997; 유삼현, 2006; 전광희, 2006; Kwon, 2007; 최형재, 2008), 2% 표본에 대한 분석(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5; 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6; 김우영, 2007)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⁷⁾, 최근에 이용 가능해진 10% 표본에 대한 분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⁸⁾

앞에서 살펴본 하위 인구 집단에 대한 분석 부족, 기혼유자녀 여성으로의 분석 대상 제한, 저출산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단위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별 차별 출산력 연구의 부재 등의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한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우선 기존의 패널 자료나 설문 자료로는 하위 집단으로 내려갈수록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사례 수 확보가 어렵다. 다음으로 결과가 집계되는 공간단위의 수준은 궁극적으로 자료의 수집단위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Martin, 1998), 시군구 등 소지역별 자료 확보가 어렵다. 통계청의 두 자료는 출산과 관련 대규모의 표본 조사 없이 시군구 단위로 하위 인

6) 인구주택총조사의 출산 관련 변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김우영, 2007), 이는 가구와 인구가 별도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생성해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간과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7) 은기수(1997)는 분석에 집계 결과인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상실하였다고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8) 시군구 혹은 읍면동과 같은 소지역 통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에 발맞추어 통계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통계 개선 작업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통계청에서는 MDSS·CD-ROM·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간단위가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유연하게 데이터를 가공·처리하여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이 조성되었다.



구 집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과 2000~2007년 인구동향 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두 자료는 첫째아의 출생비율, 평균출산순위, 출생시 모의 연령 등과 같은 변수에서 상당한 정도의 일치를 보여줌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권태환, 2008). 동시에 자료 각각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두 자료를 동시에 분석할 경우, 그 의미는 배가될 것이다. 인구동향조사의 경우, 당해 연도에 출생이 이루어진 가구에 대한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출산력의 변화 추세와 패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특성상 지난 시기 동안의 출생에 관한 누층적인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장기 시계열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구동향조사에서는 얻을 수 없는 부와 모의 정보 등 추가적인 변수가 풍부하다.

권태환(2008)은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에 기반한 모의 정보와 결합된 0~4세 자녀 연구를 통해 출산 연구에 있어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유용성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을 기반으로 모의 정보뿐 아니라 부의 정보를 함께 결합하였으며, 자녀의 연령 범위 또한 20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케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의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10% 표본의 경우 가구와 인구가 별도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구와 인구 테이블의 레코드는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는 1:1 관계, 가구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1:다(多)의 관계가 성립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한 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 자녀의 속성이 한 레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데, 연계키를 이용해서 단일한 테이블로 만들었다(그림 4-1). 가구주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가구주와 배우자의 학력, 직업 등의 변수를 정리하였는데, 가구주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으므로 성별에 따라 자료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 처리 과정이 필요하였다. 최종 분석용 테이블은 부, 모, 자녀(첫째·둘째·셋째)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2).⁹⁾

9) 한 가구는 한 명의 가구주와 배우자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에 출산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20~59세의 기혼 여성이 한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여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가구주·배우자·기혼 여성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인 기혼 여성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4-1] 가구테이블과 인구테이블의 연계

키값	부_만나이	모_만나이	첫째만나이	둘째만나이
11010510040006001	46	41	13	8

[그림 4-2] 최종 분석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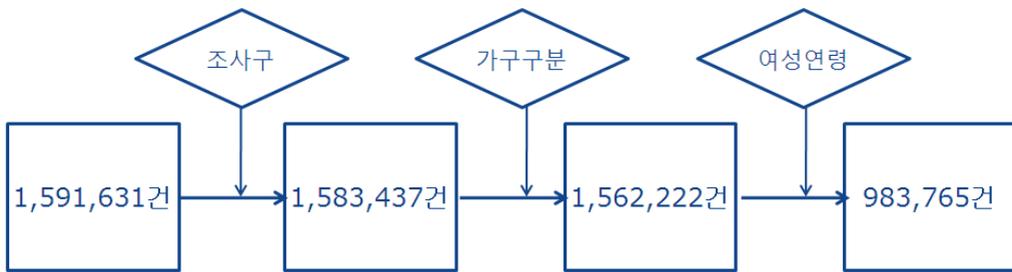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조사구, 가구구분, 여성의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분석 대상 집단을 생성하였다. 조사구는 특별 조사구를 제외한 일반조사구인 아파트조사구·보통조사구·섬조사구로, 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가족과 가족 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1인 가구로, 여성의 연령은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20~59세로 제한하였다. 10% 표본은 전국 1,591,631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구의 레코드 수는 조사구를 제한하면 1,583,437건, 가구를 제한하면 1,562,222건, 여성의 연령을 제한하면 983,765건이 된다([그림 4-3]).¹⁰⁾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성별이 여성이면서 연령이 20~59세인 530,847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0~19세 자녀가 없는 452,918가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이 20~59세인 가구와 20~59세의 여성 단독가구를 분석 대상으

10) 출산율이 높은 고령층의 여성이 분석 대상 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에 있어 10% 표본 전체(2.54명)와 분석 대상 집단(1.91명)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로 하였다(그림 4-4).

데이터베이스 관리에는 Microsoft Access를, 통계 분석에는 SPSS 14.0을 사용하였다. GIS 분석에는 ArcGIS 9.3을 이용하였는데,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에 기반한 공간 분석은 작은 스케일의 공간단위로 구축된 대용량 자료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지도와 그래프 등을 통한 시각화(visualization) 기법을 통해 가시화된 공간은 인과관계에 대해 더 많은 설명력과 확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Schnell and Monmonier, 1983).



[그림 4-3] 조건 제한에 따른 레코드수의 변화



[그림 4-4] 분석 대상 집단의 구성

제2절 우리나라의 출산력 변화

1.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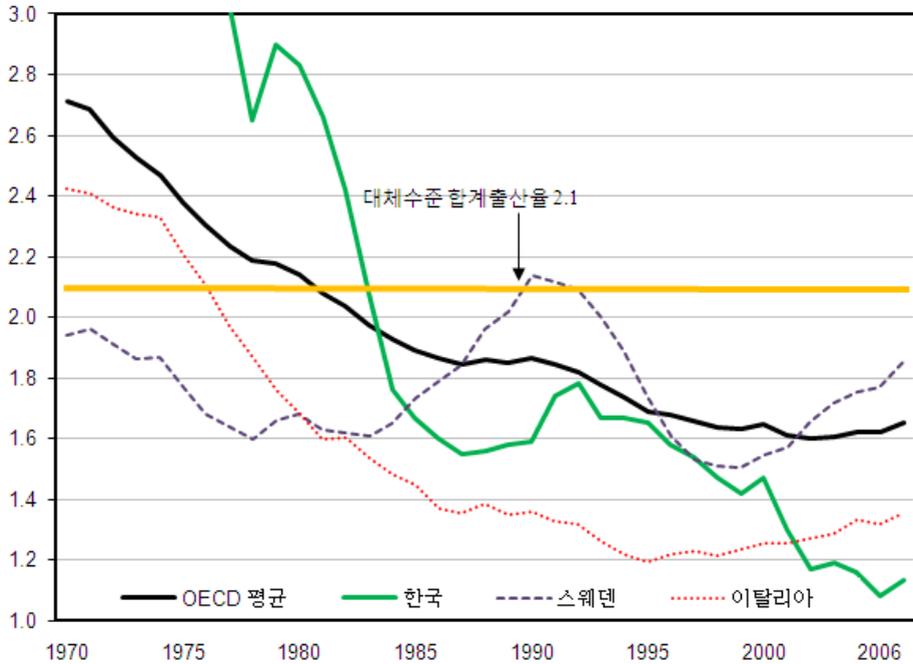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북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회복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떠한 인구학자에 의해서도 예견된 바 없는 현상이다(Chesnais, 1996). 이와 같은 현상을 MacDonald(2000)은 남성 부양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에서 성 평등 모델(gender equity model)로의 전환에 있어서의 개별 국가의 적응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선진사회에서는 여성에게 독립된 개인으로서 상당한 자유와 평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들이 아이를 갖는 순간 이러한 성취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노동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적을 때 더욱 그러하다(MacDonald, 2008). 북부 유럽과 영어권 국가와 같이 사회적 제도가 보다 빨리 성 평등 모델에 적응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반면 가부장적인 남성 부양 모델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고용이 보육 시설·노인 부양 시설 등 사회적 제도의 부족에 의해 제한될 때,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울 때 출산율은 극단적인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MacDonald, 2000).

현재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가부장적이고 성분업적 역할 규범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국가들이다(Chesnais, 1996; MacDonald, 2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¹¹⁾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성분업적 역할 규범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며,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 출산을 최대한 미루며, 또한 자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한국·일본·이탈리아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로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4-5], <표 4-1>).¹²⁾

11) 이들 국가들은 출산율이 높은 북부 유럽 국가들이나 영어권 국가들에 비해 이혼율, 혼외자 비율, 동거와 같이 결혼에 대한 대안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가구의 비율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2) Chesnais(1996)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여성들의 이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젊은 여성들이 희망하는 미래는 이전 세대의 여성들과는 다르다. 현재 젊은 여성들은 배우자나 어머니로서의 삶이 아닌 다른 역할을 원한다. 과거에 여성들은 남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현재 교육 받은 여성들은 노동 시장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출발선상에 서 있고, 남성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더 나은 위치에 있다. 그들은 일자리에 근거한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고 일자리가 제공하는 경제적인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용카드나 수표를 통한 스스로의 경제력은 소비 사회에서 독립의 상징이자 핵심이다. 젊은 여성들은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당연하다고 간주되었던 가족 내의 규약을 받아들일려고 하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험한 성 평등의 경험으로 인해 그들은 종속을 참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와 출산율 사이의 관계는 직접적이다. 반복적인 임신은 젊은 여성들이 벗어나려고 하는 전통적인 역할로 자신의 위치가 강등되는 위험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커플들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아이 갖는 것을 연기하거나 한 명 혹은 두 명의 자녀를 갖는 것을 선택한다.



출처: http://www.oecd.org/document/24/0,3343,en_2649_34637_2671576_1_1_1_1,00.html#data.

[그림 4-5] 국가별 합계출산율의 변화(1970~2006년)

<표 4-1> 국가별 합계출산율의 변화(1970~2006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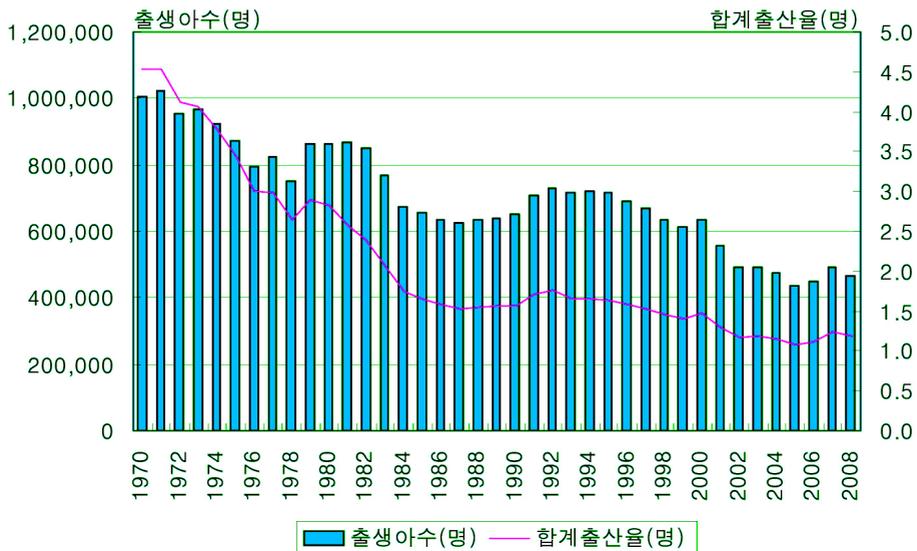
구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6년
이탈리아	2.43	2.21	1.68	1.45	1.36	1.19	1.26	1.32
일본	2.13	1.91	1.75	1.76	1.54	1.42	1.36	1.26
한국	4.53	3.47	2.83	1.67	1.59	1.65	1.47	1.08
스웨덴	1.94	1.77	1.68	1.73	2.14	1.74	1.55	1.77
OECD 30개국	2.71	2.38	2.14	1.89	1.86	1.69	1.64	1.62

출처: http://www.oecd.org/document/24/0,3343,en_2649_34637_2671576_1_1_1_1,00.html#data.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1970년에는 약 100만 명 가량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약 60만 명, 2008년 현재는 약 47만 명 수준이 되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1970년 4.5명에서 7년만인 1977년에 3명 이하로, 다시 7년만인 1984년에는 2명 이하가 되었다.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2007년까지 약간 상승하였으나, 2008년 다시 하락하여 1.19명이 되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그림 4-6]).¹³⁾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1997~2007년 사이 5세 간격으로 연령대별 출산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2>, [그림 4-7]). 연령대별로 증감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06년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25~29세에서 30~34세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1997년에는 25~29세의 출산율이 159.7명으로 30~34세의 71.5명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았으나, 2007년에는 30~34세의 출산율(101.3명)이 25~29세(95.5명)에 비해 높다. 25~29세의 출산율 하락과 30~34세의 출산율 증가는 초혼 연령의 상승에 따른 25~29세 혼인율의 하락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을 계산하는 공식의 분모에는 여성의 혼인상태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혼율에 따라서 출산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해당년도.

[그림 4-6]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의 변화(1970~2008년)

40~44세와 45~49세의 출산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20~24세는 54.2명에서 19.5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35~39세는 15.4명에서 25.6명으로 꾸준한 증가 경향을 보였다. 지난 10여 년간 연령대별 출산율의 변화는 20대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30대 출산율의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13) 국가별 합계출산율의 변화는 부록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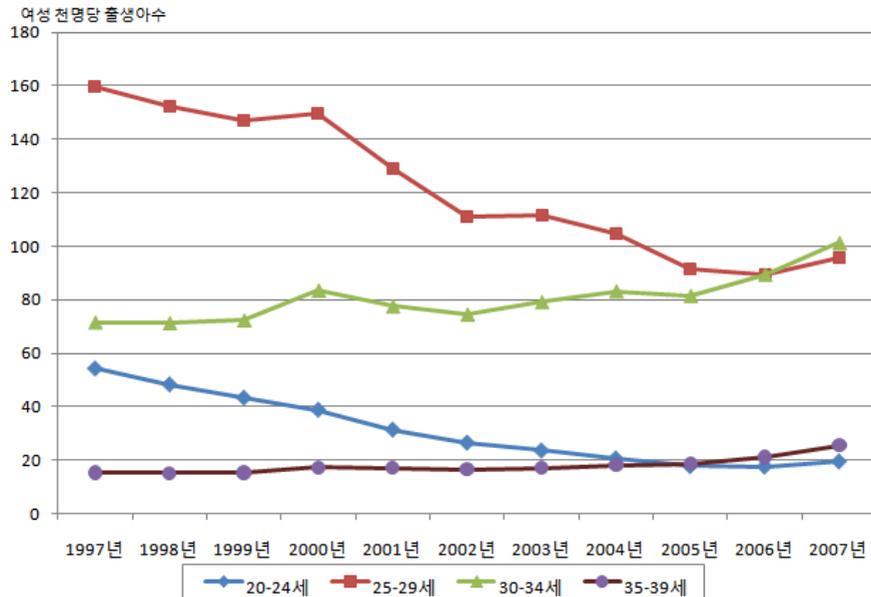
〈표 4-2〉 연령대별 출산율의 변화(1997~2007년)

(단위: 명)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5~19세	3.0	2.8	2.6	2.5	2.2	2.6	2.5	2.3	2.1	2.2	2.2
20~24세	54.2	48.3	43.3	38.8	31.4	26.5	23.6	20.6	17.8	17.6	19.5
25~29세	159.7	152.1	147.2	149.6	129.2	110.9	111.7	104.5	91.7	89.4	95.5
30~34세	71.5	71.2	72.3	83.5	77.5	74.5	79.1	83.2	81.5	89.4	101.3
35~39세	15.4	15.2	15.3	17.2	17.0	16.6	17.1	18.2	18.7	21.2	25.6
40~44세	2.3	2.3	2.4	2.5	2.4	2.4	2.4	2.4	2.4	2.6	3.1
45~49세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주민등록인구, 해당 년도.

주: 연령대별 출산율은 해당 연령대 여성 인구 천 명당 출생아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주민등록인구, 해당 년도.

[그림 4-7] 연령대별 출산율의 변화(1997~2007년)

2. 우리나라 기혼 여성 출산율의 변화

합계출산율의 감소 원인은 기혼 여성 출산율의 감소와 미혼·비혼 여성의 증가,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일반적으로 저출산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알려져 있는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를 통해 기혼 여성 출산율의 감소를 살펴보았다.¹⁴⁾ 이와 함께 기혼 여성의 출생아수 감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산소요기간, 남아선호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감소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3>). 15~49세 가임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980년에 2.94명이었으나, 1990년에는 2.13명, 2005년에는 1.74명으로 하락하였다.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더라도 모든 집단에서 일관되게 평균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3>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의 변화(1980~2005년)

(단위: 명)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2000년	2005년
전체	3.59	3.26	2.97	2.54	2.43
15~49세	2.94	2.52	2.13	1.81	1.74
15~19세	0.45	0.44	0.32	0.51	0.36
20~24세	0.92	0.86	0.70	0.70	0.65
25~29세	1.75	1.54	1.28	1.11	0.91
30~34세	2.67	2.29	1.89	1.71	1.52
35~39세	3.43	2.80	2.35	1.92	1.87
40~44세	4.16	3.44	2.83	2.01	1.94
45~49세	4.69	4.07	3.43	2.31	2.00
50~54세	5.09	4.58	4.07	2.72	2.30
55~59세	5.30	4.91	4.56	3.27	2.72
60~64세	5.30	5.13	4.90	3.89	3.30
65~69세	5.10	5.13	5.10	4.29	3.88
70~74세	4.93	4.97	5.11	4.52	4.27
75세이상	4.73	4.79	4.94	4.61	4.50

출처: 권태환, 2008.

주: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출생아수를 조사하지 않았음.

14) 합계출산율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과 미혼율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는 반면, 평균 출생아수는 기혼 여성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모의 연령대별로 출생아수와 그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한자녀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다자녀 비율은 증가하였다(<표 4-4>). 한자녀 비율이 20~29세까지는 60% 이상이었으나, 30~34세는 34.3%, 35~39세는 17.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5~59세에는 9.5%였다. 다자녀 비율은 35~39세 13.7%, 45~49세 19.3%, 55~59세 53.8%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현격하게 증가하였다. 20~30대는 아직 출산이 진행 중인 연령대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하게 한자녀 비율이 감소하고, 두자녀와 다자녀 비율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와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완결 출산력을 보이는 40~44세 여성과 45~49세 여성의 한자녀·두자녀·다자녀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한자녀 비율은 15.5%로 일정한 반면 40~44세 여성에서 다자녀 비율이 감소한 만큼 두자녀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50대 여성에서는 이러한 두자녀 비율과 다자녀 비율의 상쇄가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Hoem and Hoem (1989)에 의하면 1960년대 스웨덴 출산을 감소는 셋째아의 급격한 감소에 그 원인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40~59세 여성의 출산을 감소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모의 연령대별 출생아수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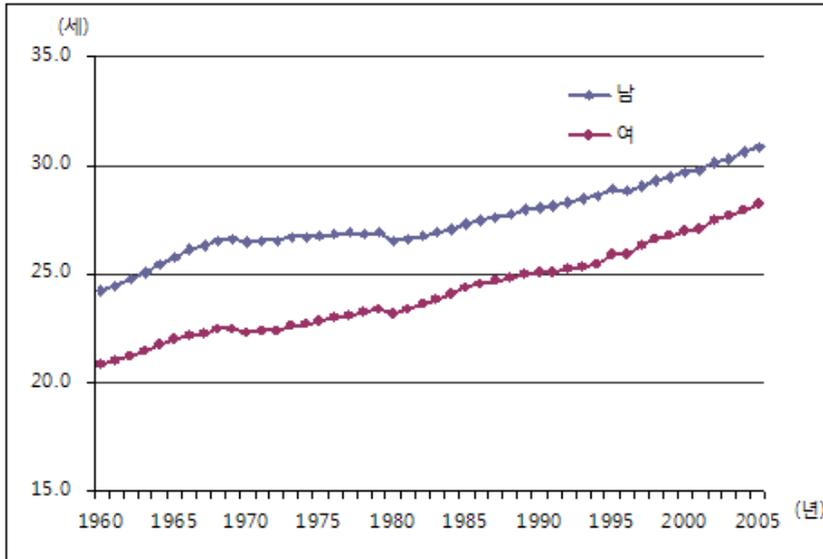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20~24세	3,164	77.4	870	21.3	55	1.3
25~29세	24,698	61.7	14,113	35.2	1,232	3.1
30~34세	43,989	34.3	74,654	58.2	9,717	7.6
35~39세	28,425	17.4	112,898	69.0	22,355	13.7
40~44세	27,425	15.5	122,310	69.2	26,944	15.3
45~49세	26,711	15.5	112,548	65.2	33,394	19.3
50~54세	12,748	10.9	62,581	53.3	41,979	35.8
55~59세	5,050	9.5	19,580	36.7	28,675	53.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나. 초혼 연령의 상승과 첫출산까지 소요 기간의 단축

[그림 4-8]에서 보듯이 여성의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외자 출산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에 혼인 연령의 상승은 곧 첫째아 출산 연령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여성의 첫째아 출산 평균연령은 1995년도에 26.5세였으나, 2000년도에는 27.7세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현재 29.4세가 되었다(<표 4-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

[그림 4-8] 혼인 연도별 초혼 연령의 변화

<표 4-5> 출생순위별 여성의 평균출산 연령의 변화(1995~2007년)

(단위: 세)

구분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1995년	27.92	26.49	28.73	31.87
1996년	28.09	26.65	28.89	31.97
1997년	28.28	26.86	29.04	32.06
1998년	28.48	27.11	29.23	32.15
1999년	28.68	27.38	29.41	32.29
2000년	29.02	27.68	29.67	32.44
2001년	29.26	27.97	29.88	32.69
2002년	29.49	28.29	30.19	32.9
2003년	29.71	28.57	30.44	33.07
2004년	29.98	28.83	30.77	33.29
2005년	30.22	29.08	31.03	33.52
2006년	30.43	29.27	31.28	33.69
2007년	30.58	29.42	31.50	33.8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해당 년도.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의 상승이 출산율을 저하시킨다는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최근으로 올수록 결혼 이후 출산까지의 기간이 길어졌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은기수(2001a, 2001b)와 민희철(2006)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혼인 연령에 따른 첫출산 간격을 분석한 결과, 그 차이는 미미하나 최근 결혼분석 대상 집단으로 올수록 첫출산 간격이 길어짐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패널조사를 분석한 류기철·박영화(2009)의 연구에서는 출생 시기가 늦은 분석 대상 집단이 출생 시기가 빠른 분석 대상 집단에 비해 결혼 이후 출산까지의 간격이 길어진 것은 아니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모든 분석 대상 집단에서 결혼 이후 12개월의 기간 내에 약 절반 정도의 여성이 첫째아를 출산하며 또한 약 90% 전후의 여성들이 결혼 후 3~4년 내에 첫출산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경애(2007)의 연구에서도 최근 초혼과 첫째아 출산의 연기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인구동향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는 결혼분석 대상 집단과 출생분석 대상 집단 둘 다에서 혼인에서 첫출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첫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2000년 19.85개월에서, 2003년에는 21.56개월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2005년이나 2007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표 4-6>).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여성의 연령대별로 첫째아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 후 1년 안에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그림 4-9]). 그 비율이 25~29세는 57.2%, 30~34세는 52.5%, 35~39세는 56.7%, 40~44세는 49.6%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를 빨리 출산하는 경향을 보였다. 혼인 연도별 분석 대상 집단의 경우에도 최근에 혼인한 사람들일수록 첫출산까지의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그림 4-10]).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근 분석 대상 집단에서 첫출산 간격을 늦추는 경향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인 연령의 상승과 첫출산까지의 소요기간이 상쇄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6> 혼인과 특정 순위의 출산까지 평균 소요기간(2000-2003-2005-2007년)

(단위: 개월)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첫째아	19.85	21.56	21.57	21.46
둘째아	49.82	52.42	54.55	55.30
셋째아 이상	91.73	92.13	94.94	95.1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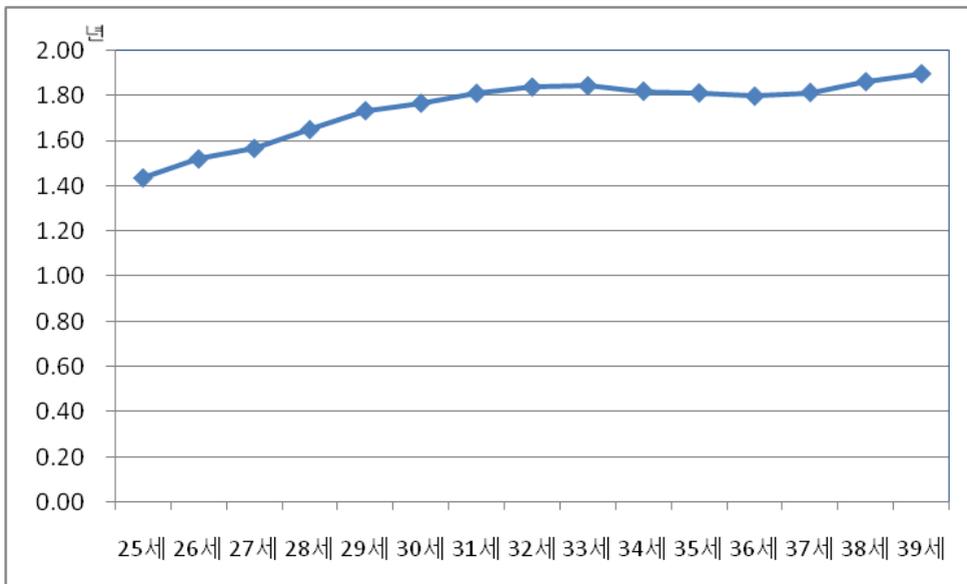
<표 4-7> 모 연령대별 첫출산까지 평균 소요기간의 변화

(단위: 명, %)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계
25~29세	18,256	9,463	2,769	907	291	98	53	23	15	29	31,904
	57.2	29.7	8.7	2.8	0.9	0.3	0.2	0.1	0.0	0.1	100.0
30~34세	57,289	32,377	11,055	4,197	1,913	944	475	251	144	423	109,068
	52.5	29.7	10.1	3.8	1.8	0.9	0.4	0.2	0.1	0.4	100.0
35~39세	77,210	36,548	10,915	4,454	2,358	1,456	970	654	430	1,079	136,074
	56.7	26.9	8.0	3.3	1.7	1.1	0.7	0.5	0.3	0.8	100.0
40~44세	63,182	31,460	12,039	6,623	3,854	2,673	1,922	1,404	1,073	3,074	127,304
	49.6	24.7	9.5	5.2	3.0	2.1	1.5	1.1	0.8	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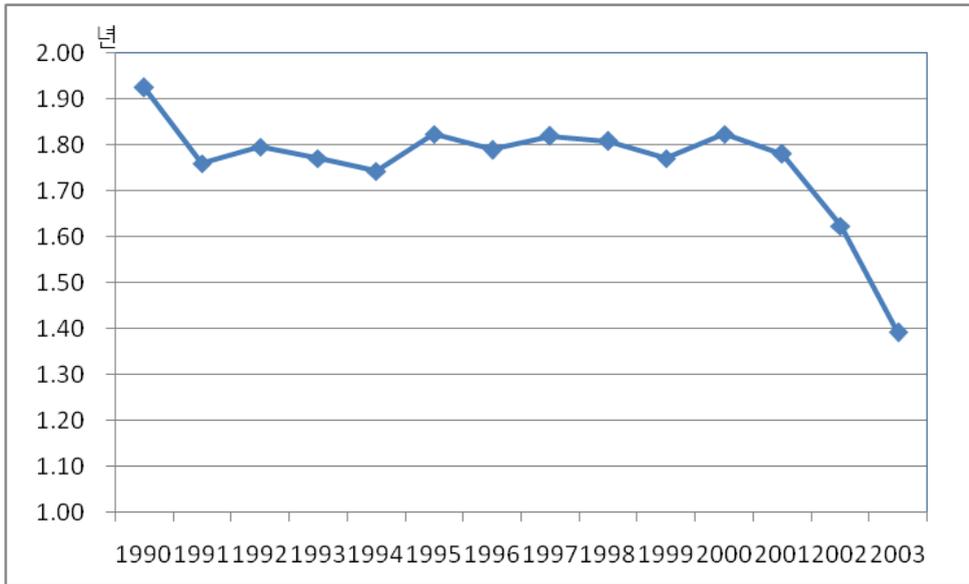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주: 가구주의 자녀에 대한 생물학적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혼 가정 등의 경우 자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서 여성의 출산 자녀수는 0인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그림 4-9] 모 연령별 첫출산까지 평균 소요기간의 변화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그림 4-10] 모 혼인 연도별 첫출산까지 평균 소요기간의 변화

<표 4-8> 총출생아수 및 성 구성에 따른 평균 추가계획출생아수

(단위: 명)

구분	0명	1명		2명		
		여아 1명	남아 1명	여아 2명	남아 1명 +여아 1명	남아 2명
20~24세	1.49	0.78	0.76	0.30	0.23	0.27
25~29세	1.49	0.74	0.67	0.23	0.13	0.11
30~34세	1.22	0.53	0.45	0.12	0.06	0.05
35~39세	0.64	0.20	0.14	0.04	0.02	0.01
40~44세	0.19	0.04	0.02	0.01	0.00	0.00
45~49세	0.03	0.01	0.01	0.00	0.00	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다. 남아선호의 영향력 감소

총출생아수 및 성 구성에 따른 평균 추가계획출생아수를 통해 남아선호 사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표 4-8>). 모든 연령대에서 추가계획출생아수가 여자아이



만 있는 가구가 남자아이만 있는 가구보다 일관되게 많이 나타나서 남아선호 사상이 추가적인 출산 계획에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석 대상 집단 전체에 대해 다자녀 가구 자녀의 성별 구성을 살펴본 후(<표 4-9>), 이를 모의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남아-남아-여아와 여아-여아-남아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표 4-10>), 이와 같은 경향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대상 집단 전체에서는 여아-여아-남아와 여아-여아-여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7.3%, 16.9%로 남아-남아-여아(7.8%)와 남아-남아-남아(7.5%) 등 다른 성별 구성의 조합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첫째아와 둘째아가 모두 여아인 경우 추가적인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모의 연령대에 따라 여아-여아-남아의 구성 비율은 45~49세 48.9%, 35~39세 34.6%, 25~29세 21.6%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45~49세의 경우 아들만 둘인 경우 추가적인 출산이 이루어진 남아-남아-여아와 딸만 둘인 경우 추가적인 출산이 이루어진 여아-여아-남아의 구성비가 각각 4.5%, 48.9%로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25~29세의 경우는 그 구성비가 각각 10.4%, 21.6%로 2배 정도에 그쳤다. 이는 남아선호 사상이 젊은 연령층으로 올수록 추가적인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한국에서 출산율은 이것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Park, 2006).

<표 4-9> 다자녀 가구 자녀의 성별 구성

(단위: 가구, %)

성별 구성			다자녀 가구수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남아	남아	남아	3,766	7.5
남아	남아	여아	3,884	7.8
남아	여아	남아	3,667	7.3
남아	여아	여아	3,525	7.0
여아	남아	남아	4,267	8.5
여아	남아	여아	3,825	7.6
여아	여아	남아	18,699	37.3
여아	여아	여아	8,475	16.9
계			50,108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표 4-10〉 모의 연령대별 다자녀 가구 자녀의 성별 구성

(단위: 가구, %)

연령대	성별 구성			다자녀 가구수	비율
25~29세	남아	남아	여아	113	10.4
	여아	여아	남아	234	21.6
30~34세	남아	남아	여아	794	9.3
	여아	여아	남아	2,503	29.4
35~39세	남아	남아	여아	1,651	8.9
	여아	여아	남아	6,449	34.6
40~44세	남아	남아	여아	876	5.9
	여아	여아	남아	6,634	44.4
45~49세	남아	남아	여아	124	4.5
	여아	여아	남아	1,340	48.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주: 비율은 해당 연령대 다자녀 가구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해당 성별 구성이 차지하는 백분율임.

제3절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 출산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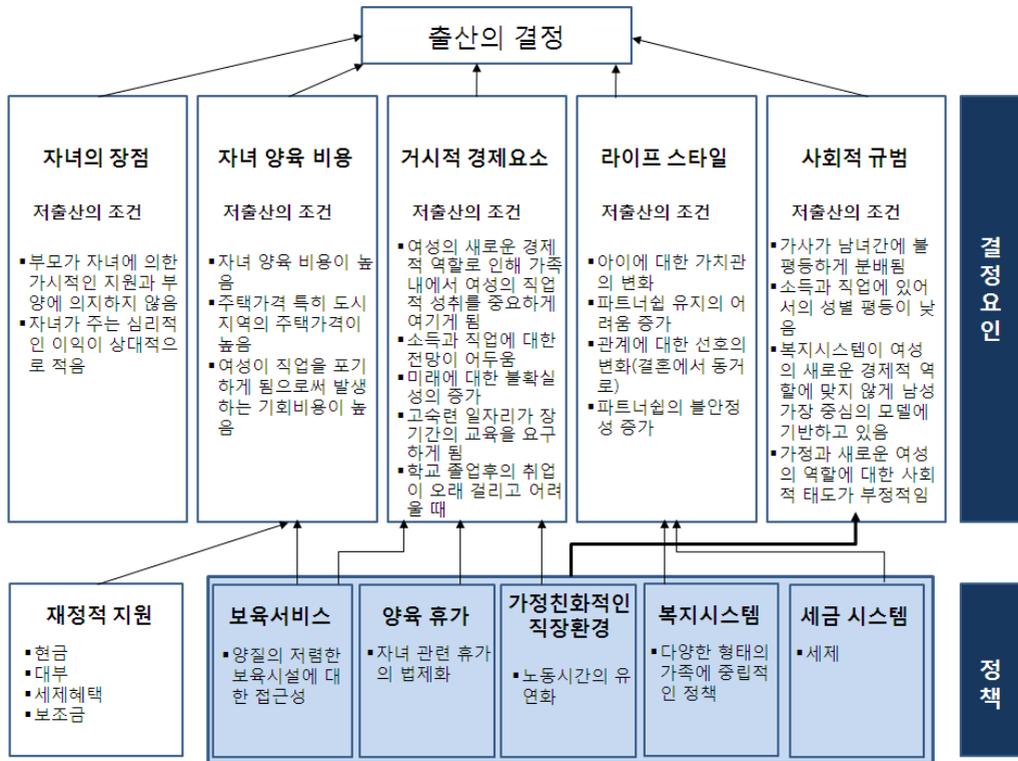
1. 사회경제적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자녀로 인해 생기는 좋은 점, 자녀 양육 비용, 거시적인 경제 요소, 생활양식의 변화, 사회적 규범, 정부 정책 등은 개인의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그림 4-11). 이 중 출산율 저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요인은 교육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이다(강은진, 1995).

최근 OECD 국가들에서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4-12).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는 부적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정적인 관계로 바뀌었다(Ahn and Mira, 2002; Sleebos, 2003). 노동 시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도 높은데, 스웨덴·노르웨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윤소영, 2005).

우리나라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를 기혼 여성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사회에서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결혼과 가족가치관에서도 독립적이어서 개인적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신인철, 2009)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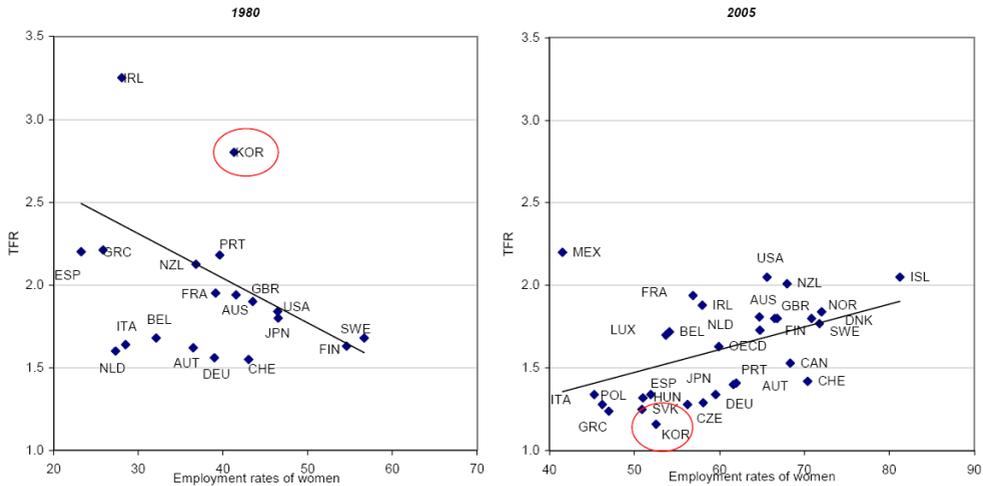
출처: Sleebos, 2003.

[그림 4-11] 출산의 결정요인과 정책

재인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교육수준과 출산력이 부적인 관계로 OECD 국가군의 1980년대 이전 상황과 유사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또한 출산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이시원 외, 2006; 김우영, 2007; 김정호, 2009).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라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⁵⁾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여성의 교육수준과 출산율을 분석한다고 가정해 보면, 교육수준이 낮은

15) 하지만 여성의 취업과 출산의 인과관계에 있어 일치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한은주·박정운, 2006). 자녀를 갖는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감소시키는 것인지, 경제활동참여가 여성이 자녀를 갖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인지, 두 변수가 독립적인지, 두 관계 자체는 의미가 없고 외생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Budig, 2003).



Source: OECD (2007), *OECD Family database*

출처: http://www.oecd.org/document/45/0,3343,en_2649_34819_39651501_1_1_1_1,00. html.

[그림 4-12] OECD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1980-2005년)

아프리카의 출산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선진 산업 사회의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상식 수준의 분석 결과에 기반해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혼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수준을 예로 들면,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고연령층 여성의 출산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저연령층 여성의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두 변수가 부적인 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령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 교육수준별 차별 출산력 분석에서 연령을 고려하면 그 차이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연령별로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크지만 지금까지 이를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감소한다고 요약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MacDonald (2000)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가능한 두 가지 정책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1950년대의 남성 부양 모델로 즉 여성의 교육과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과거로의 회귀이며, 다른 하나는 고용과 자녀를 갖는 것이 양립될 수 있도록 성 평등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 결과는 과거로의 회귀가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 노동 시장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

기 때문에 1950년대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선진 산업 국가에서 불가능하며, 모든 사회 제도에서 성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유일한 실현 가능한 선택이다 (MacDonald, 2000). 선진 산업 사회에서는 여성의 높은 지위와 이러한 지위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정책이 다음 세대의 대체를 위해 출산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었다 (Chesnais, 1996). 실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제도가 덜 발달한 여성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Brewster and Rindfuss, 2000; 박수미, 2005; 장지연, 2005; MacDonald, 2008).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하위집단별 분석을 통해서 재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통제한 후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와 출산력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 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교차분석과 편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동일 연령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 출산력을 완결 출산력을 보이는 40~49세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혼인·출산 연령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출산이 진행 중인 20~30대 연령대에서는 연령 효과를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주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변화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교육수준·직업과 같이 인구주택총조사와 동일한 변수를 인구동향조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를 통해 최근 동향을 보완하였다. 인구동향조사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비해 사용 가능한 변수가 제한되고 장기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해당 연도에 출생한 동일 분석 대상 집단에 대한 자료로 보다 동질적인 집단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집단 간 비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기존의 차별 출산력에 관한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출산력은 '총수' 개념인 평균 출생아수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평균 출생아수는 한 명을 낳는 경우와 두 명을 낳는 경우, 세 명 이상을 낳는 각각의 경우가 평균적으로 한꺼번에 1.0명 혹은 2.0명으로 표현됨으로써 각 집단이 가진 차별적인 속성을 무마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평균 출생아수와 함께 집단별로 한자녀·두자녀·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비율을 별도로 살펴보았다.

2.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 출산력

가. 장기 동향 및 완결 출산력

교육수준과 출산율과의 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대부분은 둘 사이에 부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5; 조혜중, 2006).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화되거나 역전되기도 한다(전광희, 2002; 김우영, 2007).

연령 변수의 고려없이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아수가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4-11>). 그러나 이 자료를 연령대별로 분해해 보면 25~29세에서 45~49세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출산이 완결되었다고 보여지는 40~44세 집단의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4-12>). 이 연령대 여성의 경우, 초졸의 평균 출생아수는 2.10명, 대학원졸은 1.83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 차이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남성의 경우 초졸 이하의 평균 출생아수는 1.95명, 대학원졸은 1.93명으로 차이가 미미한 편이다.

<표 4-11> 성-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단위: 명)

구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여성	2.56	2.16	1.81	1.61	1.48
남성	2.46	2.20	1.85	1.71	1.7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표 4-12> 성-연령대-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단위: 명)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여성	초졸이하	1.28	1.73	2.00	2.10	2.31	2.67	2.99
	중졸	1.33	1.72	1.98	2.00	2.08	2.32	2.56
	고졸	1.03	1.63	1.92	1.95	1.95	2.11	2.31
	대졸	0.63	1.34	1.80	1.91	1.88	2.00	2.17
	대학원졸이상	0.48	1.07	1.65	1.83	1.85	1.97	2.09
남성	초졸이하	1.04	1.42	1.74	1.95	2.09	2.38	2.82
	중졸	1.09	1.47	1.81	1.95	2.05	2.22	2.57
	고졸	0.76	1.34	1.80	1.97	1.98	2.08	2.36
	대졸	0.48	1.06	1.69	1.93	1.96	2.00	2.20
	대학원졸이상	0.41	0.98	1.66	1.93	1.99	2.06	2.2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교육수준별로 한자녀·두자녀·다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을 모의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13>). 한자녀 비율이 30~34세 여성은 초졸 25.0%, 고졸 29.8%, 대학원졸 60.5%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45~49세 여성은 초졸 10.9%, 고졸 16.9%, 대학원졸 19.6%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자녀 비율과 교육수준의 정적인 관계는 저연령층에서는 뚜렷하였으나,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약화되었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다자녀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고학력 집단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한자녀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두자녀와 다자녀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 출산 연령대인 30~34세와 35~39세의 여성을 비교해 보면, 한자녀 비율은 60.5%에서 29.5%로 감소하고, 두자녀 비율은 37.4%에서 63.3%로 다자녀 비율은 2.1%에서 7.3%로 각각 증가해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13> 모의 연령대-교육수준별 출생아수 구성 비율(2005년)

(단위: %)

구분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초졸	25.0	53.1	21.9	17.7	54.6	27.7	14.9	58.2	27.0	10.9	52.7	36.4
중졸	28.0	54.4	17.7	16.4	61.9	21.7	15.9	64.3	19.8	14.1	63.3	22.7
고졸	29.8	61.5	8.7	15.6	70.0	14.4	15.1	70.5	14.3	16.9	68.5	14.6
대졸	45.6	50.6	3.7	22.0	68.9	9.1	16.5	72.1	11.4	18.1	71.0	11.0
대학원	60.5	37.4	2.1	29.5	63.3	7.3	20.6	68.8	10.6	19.6	69.4	11.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교육수준과 평균 출생아수와의 상관관계를 연령을 통제된 이후에 살펴본 편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14>). 연령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수준과 평균 출생아수의 상관계수는 여성 -0.302, 남성 -0.219였으나, 연령 변수가 통제된 이후에는 상관계수가 여성 -0.133, 남성 -0.081로 그 관계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표 4-15>), 이에 따라 출산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지만, 생애 동안 낳는 총출생아수는 교육수준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4-14〉 교육수준과 평균 출생아수의 편상관분석(2005년)

구분		연령 통제 전	연령 통제 후
여성	상관계수	-0.302	-0.133
	유의수준(양측)	0.000	0.000
남성	상관계수	-0.219	-0.081
	유의수준(양측)	0.000	0.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표 4-15〉 교육수준별 평균 혼인 연령(2005년)

(단위: 세)					
구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평균 혼인 연령	22.6	23.3	24.8	26.1	26.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나. 최근 동향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최근 시기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해 보면, 장기 동향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4-16〉). 2000~2007년 사이에 초졸과 대졸 이상의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가 여성은 0.59명에서 0.19명으로, 남성은 0.42명에서 0.23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평균 출생아수의 감소폭이 대졸 이상보다 초졸에서 컸기 때문이다. 2000~2007년 사이 고졸의 평균 출생아수가 다소 증가하고 대졸 이상의 감소 정도가 미미한 반면 초졸이나 중졸과 같은 저학력자의 평균 출생아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의 출산수준을 분석한 김두섭(2007)의 연구에서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진 반면에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변화가 완만했음을 지적한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사실은 한자녀·두자녀·다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두자녀와 다자녀 비율의 감소폭이 대졸 이상보다 초졸에서 컸다(〈표 4-17〉). 여성의 경우, 다자녀 비율이 2000~2007년 사이 대졸 이상에서는 6.5%에서 6.2%로 0.3%p 감소하였으나, 초졸에서는 31.3%에서 17.6%로 14%p 가량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한편, 두자녀 비율은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거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00~2007년 사이 대졸 이상에서는 39.7%에서 36.8%로 2.9%p 감소하였으나, 초졸에서는 35.5%에서 25.3%로 10%p 가량



<표 4-16> 성-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2000-2003-2005-2007년)

(단위: 명)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여성	무학	1.97	2.00	2.00	1.73
	초졸	2.12	2.00	1.92	1.70
	중졸	1.97	1.89	1.79	1.65
	고졸	1.69	1.70	1.71	1.70
	대졸이상	1.53	1.51	1.50	1.51
남성	무학	2.01	2.00	1.94	1.92
	초졸	2.01	1.98	1.96	1.76
	중졸	1.85	1.80	1.79	1.74
	고졸	1.67	1.67	1.68	1.67
	대졸이상	1.59	1.56	1.54	1.5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 년도.

주: 교육수준이 미상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도 이러한 패턴은 유지되어, 다자녀 출산의 감소가 교육수준이 낮은 인구에서 현저하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2000~2007년 사이 두자녀·다자녀 출산 비율이 대졸 이상에서는 약간 감소한 반면에 초·중졸의 학력을 가진 부모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표 4-17> 성-교육수준별 출생아수 구성 비율(2000-2003-2005-2007년)

(단위: %)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여성	무학	40.9	34.7	24.4	41.9	35.7	22.4	44.0	30.7	25.3	57.8	24.2	17.9
	초졸	33.2	35.5	31.3	40.0	34.0	26.0	44.9	31.5	23.6	57.1	25.3	17.6
	중졸	35.5	38.7	25.8	42.0	34.8	23.2	49.7	29.5	20.8	58.3	26.0	15.7
	고졸	43.5	44.6	11.8	43.6	44.0	12.4	44.8	41.5	13.7	47.2	38.8	14.0
	대졸이상	53.9	39.7	6.5	55.6	38.6	5.8	56.9	37.2	5.9	57.0	36.8	6.2
남성	무학	37.0	38.2	24.8	42.3	33.5	24.2	45.1	29.0	25.9	51.2	25.1	23.7
	초졸	35.3	37.9	26.8	40.0	34.2	25.8	42.1	33.3	24.6	51.6	29.6	18.8
	중졸	39.7	39.9	20.4	44.0	37.3	18.7	47.0	34.0	19.0	51.8	30.5	17.8
	고졸	45.4	43.3	11.3	45.9	42.6	11.5	47.0	40.3	12.7	49.0	38.0	13.0
	대졸이상	49.6	42.0	8.3	52.4	40.3	7.3	54.6	38.2	7.1	55.7	37.2	7.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 년도.

3.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차별 출산력

전체 분석 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본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취업자의 평균 출생아수가 실업자에 비해 많았으며(<표 4-18>), 이러한 경향은 연령을 통제한 이후에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4-19>). 하지만 취업자와 비경활인구의 평균출생아수는 복잡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취업자가 비경활인구보다, 남성은 비경활인구가 취업자보다 평균 출생아수가 많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현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표 4-18> 성-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단위: 명)

구분	여성		남성	
	인구수	평균 출생아수	인구수	평균 출생아수
취업	411,368	1.93	712,851	1.88
실업	11,905	1.61	16,015	1.83
비경활	495,944	1.88	57,931	1.9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표 4-19> 성-연령대-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단위: 명)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여성	취업	0.62	1.42	1.88	1.98	2.07	2.42	2.86
	실업	0.30	0.91	1.57	1.69	1.81	2.04	2.30
	비경활	1.10	1.62	1.91	1.95	1.98	2.23	2.53
남성	취업	0.68	1.23	1.76	1.96	2.00	2.15	2.51
	실업	0.67	1.17	1.61	1.85	1.89	2.02	2.30
	비경활	0.55	1.09	1.61	1.83	1.87	2.05	2.3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여성의 경우 주 출산 연령층인 40세 미만 집단에서는 비경활인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많았으나, 4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취업자의 평균 출생아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령층에서 미취업 여성의 출생아수가 취업 여성의 출생아수보다 많다는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경제활동상태별로 한자녀·두자녀·다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을 모의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봐도, 연령대별로 차별적인 현상이 관찰된다(<표 4-20>). 30대에서는 비경활인구가 취업자에 비해 한자녀 비율이 낮고 다자녀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에서는 취업자가 비경활인구에 비해 한자녀 비율이 낮고 다자녀 비율이 높다.

남성의 경우, 연령을 통제하기 전에는 비경활인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취업자에 비해 많았으나 연령을 통제한 이후에는 취업자의 평균 출생아수가 비경활인구보다 일관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본 결과, 50~54세와 55~59세가 비경활인구에서는 각각 21.3%, 33.8%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취업자에서는 각각 14.3%, 10.4%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1>). 비경활인구의 경우 출생아수가 많은 고연령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이 연령대가 과대 대표됨으로써 비경활인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취업자에 비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평균의 함정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사례로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력을 연령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분석할 경우 사실과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경활인구나 실업자에 비해 취업자의 평균 출생아수가 많은 경향이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일관되게, 여성의 경우 연령대 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출산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나라도 다른 산업 사회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과거의 경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0> 모의 연령대-경제활동상태별 출생아수 구성 비율(2005년)

(단위: %)

구분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취업	37.8	55.6	6.6	17.6	69.1	13.3	15.1	68.9	16.0	14.5	63.8	21.7
실업	40.1	55.5	4.4	24.6	65.9	9.5	24.3	67.9	7.8	23.3	63.7	13.0
비경활	32.4	59.5	8.1	17.0	69.0	14.0	15.8	69.6	14.6	16.2	66.6	17.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표 4-21〉 성-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 분포(2005년)

(단위: 명, %)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계	
여성	취업	22,307	51,741	76,043	92,700	88,307	54,945	22,985	411,368
		5.4	12.6	18.5	22.5	21.5	13.4	5.6	100.0
	실업	694	1,188	2,043	2,495	2,727	1,742	857	11,905
		5.8	10.0	17.2	21.0	22.9	14.6	7.2	100.0
	비경활	38,671	91,505	92,792	86,919	86,451	63,268	30,970	495,944
		7.8	18.5	18.7	17.5	17.4	12.8	6.2	100.0
남성	취업	23,756	92,832	131,344	146,285	140,634	101,825	74,078	712,235
		3.3	13.0	18.4	20.5	19.7	14.3	10.4	100.0
	실업	466	1,523	2,096	2,837	3,333	2,890	2,801	15,995
		2.9	9.5	13.1	17.7	20.8	18.1	17.5	100.0
	비경활	1,193	3,071	4,422	6,741	10,235	12,263	19,480	57,591
		2.1	5.3	7.7	11.7	17.8	21.3	33.8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4. 직업에 따른 차별 출산력

가. 장기 동향 및 완결 출산력

직업별 차별 출산력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농림어업직의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직업군은 여성은 관리·전문직, 남성은 사무직이었다(〈표 4-22〉). 이러한 경향은 연령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단, 완결 출산력을 보여주는 40~44세, 45~49세 집단의 경우 농림어업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 사이의 차이는 미미한 편이었다(〈표 4-23〉). 이러한 결과는 관리·전문직처럼 직업 위세가 높은 직업군의 혼인 연령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고(〈표 4-24〉), 따라서 이 직업군에서 출산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지만, 생애 동안 낳는 총출생아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농림어업직의 평균 출생아수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많기는 하지만 농림어업직과 다른 직업군과의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 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59세 20년간 분석 대상 집단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장 급격하게 평균 출생아수가 감소한 집단이 농림어업직이기 때문이다. 농림어업직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가 55~59세 3.44명에서 40~44세 2.33명으로 1.11명 감소하였



는데, 이 직업군 이외에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기능·노무직의 감소폭인 0.69명에 비해 그 감소폭이 큼을 알 수 있다.

〈표 4-22〉 성-직업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단위: 명)

구분	여성	남성
관리·전문직	1.56	1.77
사무직	1.58	1.72
서비스·판매직	1.96	1.85
농림어업직	2.73	2.56
기능·노무직	2.03	1.89
학생·가사·무직	1.87	1.9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주: 관리·전문직에는 의회임원·고위관리자·전문직이, 기능·노무직에는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단순노무직이 포함됨.

〈표 4-23〉 성-연령대-직업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단위: 명)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여성	관리·전문직	0.49	1.22	1.77	1.89	1.89	2.03	2.26
	사무직	0.55	1.33	1.82	1.93	1.96	2.13	2.33
	서비스·판매직	0.84	1.57	1.89	1.96	2.01	2.25	2.57
	농림어업직	1.58	2.08	2.30	2.33	2.53	2.99	3.44
	기능·노무직	0.87	1.67	1.93	1.97	2.03	2.32	2.66
	학생·가사·무직	1.09	1.61	1.90	1.94	1.98	2.23	2.52
남성	관리·전문직	0.52	1.10	1.71	1.95	1.98	2.05	2.28
	사무직	0.58	1.15	1.71	1.94	1.98	2.06	2.31
	서비스·판매직	0.69	1.26	1.77	1.96	1.98	2.09	2.36
	농림어업직	1.09	1.64	1.98	2.18	2.29	2.58	3.07
	기능·노무직	0.82	1.38	1.81	1.95	1.97	2.09	2.38
	학생·가사·무직	0.58	1.11	1.61	1.83	1.88	2.04	2.3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주: 관리·전문직에는 의회임원·고위관리자·전문직이, 기능·노무직에는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단순노무직이 포함됨.

〈표 4-24〉 직업별 평균 혼인 연령(2005년)

(단위: 세)

구분	평균 혼인 연령
관리·전문직	26.0
사무직	25.2
서비스·판매직	24.1
농림어업직	22.6
기능·노무직	23.7
학생·가사·무직	24.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주: 관리·전문직에는 의회임원·고위관리자·전문직이, 기능·노무직에는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단순노무직이 포함됨.

직업별로 한자녀·두자녀·다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을 모의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본 결과, 농림어업직의 다자녀 비율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표 4-25〉). 한편, 한자녀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이 30대에는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인 반면 40대에서는 관리·전문직과 학생·가사·무직으로 나타나 연령대 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농림어업직을 제외하면, 직업군별로 한자녀·두자녀·다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줄어들었다.

〈표 4-25〉 모의 연령대-직업별 출생아수 구성 비율(2005년)

(단위: %)

구분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관리·전문직	48.7	48.3	3.0	22.7	68.3	9.0	17.6	71.2	11.1	18.4	70.0	11.6
사무직	42.8	52.8	4.4	19.1	71.0	9.8	15.1	72.3	12.6	16.3	69.2	14.5
서비스·판매직	30.4	61.2	8.4	16.5	69.9	13.6	15.5	69.2	15.3	15.5	66.2	18.3
농림어업직	13.0	56.7	30.3	8.9	51.9	39.2	8.1	55.3	36.6	6.5	47.8	45.7
기능·노무직	24.6	66.0	9.4	14.3	71.1	14.6	15.1	69.9	15.0	15.3	65.1	19.6
학생·가사·무직	32.5	59.5	8.1	17.2	68.9	13.9	16.0	69.6	14.4	16.5	66.5	17.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주: 관리·전문직에는 의회임원·고위관리자·전문직이, 기능·노무직에는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단순노무직이 포함됨.



나. 최근 동향

농림어업직에서 높은 출산율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인구동향조사 자료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보여준다. 비록 평균 출생아수가 많기는 하나, 2000~2007년 사이에 이 직업군의 평균 출생아수 감소폭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26>).

<표 4-26> 성-직업별 평균 출생아수(2000·2003·2005·2007년)

(단위: 명)

구분	여성				남성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관리·전문직	1.50	1.44	1.42	1.42	1.63	1.58	1.57	1.55
사무직	1.42	1.40	1.39	1.39	1.60	1.57	1.55	1.54
서비스·판매직	1.69	1.56	1.54	1.51	1.69	1.66	1.66	1.64
농림어업직	2.22	2.19	2.08	1.95	1.98	1.93	1.94	1.84
기능·노무직	1.48	1.46	1.43	1.38	1.69	1.68	1.67	1.65
학생·가사·무직	1.66	1.65	1.64	1.63	1.53	1.52	1.55	1.5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 년도.

주: 관리·전문직에는 의회임원·고위관리자·전문직이, 기능·노무직에는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단순노무직이 포함됨.

<표 4-27> 성-직업별 출생아수 구성 비율(2000·2003·2005·2007년)

(단위: %)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여성	관리·전문직	56.6	37.3	6.1	61.7	33.4	4.9	63.5	32.2	4.4	63.7	31.6	4.7
	사무직	62.1	33.9	4.0	64.3	32.2	3.5	65.5	31.0	3.6	65.7	30.5	3.8
	서비스·판매직	47.5	38.4	14.1	55.7	34.6	9.7	57.2	33.3	9.6	60.0	31.4	8.6
	농림어업직	28.9	34.9	36.2	29.6	35.5	35.0	35.4	31.5	33.1	43.0	30.9	26.1
	기능·노무직	60.9	31.1	8.0	62.8	30.1	7.1	64.2	30.0	5.7	68.5	26.5	5.0
	학생·가사·무직	45.6	43.6	10.8	46.7	43.0	10.3	48.4	40.9	10.7	50.0	39.3	10.7
남성	관리·전문직	47.7	42.2	10.1	51.6	39.7	8.7	53.7	37.5	8.8	55.4	36.0	8.6
	사무직	48.9	43.2	7.9	50.6	42.2	7.2	53.2	39.6	7.2	54.7	38.2	7.1
	서비스·판매직	44.3	43.4	12.3	47.0	41.7	11.3	48.1	40.0	11.9	50.3	37.7	12.0
	농림어업직	36.3	37.7	26.0	37.5	38.7	23.8	40.5	33.6	25.9	46.7	31.2	22.1
	기능·노무직	44.3	43.5	12.2	46.1	42.2	11.8	47.8	39.5	12.7	50.5	36.9	12.6
	학생·가사·무직	56.6	35.4	8.1	57.9	33.8	8.3	56.7	34.1	9.2	56.6	33.7	9.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 년도.

주: 관리·전문직에는 의회임원·고위관리자·전문직이, 기능·노무직에는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단순노무직이 포함됨.

한자녀·두자녀·다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다라도 위와 같은 전망이 나타났다(<표 4-27>). 농림어업직의 낮은 한자녀 비율과 높은 다자녀 비율은 2000~2007년간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두자녀와 다자녀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한자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0~2007년 사이 한자녀 비율이 여성은 28.9%에서 43.0%로, 남성은 36.3%에서 46.7%로 증가하였다. 반대로 다자녀 비율은 여성은 36.2%에서 26.1%로 남성은 26.0%에서 22.1%로 각각 감소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 2000년에 한자녀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사무직이었으나, 2000~2007년에 이 직업군의 한자녀 비율이 62.1%에서 65.7%로 증가한 반면 기능·노무직은 60.9%에서 68.5%로 더 크게 증가하였다.

제4절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의 선택과 미혼율의 증가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출산력은 미혼율과 기혼 여성의 출산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혼인과 출산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혼율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하다. 특히 미혼 여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 연구에 의하면 우리 사회 저출산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 집단은 결혼관계 내로 들어가기를 꺼리는 미혼집단이기 때문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¹⁶⁾ 지금까지 출산력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기혼유자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지만(한은주·박정윤, 2006; 김우영, 2007; 권태환, 2008), 여기에서는 미혼 여성·기혼무자녀 여성·기혼유자녀 여성·기혼무자녀 남성·기혼유자녀 남성으로 구분하여 그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¹⁷⁾

1.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출산의 선택

가. 교육수준의 차별성

MacDonald(2000)에 의하면 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여성의 지위는 결혼에 의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여성들 특히 고등 교육을 받은

16)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의 출생아수 감소가 저출산의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본의 사례에 의하면 출산율 저하 현상은 주로 미혼율의 상승에 의해서 발생하였다(한유미·곽혜경, 2004).

17) 본 연구에서 기혼무자녀 여성과 기혼무자녀 남성은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이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로, 아직 출산을 완결하지 않은 여전히 진행 과정 중에 있는 인구를 포함할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 결혼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박수미(2008)에 의하면 최근 젊은이들의 성 평등 의식과 기존의 가족규범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서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결혼을 통해 구성되는 가족은 더 이상 필수적인 일도, 매력적인 유인 요소도 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여성들은 교육과 직업에서의 성취를 위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한다(Park, 2006).

연령대별로 혼인과 출산에 따른 집단별 교육수준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 결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표 4-28>). 미혼 여성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미혼 여성, 기혼무자녀 여성, 기혼유자녀 여성 순으로 대졸 비율이 높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무자녀 여성의 대졸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미혼 여성과 나머지 집단 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미혼 여성의 대졸·대학원졸의 고학력 인구 비율은 기혼무자녀 남성이나 기혼유자녀 남성과 유사하거나 더 높다. 남성의 경우, 40대 이하에서는 무자녀인 경우가 유자녀에 비해 대졸·대학원졸의 고학력자 비율이 더 높지만, 40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유자녀 가구의 고학력자 비율이 더 높다.

<표 4-28> 연령대별 혼인·출산의 선택과 교육수준(2005년)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25~ 29세	초졸	62	0.3	30	0.4	183	0.5	5	0.2	51	0.4
	중졸	186	0.9	82	1.2	664	1.7	28	1.0	251	1.9
	고졸	10,968	55.9	4,394	65.5	30,391	75.9	1,884	67.4	9,800	73.3
	대졸	7,823	39.9	2,039	30.4	8,324	20.8	821	29.4	3,052	22.8
	대학원	578	2.9	163	2.4	481	1.2	59	2.1	211	1.6
	계	19,617	100.0	6,708	100.0	40,043	100.0	2,797	100.0	13,365	100.0
30~ 34세	초졸	75	0.6	81	0.8	593	0.5	25	0.3	195	0.3
	중졸	199	1.7	203	2.1	2,368	1.8	102	1.1	936	1.2
	고졸	6,990	60.5	5,658	58.9	91,168	71.0	4,605	50.6	46,790	61.0
	대졸	3,771	32.7	3,243	33.7	31,810	24.8	3,782	41.6	25,534	33.3
	대학원	510	4.4	429	4.5	2,421	1.9	578	6.4	3,309	4.3
	계	11,545	100.0	9,614	100.0	128,360	100.0	9,092	100.0	76,764	100.0
35~ 39세	초졸	86	1.3	170	2.9	2,262	1.4	71	1.2	649	0.5
	중졸	263	4.0	416	7.1	8,205	5.0	210	3.4	2,776	2.2
	고졸	3,932	60.5	3,747	64.2	113,310	69.2	3,342	54.3	72,733	56.4
	대졸	1,932	29.7	1,327	22.7	37,188	22.7	2,194	35.7	47,167	36.6
	대학원	289	4.4	173	3.0	2,713	1.7	333	5.4	5,543	4.3
	계	6,502	100.0	5,833	100.0	163,678	100.0	6,150	100.0	128,868	100.0

40~ 44세	초졸	163	4.2	445	8.9	9,640	5.5	266	6.2	3,257	2.2
	중졸	348	9.1	886	17.7	24,945	14.1	503	11.7	9,128	6.1
	고졸	2,041	53.1	2,930	58.4	110,004	62.3	2,420	56.1	83,040	55.1
	대졸	1,089	28.4	671	13.4	29,799	16.9	973	22.6	49,139	32.6
	대학원	200	5.2	84	1.7	2,291	1.3	148	3.4	6,211	4.1
	계	3,841	100.0	5,016	100.0	176,679	100.0	4,310	100.0	150,775	100.0
45~ 49세	초졸	245	8.8	809	17.4	25,290	14.6	497	13.6	9,414	6.3
	중졸	376	13.4	1,126	24.2	41,981	24.3	656	17.9	19,783	13.2
	고졸	1,430	51.1	2,184	47.0	86,894	50.3	1,870	51.1	80,125	53.3
	대졸	580	20.7	462	9.9	16,934	9.8	555	15.2	35,341	23.5
	대학원	167	6.0	68	1.5	1,554	0.9	85	2.3	5,593	3.7
	계	2,798	100.0	4,649	100.0	172,653	100.0	3,663	100.0	150,256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주: 무자녀가구는 혼인 기간 2년 이상의 기혼자(혼인·이혼·사별) 중에서 출생아수가 0인 경우임.

나. 경제활동상태의 차별성

연령대별로 혼인·출산의 선택과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미혼 여성의 취업률은 남성에 비해 낮은 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다른 여성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인다(<표 4-29>). 미혼 여성과 기혼유자녀 여성의 취업률은 각각 25~29세 78.3%·25.7%, 30~34세 76.7%·33.8%, 35~39세 71.4%·44.3%로, 주 출산 연령대인 25~34세에서 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산·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의 유무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각 세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4-13]). 전체적으로는 M자형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는 가운데,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25세부터 50세 이전까지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되는데 반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는 20대 이후 40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가 없는 여성은 자녀가 있는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주 출산 연령대인 25~34세에서 그 차이가 크다.¹⁸⁾ 주 출산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하게 낮아짐에 따라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형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이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최형재, 2008).

18) 기존 연구에 의하면 6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은 자녀의 존재 유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현숙, 2005).

기혼유자녀 여성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기혼 무자녀에 비해서도 높아진다.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취업률의 증가는 비경활인구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비경활 여성이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의 부족으로 취업을 원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기존의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여성의 노동 시장에서의 참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양승주, 1990; 김지경, 2004; 원숙연, 2005; 장지연, 2005).¹⁹⁾

〈표 4-29〉 연령대별 혼인·출산의 선택과 경제활동상태(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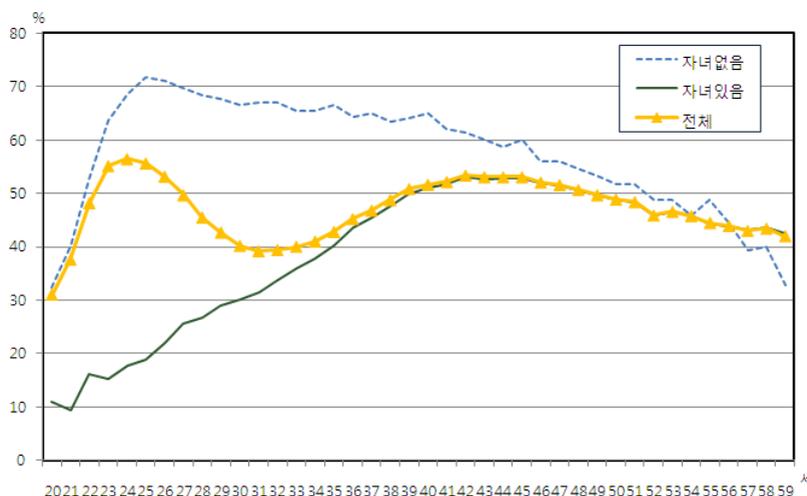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25~ 29세	취업	15,358	78.3	3,549	52.9	10,294	25.7	2,559	91.5	12,594	94.2
	실업	826	4.2	192	2.9	142	0.4	63	2.3	238	1.8
	비경활	3,433	17.5	2,967	44.2	29,607	73.9	175	6.3	533	4.0
	계	19,617	100.0	6,708	100.0	40,043	100.0	2,797	100.0	13,365	100.0
30~ 34세	취업	8,859	76.7	5,032	52.3	43,369	33.8	8,427	92.7	73,432	95.7
	실업	577	5.0	334	3.5	656	0.5	188	2.1	1,154	1.5
	비경활	2,109	18.3	4,248	44.2	84,335	65.7	477	5.2	2,178	2.8
	계	11,545	100.0	9,614	100.0	128,360	100.0	9,092	100.0	76,764	100.0
35~ 39세	취업	4,644	71.4	2,932	50.3	72,523	44.3	5,586	90.8	123,097	95.5
	실업	404	6.2	261	4.5	1,733	1.1	158	2.6	1,882	1.5
	비경활	1,454	22.4	2,640	45.3	89,422	54.6	406	6.6	3,889	3.0
	계	6,502	100.0	5,833	100.0	163,678	100.0	6,150	100.0	128,868	100.0
40~ 44세	취업	2,623	68.3	2,456	49.0	90,046	51.0	3,747	86.9	141,833	94.1
	실업	222	5.8	192	3.8	2,291	1.3	136	3.2	2,681	1.8
	비경활	996	25.9	2,368	47.2	84,342	47.7	427	9.9	6,261	4.2
	계	3,841	100.0	5,016	100.0	176,679	100.0	4,310	100.0	150,775	100.0
45~ 49세	취업	1,726	61.7	2,159	46.4	86,059	49.8	3,028	82.7	137,361	91.4
	실업	154	5.5	151	3.2	2,571	1.5	131	3.6	3,185	2.1
	비경활	918	32.8	2,339	50.3	84,023	48.7	504	13.8	9,710	6.5
	계	2,798	100.0	4,649	100.0	172,653	100.0	3,663	100.0	150,256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주: 무자녀가구는 혼인 기간 2년 이상의 기혼자(혼인·이혼·사별) 중에서 출생아수가 0인 경우임.

19) 취학 이전 자녀는 취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나이가 많은 자녀들은 기혼 여성의 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Budig, 200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분석 대상 집단, 2005.

[그림 4-13]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의 각 세별 경제활동참가율

최근 세대의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전후에 상대적으로 과거 세대의 여성보다는 취업률이 높지만 아직도 결혼과 출산 직후 상당수가 직업을 그만둔다(김우영, 2003). 결혼과 출산은 노동 시장에서 경력단절의 기제로 작용하여 여성의 기회비용 증가를 야기한다. 결혼과 출산에 의한 노동 시장의 단절과 재진입에 따른 임금 소득의 상대적 감소 경향 증가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으로의 유인을 감소시켜 여성의 미혼율 증가 및 취업여성의 출산 기피를 야기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둘 다 우리나라보다 높다. 즉 다른 선진국들이 자국의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활동과 출산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가는 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은 아직도 일이나 자녀나 하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장지연, 2005).

다. 직업의 차별성

연령대별로 혼인·출산의 선택과 직업을 살펴보면, 미혼 여성, 기혼무자녀 여성, 기혼유자녀 여성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직업군은 차별적이었다(<표 4-30>). 미혼 여성은 기혼 여성에 비해 학생·가사·무직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으며, 미혼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관리·전문직과 사무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혼유자녀 여성과 그 차이가 큰데, 30~34세 여성의 경우 관리·전문직과 사무직 비율이 미혼 여성의 경우 각각 27.4%, 21.7%인데 비해 기혼유자녀 여성은 9.7%, 9.4%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기혼유자녀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상당수가 서비스·판매직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유자녀 여성

의 연령에 따른 서비스·판매직 비율을 보면, 25~29세 5.7%, 35~39세 15.2%, 45~49세 20.4%이었다. 미혼 여성과 기혼무자녀 여성의 경우에도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직과 사무직의 비율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판매직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표 4-30〉 연령대별 혼인·출산의 선택과 직업(2005년)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25~ 29세	관리·전문직	6,365	32.4	1,254	18.7	3,202	8.0	625	22.3	2,429	18.2
	사무직	4,572	23.3	1,296	19.3	3,445	8.6	526	18.8	2,237	16.7
	서비스·판매직	3,452	17.6	665	9.9	2,284	5.7	436	15.6	1,872	14.0
	농림어업직	9	0.0	23	0.3	304	0.8	12	0.4	183	1.4
	기능·노무직	907	4.6	297	4.4	1,007	2.5	874	31.2	5,247	39.3
	학생·가사·무직	4,304	21.9	3,169	47.2	29,775	74.4	247	8.8	789	5.9
	미상	8	0.0	4	0.1	26	0.1	77	2.8	608	4.5
계	19,617	100.0	6,708	100.0	40,043	100.0	2,797	100.0	13,365	100.0	
30~ 34세	관리·전문직	3,162	27.4	1,865	19.4	12,500	9.7	2,826	31.1	20,060	26.1
	사무직	2,503	21.7	1,513	15.7	12,021	9.4	2,067	22.7	16,194	21.1
	서비스·판매직	2,524	21.9	1,141	11.9	11,864	9.2	1,249	13.7	10,921	14.2
	농림어업직	9	0.1	72	0.7	1,401	1.1	69	0.8	1,009	1.3
	기능·노무직	627	5.4	419	4.4	5,473	4.3	2,072	22.8	23,590	30.7
	학생·가사·무직	2,716	23.5	4,601	47.9	85,074	66.3	704	7.7	3,434	4.5
	미상	4	0.0	3	0.0	27	0.0	105	1.2	1,556	2.0
계	11,545	100.0	9,614	100.0	128,360	100.0	9,092	100.0	76,764	100.0	
35~ 39세	관리·전문직	1,574	24.2	751	12.9	16,503	10.1	1,630	26.5	34,741	27.0
	사무직	1,048	16.1	570	9.8	13,669	8.4	1,101	17.9	26,075	20.2
	서비스·판매직	1,527	23.5	980	16.8	24,832	15.2	852	13.9	18,869	14.6
	농림어업직	9	0.1	131	2.2	3,645	2.2	168	2.7	2,807	2.2
	기능·노무직	465	7.2	491	8.4	13,684	8.4	1,796	29.2	39,281	30.5
	학생·가사·무직	1,876	28.9	2,910	49.9	91,327	55.8	579	9.4	5,976	4.6
	미상	3	0.0	0	0.0	18	0.0	24	0.4	1,119	0.9
계	6,502	100.0	5,833	100.0	163,678	100.0	6,150	100.0	128,868	100.0	
40~ 44세	관리·전문직	874	22.8	406	8.1	14,676	8.3	790	18.3	38,446	25.5
	사무직	449	11.7	307	6.1	11,186	6.3	487	11.3	24,846	16.5
	서비스·판매직	966	25.1	992	19.8	35,390	20.0	564	13.1	21,160	14.0
	농림어업직	26	0.7	206	4.1	7,819	4.4	253	5.9	6,433	4.3
	기능·노무직	296	7.7	534	10.6	20,761	11.8	1,627	37.7	49,582	32.9
	학생·가사·무직	1,229	32.0	2,570	51.2	86,833	49.1	580	13.5	9,240	6.1
	미상	1	0.0	1	0.0	14	0.0	9	0.2	1,068	0.7
계	3,841	100.0	5,016	100.0	176,679	100.0	4,310	100.0	150,775	100.0	
45~ 49세	관리·전문직	571	20.4	263	5.7	8,961	5.2	576	15.7	34,038	22.7
	사무직	250	8.9	176	3.8	7,515	4.4	284	7.8	18,961	12.6
	서비스·판매직	630	22.5	929	20.0	35,241	20.4	466	12.7	20,686	13.8
	농림어업직	32	1.1	231	5.0	12,873	7.5	312	8.5	11,495	7.7
	기능·노무직	230	8.2	550	11.8	21,266	12.3	1,367	37.3	51,125	34.0
	학생·가사·무직	1,082	38.7	2,499	53.8	86,785	50.3	645	17.6	13,221	8.8
	미상	3	0.1	1	0.0	12	0.0	13	0.4	730	0.5
계	2,798	100.0	4,649	100.0	172,653	100.0	3,663	100.0	150,256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주 1: 무자녀가구는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인 기혼자(혼인·이혼·사별) 중에서 출생아수가 0인 경우임

주 2: 관리·전문직에는 국회의원·고위관리자·전문직이, 기능·노무직에는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단순노무직이, 미상에는 군인이 포함됨.

2.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별화와 미혼·비혼 여성의 증가

가. 혼인·출산의 선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별화

우리나라의 여성은 교육수준은 높지만 고학력 여성의 고용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 위이다(손승영, 2005).²⁰⁾ 이러한 여성의 이중적인 지위는 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의 차이에서 잘 나타난다(<표 4-31>). 남성의 교육수준별 고용률은 초졸 81.3%, 중졸 84.3%, 고졸 90.8%, 대졸 94.2%, 대학원졸 95.8%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고 비경활 비율과 실업률은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별 고용률은 초졸 57.4%, 중졸 51.0%, 고졸 42.9%, 대졸 46.2%, 대학원졸 63.5%로 교육수준이 경제활동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4-31> 성-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2005년)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초졸	취업	56,145	57.4	42,737	81.3
	실업	1,499	1.5	1,441	2.7
	비경활	40,251	41.1	8,366	15.9
	계	97,895	100.0	52,544	100.0
중졸	취업	66,820	51.0	66,948	84.3
	실업	2,476	1.9	2,327	2.9
	비경활	61,700	47.1	10,172	12.8
	계	130,996	100.0	79,447	100.0
고졸	취업	244,113	42.9	375,553	90.8
	실업	9,192	1.6	9,225	2.2
	비경활	315,928	55.5	28,900	7.0
	계	569,233	100.0	413,678	100.0
대졸	취업	79,197	46.2	199,866	94.2
	실업	1,626	0.9	2,822	1.3
	비경활	90,706	52.9	9,495	4.5
	계	171,529	100.0	212,183	100.0
대학원졸 이상	취업	8,957	63.5	27,952	95.8
	실업	102	0.7	212	0.7
	비경활	5,053	35.8	1,025	3.5
	계	14,112	100.0	29,189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20)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그리스에 비해서도 낮다(부록 2 참조).

경제활동상태나 직업에 있어서 남녀 차가 심할 뿐 아니라 여성 간에도 결혼과 자녀 출산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혼 여성 집단은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전문직 비율 등에서 다른 집단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혼과 자녀의 출산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뚜렷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그들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는 순간 어렵게 성취해온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²¹⁾ 여성이 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은 자발적인 비혼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거나 자녀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는 것일 수 있다.

여성의 직업적 경력 추구가 결혼이나 출산과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출산 수준은 낮아진다(Mason, 1997). 여성의 교육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젊은 여성들은 직업에 대한 높은 몰입을 보이고 있어, 이들이 과거 세대처럼 결혼이나 출산을 위해 자신의 직업적 경력을 포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정태연, 2006). 이로 인하여 자녀 양육부담이 가중되고 결혼관과 자녀가치관이 변화하게 되어 결국 미혼율의 증가나 소자녀관의 정착으로 이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한유미·곽혜경, 2004).

나. 보편혼의 감소와 미혼·비혼 여성의 증가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혼인·출산의 선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별화가 여성의 미혼율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후, 미혼율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데, 결혼이 제도나 규범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개인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박민자, 2004). 2008년 사회통계조사를 보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23.6%)’와 ‘하는 것이 좋다(44.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견해도 상당한 비율(27.7%)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32>). 이러한 결혼에 대한 견해는 하위 집단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21.9%)보다 여성(33.3%)이 월등히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1980년 25~29세의 기혼 여성 비율은 85.9%이었으나, 2000년에는 60.3%로, 2005년에는 절반 정도인 40.9%가 되었다(<표 4-33>). 다시 말하면, 2000년 25~29세 여성 중 40%가 미혼이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강화되어 2005년에는 60%가 미혼이었다. 2000~2005년

21) 김보경·김한곤(2005)의 대구지역 4개 대학의 재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출산이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4-32〉 결혼에 대한 견해(2008년)

(단위: %)

구분	계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100	23.6	44.4	27.7	2.4	0.5	1.4	
성	남 성	100	27.4	47.2	21.9	1.8	0.4	1.3
	여 성	100	20.0	41.6	33.3	3.1	0.5	1.5
연령	15~19세	100	14.1	39.5	39.0	2.8	0.6	4.1
	20~29세	100	16.2	45.8	33.8	2.6	0.4	1.3
	30~39세	100	14.3	46.5	34.9	2.8	0.4	1.1
	40~49세	100	18.0	47.3	30.2	2.8	0.6	1.1
	50~59세	100	30.0	46.5	20.0	2.1	0.4	0.9
	60세 이상	100	47.1	37.5	12.0	1.6	0.5	1.3
	65세 이상	100	49.5	35.8	10.9	1.6	0.6	1.5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0	42.9	37.5	15.1	2.1	0.6	1.8
	중 졸	100	23.7	42.9	26.9	3.1	0.5	2.9
	고 졸	100	19.0	45.5	31.0	2.7	0.5	1.3
	대졸이상	100	19.4	47.3	30.5	1.9	0.3	0.6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8.

주: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표 4-33〉 기혼 여성 비율의 변화(1980~200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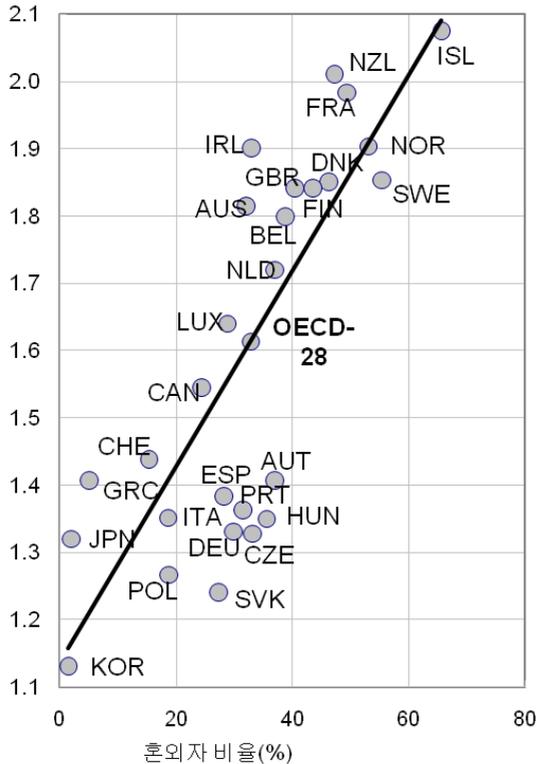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15~49세	63.5	63.7	63.6	65.3	66.0	63.1
15~19세	1.8	0.9	0.5	0.8	0.8	0.4
20~24세	33.9	27.9	19.5	16.7	11.3	6.3
25~29세	85.9	81.6	77.9	70.4	60.3	40.9
30~34세	97.3	95.7	94.7	93.3	89.5	81.0
35~39세	99.0	98.4	97.6	96.7	95.9	92.4
40~44세	99.5	99.3	98.9	98.1	97.6	96.4
45~49세	99.7	99.6	99.4	98.9	98.4	97.6
50~54세	99.8	99.7	99.6	99.4	99.0	98.3
55~59세	99.8	99.8	99.7	99.6	99.4	98.9
60~64세	99.9	99.8	99.8	99.7	99.6	99.2
65~69세	99.9	99.9	99.8	99.8	99.7	99.4
70~74세	99.9	99.9	99.8	99.8	99.8	99.5
75세이상	99.9	99.7	99.8	99.8	99.9	99.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해당 년도.



동안 30~34세의 미혼율은 10.5%에서 19.0%로, 35~39세의 미혼율은 4.1%에서 7.6%로 5년만에 해당 연령대의 미혼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보편혼(universal marriage) 규범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Kwon, 2007). 40세 이후의 출산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20~30대, 특히 30대의 미혼율 급증은 출산율의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미혼율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가상의 분석 대상 집단을 만들고 미혼율의 변화에 따른 합계출산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그 영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합계출산율이 2명인 가상의 분석 대상 집단에서 주출산 연령층인 20~39세 여성의 미혼율이 10%로 증가하면 기혼 여성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합계출산율은 1.8명으로 0.2명 감소하게 된다(부록 3 참조). 이러한 결과는 2000년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대 별 인구 구조에 기반해서 미혼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혼인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기혼 여성의 출산율 조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합계출산율



출처: http://www.oecd.org/document/24/0,3343,en_2649_34637_2671576_1_1_1_1,00.html#data.

[그림 4-14] 국가별 혼외자 비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보편혼의 감소는 서구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경향이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보편혼의 감소가 바로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림 4-14]는 OECD 국가들의 혼외자 비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둘은 정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슬란드·노르웨이·프랑스·스웨덴 등은 혼외자 비율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높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는 혼외자 비율이 1960년 7%에서 2000년 40% 이상으로 스웨덴은 11%에서 55%로 증가하였다(Sleeboos, 2003). 반면에 우리나라는 혼외자 비율과 합계출산율 둘 다 가장 낮다. 2000~2007년 사이에 혼외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그 비율이 0.88~1.58%로 매우 낮은 편이다(<표 4-34>).

<표 4-34> 우리나라 혼외자수 및 비율의 변화(2000~2007년)

(단위: 명, %)

구분	출생아수	혼외자수	비율
2000년	636,780	5,579	0.88
2001년	557,228	5,372	0.96
2002년	494,625	5,234	1.06
2003년	493,471	6,123	1.24
2004년	476,052	6,164	1.29
2005년	438,062	6,492	1.48
2006년	451,514	6,863	1.52
2007년	496,710	7,833	1.58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 년도.

제5절 지역별 차별 출산력의 변화

인구 규모에 따라 지역 유형을 구분했을 때 지역별로 출산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²²⁾ 하지만 차별 출산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도시·농촌과 같은 2~3개의 지역 유형별로 집계한 자료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다 상세한 지역 단위에서 차별 출산력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우선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평균 출생아수를 통해 기혼 여성의 출산율 변화를 지역 유형별로 살펴본 다음 시도·시군구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기혼 여성의 출산율과 함께 미혼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합계출산율을 시군구별로 살펴보았다. 한편 시

22)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 동안 ‘면’부의 농촌여성들은 ‘읍’부의 도시여성보다, ‘읍’부의 도시여성들은 ‘시’부의 도시여성보다 출생아수가 많았다(전광희, 2002).

군구별 차별 출산력의 원인을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1. 기혼 여성의 출산율 변화

가. 지역 유형별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특·광역시인 대도시의 평균 출생아수는 1.83명, 시단위의 중소도시는 1.89명, 군 지역은 2.35명으로 군 지역에서의 출생아수가 대도시에 비해 많으며 이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더더욱 마찬가지로 나타났다(<표 4-35>, <표 4-36>).

<표 4-35> 지역 유형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단위: 명)

구분	평균 출생아수
대도시 지역	1.83
중소도시 지역	1.89
군 지역	2.3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표 4-36> 연령대-지역 유형별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2005년)

(단위: 명)

구분	여성			남성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20~24세	0.6	0.6	0.9	0.5	0.5	0.8
25~29세	0.8	1.0	1.3	0.6	0.7	1.0
30~34세	1.5	1.6	1.8	1.1	1.3	1.5
35~39세	1.8	1.9	2.1	1.7	1.8	1.9
40~44세	1.9	2.0	2.2	1.9	2.0	2.1
45~49세	1.9	2.0	2.4	1.9	2.0	2.2
50~54세	2.2	2.3	2.8	2.0	2.1	2.5
55~59세	2.4	2.7	3.3	2.3	2.5	3.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나. 시도별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본 결과, 광주(2.03명)를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시의 평균 출생아수가 2명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1.75명)·경기(1.77명)·인천(1.81명)의 평균 출생아수가 적었다(그림 4-15). 도 지역 중에서는 경기와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평균 출생아수가 2명 이상이었으며, 이 중 전남(2.38명)과 전북(2.23명)의 평균 출생아수가 많았다. 출산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 45~49세 집단만을 별도로 분석해 보더라도 지역별 평균 출생아수의 많고 적음의 패턴은 유사하였다.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그림 4-15] 시도별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2005년)

시도별 평균 출생아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서울은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적고, 전남은 가장 많다(<표 4-37>). 구체적으로 25~29세의 경우,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에서, 30~34세는 서울·부산·경기에서, 35~39세는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에서, 40~44세는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에서 전국 평균보다 적은 평균 출생아수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도시의 높은 주택 가격은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인데(Sleebos, 200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도시 지역의 낮은 출산율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표 4-37〉 시도-연령대별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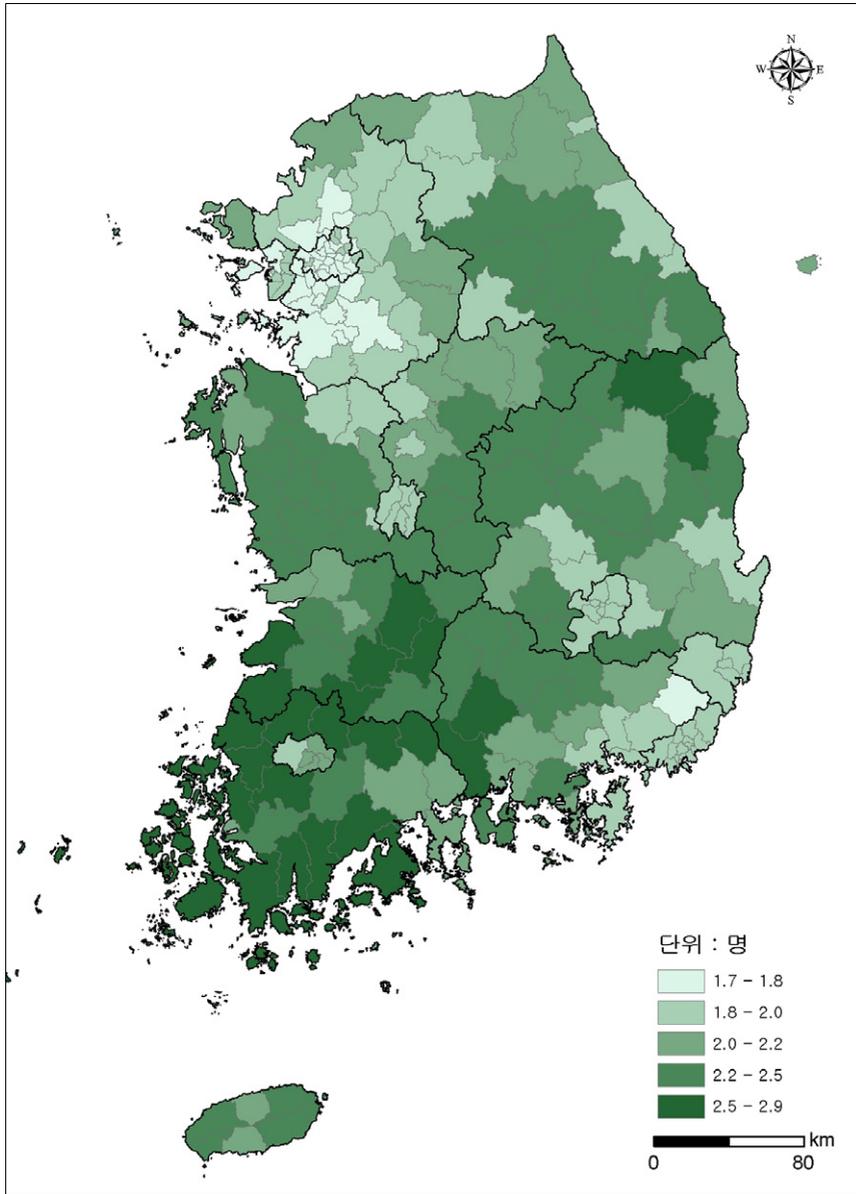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국	0.92	1.54	1.89	1.96
서울	0.70	1.33	1.77	1.87
부산	0.85	1.47	1.83	1.90
대구	0.87	1.55	1.88	1.93
인천	0.91	1.55	1.85	1.89
광주	1.00	1.68	2.03	2.12
대전	0.94	1.55	1.93	2.00
울산	0.95	1.60	1.92	1.93
경기	0.90	1.52	1.86	1.90
강원	1.08	1.65	1.92	2.00
충북	1.08	1.68	1.98	2.02
충남	1.09	1.70	2.02	2.07
전북	1.18	1.78	2.11	2.17
전남	1.26	1.86	2.18	2.29
경북	1.01	1.64	1.93	2.01
경남	0.98	1.65	1.93	1.99
제주	1.00	1.69	2.04	2.1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다. 시군구별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전국 시군구별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4-16). 평균 출생아수는 전남 신안군(2.91)·전북 진안군(2.79)·전남 장흥군(2.79)·전남 진도군(2.78)·전북 순창군(2.76) 순으로 많고, 서울 마포구(1.69)·용산구(1.69), 경기 군포시(1.71), 서울 영등포구(1.72)·성동구(1.73) 순으로 적다.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많은 신안군과 가장 적은 마포구·용산구의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는 1명 이상으로 크다.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그림 4-16] 시군구별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2005년)



〈표 4-38〉 시군구별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상·하위 30개 지역(2005년)

(단위: 명)

순위	상위		하위	
	지역명	평균 출생아수	지역명	평균 출생아수
1	전남 신안군	2.91	서울 마포구	1.69
2	전북 진안군	2.79	서울 용산구	1.69
3	전남 장흥군	2.79	경기 군포시	1.71
4	전남 진도군	2.78	서울 영등포구	1.72
5	전북 순창군	2.76	서울 성동구	1.73
6	전북 장수군	2.75	서울 서대문구	1.74
7	전북 고창군	2.75	서울 관악구	1.74
8	전북 임실군	2.72	경기 오산시	1.74
9	전남 함평군	2.72	경기 고양시	1.74
10	전라 구례군	2.71	서울 서초구	1.74
11	전남 보성군	2.70	경기 시흥시	1.74
12	전남 담양군	2.70	서울 강남구	1.75
13	전남 강진군	2.68	서울 광진구	1.75
14	전남 고흥군	2.66	경기 성남시	1.75
15	전남 완도군	2.63	경기 안산시	1.76
16	전남 영광군	2.62	경기 용인시	1.76
17	전남 곡성군	2.60	서울 강서구	1.77
18	전남 무안군	2.59	서울 송파구	1.77
19	경남 산청군	2.56	경기 광명시	1.77
20	전남 장성군	2.56	서울 동작구	1.77
21	전남 나주시	2.55	인천 중구	1.77
22	전북 부안군	2.55	서울 성북구	1.77
23	경북 영양군	2.54	경기 안양시	1.77
24	전남 해남군	2.53	서울 노원구	1.78
25	경남 하동군	2.53	경기 의정부시	1.78
26	경북 봉화군	2.51	서울 금천구	1.78
27	경북 예천군	2.49	경기 과천시	1.78
28	전남 화순군	2.49	경기 수원시	1.78
29	경남 합천군	2.48	서울 구로구	1.78
30	전북 김제시	2.48	서울 은평구	1.7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평균 출생아수 상·하위 30개 시군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38〉). 평균 출생아수가 상위 30개 지역은 2.48명 이상, 하위 30개 지역은 1.78명 이하로 그 차이가 크다. 상위 지역은 대부분 전라남·북도에 위치하고 있고, 하위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하위 30개 지역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시군구이다.

2. 합계출산율의 변화

가.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0·2003·2005·2007년의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4-17).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도의 급간은 네 개 연도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였으며 상·하위 10개 지역을 <표 4-39>에 제시하였다.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분석에서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00년 1.47명, 2003년 1.19명, 2005년 1.08명, 2007년 1.26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별 출산력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 수준인 2.1명 이상인 경우도 있는 반면, 2003년 이후 모든 하위 10개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합계출산율 상·하위 지역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³⁾

둘째, 전반적으로 군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높고, 도시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낮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종로구, 부산 동구는 2000~2007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 그룹에 포함되었다.

셋째,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은 몇 개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강원 인제군·화천군 등의 휴전선 부근의 지역²⁴⁾과 함께 경남 거제시나 울산 북구 등 산업이 발전한 남해안 지역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역 외에 합계출산율 상위 10개 지역 안에 전라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2007년도에는 합계출산율 상위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전라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도시보다 농촌의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충청·경상·강원 남부 지역 등과 비교해 볼 때 전라 지역은 주목해볼 만하다. 이 지역의 높은 합계출산율은 높은 국제결혼 비율의 영향이라 판단된다(임형백, 2007; 통계청, 2009).

넷째, 2000~2007년 사이 저출산 지역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합계출산율 상·하위 30개 지역의 변화를 2000년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연도별 순위 변동 폭이 상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데 비해 하위 지역은 작다(<표 4-40>, <표 4-41>).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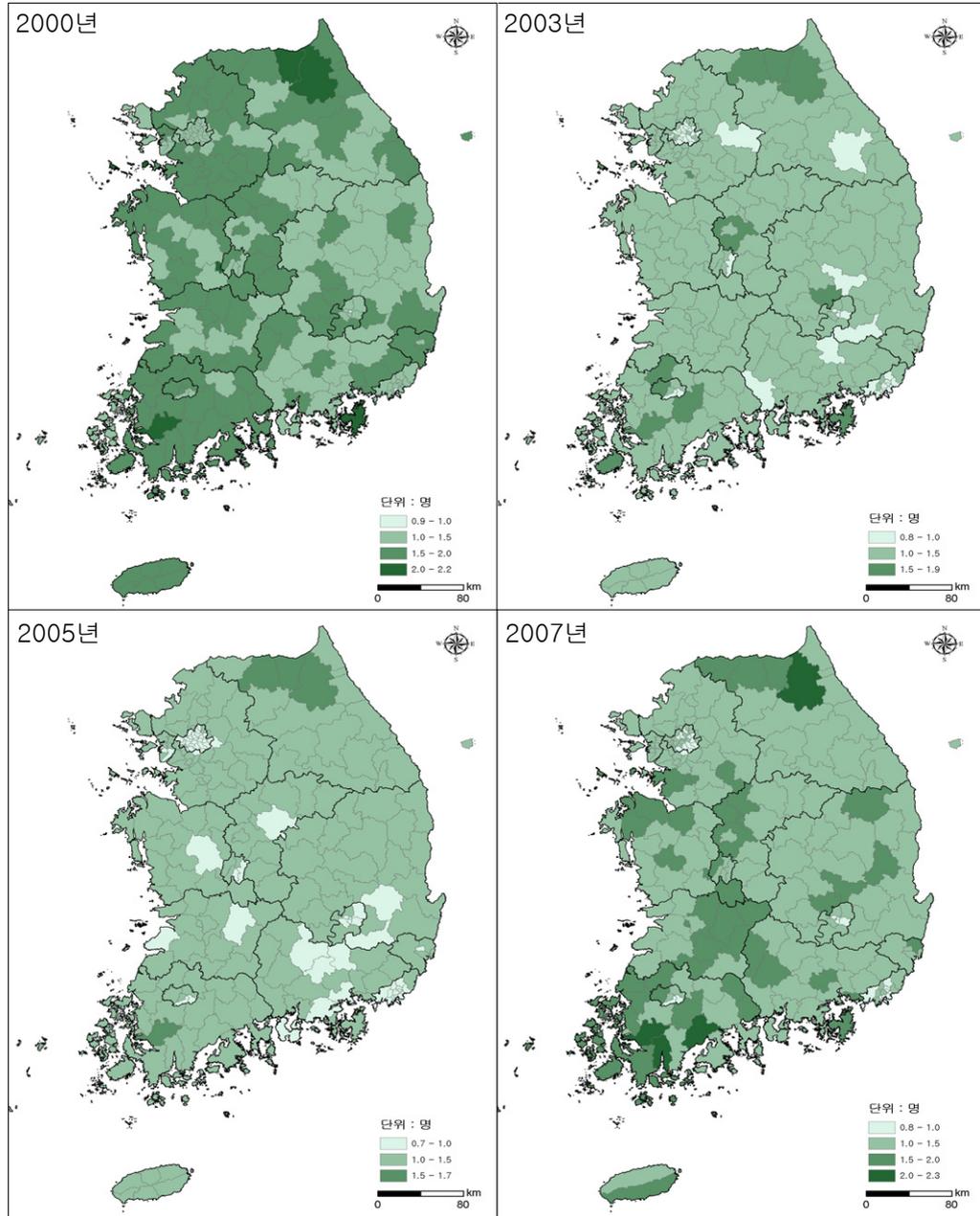
23) 2000년에는 강원 양구군(2.21명), 전남 영암군(2.18명), 인천 옹진군(2.12명)에서, 2007년에는 전남 보성군(2.33명)·강진군(2.26명)·영암군(2.11명)에서 대체출산율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24) 유삼현(2006)은 휴전선 부근 지역의 높은 군인 비중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예측한 바 있으나, 둘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평균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제결혼 비율과 미혼율이 높은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전선 부근의 지역은 미혼율이 낮고, 국제결혼 비율이 높은 지역임이 밝혀졌다.

25) 군지역의 순위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긴 하지만 2000년에 합계출산율 하위 30개 지역에 포함되었던 경북 군위군과 같이 변동폭이 큰 경우는 예외적이다. 군위군의 합계출산율과 하위 순위는 2000년 1.21명(24위), 2003년 0.98명(24위), 2005년 1.47명(222위), 2007년 1.62명(201위)인데, 이는 한 해의 출생아수가 100~200명으로 적어, 합계출산율을 구성하는 분모나 분자의 절대수가 조금만 변화해도 합계출산율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저출산 현상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0년에 하위 30위권에 포함되었던 지역 중 2003년에는 26개,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해당 년도.

[그림 4-17] 시군구별 합계출산율(2000-2003-2005-2007년)

2005년에는 26개, 2007년에는 23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위 지역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강북구·서초구·종로구, 부산 동구·서구·수영구·영도구·중구, 대구 중구 등인데, 특히 서울 강남구와 부산 중구의 경우 2005년과 2007년에 연속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0년에 상위 30위권에 포함되었던 지역 중 2003년에는 16개, 2005년에는 14개, 2007년에는 14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강원 양구군·인제군·화천군, 전남 영암군·화순군, 경남 거제시, 울산 북구는 합계출산율 상위 30개 지역에 지속적으로 포함되는 지역이다.

〈표 4-39〉 합계출산율 상하위 10개 지역(2000-2003-2005-2007년)

(단위: 명)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상위	1	강원 양구군	2.21	전남 영암군	1.90	강원 화천군	1.71	전남 보성군	2.33
	2	전남 영암군	2.18	인천 옹진군	1.84	강원 인제군	1.60	전남 강진군	2.26
	3	인천 옹진군	2.12	강원 양구군	1.83	전남 영암군	1.59	전남 영암군	2.11
	4	강원 인제군	2.08	강원 화천군	1.78	강원 양구군	1.58	강원 인제군	2.07
	5	충남 계룡시	2.07	전남 화순군	1.67	제주남제주군	1.54	강원 화천군	2.00
	6	경남 거제시	2.06	경기 오산시	1.66	울산 북구	1.53	전북 진안군	1.87
	7	전남 광양시	2.04	광주 광산구	1.63	전남 강진군	1.52	전북 무주군	1.84
	8	강원 화천군	1.99	전남 장성군	1.62	경기 화성시	1.52	경남 거제시	1.84
	9	강원 철원군	1.98	경남 거제시	1.61	경남 거제시	1.51	울산 북구	1.82
	10	광주 광산구	1.97	강원 인제군	1.61	충북 증평군	1.50	경기 화성시	1.80
하위	1	대구 중구	0.93	부산 수영구	0.81	부산 중구	0.70	부산 중구	0.84
	2	부산 동구	1.05	서울 강남구	0.82	서울 강남구	0.71	서울 강남구	0.85
	3	서울 강북구	1.07	대구 중구	0.82	대구 중구	0.72	부산 서구	0.86
	4	부산 영도구	1.08	경남 창녕군	0.84	광주 동구	0.72	서울 종로구	0.86
	5	서울 종로구	1.08	서울 서초구	0.87	부산 영도구	0.73	광주 동구	0.87
	6	부산 서구	1.09	경북 청도군	0.88	부산 동구	0.73	부산 영도구	0.87
	7	부산 수영구	1.10	광주 동구	0.88	서울 종로구	0.76	부산 동구	0.88
	8	서울 강남구	1.11	부산 중구	0.88	부산 동래구	0.78	대구 서구	0.89
	9	서울 서초구	1.12	서울 종로구	0.89	부산 금정구	0.79	대구 남구	0.91
	10	서울 중구	1.12	부산 동구	0.89	대구 서구	0.79	부산 금정구	0.94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해당 년도.



〈표 4-40〉 합계출산을 상위 30개 지역의 변화(2000-2003-2005-2007년)

(단위: 명)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강원 양구군	2.21 (1)	1.83 (3)	1.58 (4)	1.69(21)
전남 영암군	2.18 (2)	1.90 (1)	1.59 (3)	2.11 (3)
인천 옹진군	2.12 (3)	1.84 (2)	- (82)	- (37)
강원 인제군	2.08 (4)	1.61(10)	1.60 (2)	2.07 (4)
충남 계룡시	2.07 (5)	- (44)	- (66)	- (41)
경남 거제시	2.06 (6)	1.61 (9)	1.51 (9)	1.84 (8)
전남 광양시	2.04 (7)	- (37)	1.48(12)	1.76(12)
강원 화천군	1.99 (8)	1.78 (4)	1.71 (1)	2.00 (5)
강원 철원군	1.98 (9)	1.51(21)	1.41(22)	- (33)
광주 광산구	1.97(10)	1.63 (7)	1.44(15)	- (35)
경기 이천시	1.93(11)	1.47(28)	- (47)	- (51)
전남 화순군	1.93(12)	1.67 (5)	1.39(26)	1.66(24)
울산 북구	1.92(12)	1.50(23)	1.53 (6)	1.82 (9)
전남 완도군	1.91(14)	- (32)	- (53)	- (45)
경기 시흥시	1.89(15)	1.54(14)	1.38(30)	- (56)
충북 음성군	1.88(16)	- (32)	- (42)	- (47)
충남 서산시	1.87(17)	- (43)	- (42)	1.74(14)
전남 진도군	1.86(18)	1.58(11)	- (72)	1.79(11)
충남 당진군	1.85(19)	- (46)	- (56)	- (36)
전남 영광군	1.85(19)	1.50(24)	- (35)	1.75(13)
경북 구미시	1.84(21)	- (36)	- (55)	- (86)
제주 북제주군	1.84(22)	- (75)	- (50)	-
전남 무안군	1.83(23)	1.50(22)	1.38(29)	1.65(26)
전남 장흥군	1.83(24)	- (65)	1.38(28)	- (60)
전남 해남군	1.83(25)	- (45)	1.42(19)	1.63(30)
경기 연천군	1.82(26)	- (51)	- (39)	- (99)
경남 창원시	1.82(27)	- (56)	- (85)	- (90)
전북 진안군	1.82(28)	- (150)	- (173)	1.87 (6)
전남 나주시	1.81(29)	- (49)	- (71)	- (63)
울산 울주군	1.81(30)	1.48(26)	- (46)	- (5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해당년도.

주 1: 2000년 기준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년도의 순위임.

주 2: 북제주군은 2007년에는 제주시로 통합되어 순위 자료가 없음.

〈표 4-41〉 합계출산율 하위 30개 지역의 변화(2000-2003-2005-2007년)

(단위: 명)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대구 중구	0.93 (1)	0.82 (3)	0.72 (3)	0.97(14)
부산 동구	1.05 (2)	0.89(10)	0.73 (6)	0.88 (7)
서울 강북구	1.07 (3)	0.99(27)	0.85(18)	1.02(23)
부산 영도구	1.08 (4)	0.91(11)	0.73 (5)	0.87 (6)
서울 종로구	1.08 (4)	0.89 (9)	0.76 (7)	0.86 (4)
부산 서구	1.09 (6)	0.91(12)	0.79(10)	0.86 (3)
부산 수영구	1.10 (7)	0.81 (1)	0.85(17)	0.95(12)
서울 강남구	1.11 (8)	0.82 (2)	0.71 (2)	0.85 (2)
서울 서초구	1.12 (9)	0.87 (5)	0.82 (3)	0.95(11)
서울 중구	1.12 (9)	0.92(16)	0.88 (2)	- (31)
서울 동대문구	1.14(11)	0.92(15)	0.87 (9)	1.00(20)
대구 남구	1.14(12)	0.93(17)	0.80(12)	0.91 (9)
부산 중구	1.14(13)	0.88 (8)	0.70 (1)	0.84 (1)
인천 동구	1.14(14)	- (40)	- (46)	- (46)
부산 동래구	1.16(15)	0.91(13)	0.78 (8)	0.96(13)
부산 연제구	1.18(16)	0.99(26)	0.84(15)	0.99(18)
부산 남구	1.19(17)	1.00(29)	0.88(22)	1.00(21)
서울 서대문구	1.20(18)	- (32)	0.89(24)	1.00(22)
서울 성북구	1.20(18)	0.98(22)	- (33)	- (41)
광주 동구	1.20(18)	0.88 (7)	0.72 (4)	0.87 (5)
부산 금정구	1.20(18)	0.95(19)	0.79 (9)	0.94(10)
서울 용산구	1.20(18)	0.94(18)	0.88(21)	1.06(29)
부산 부산진구	1.20(18)	- (34)	0.91(30)	1.06(30)
경북 군위군	1.21(24)	0.98(24)	- (222)	- (201)
서울 마포구	1.22(25)	0.91(14)	0.89(25)	- (36)
서울 중랑구	1.22(26)	0.95(20)	0.91(28)	1.04(25)
대구 서구	1.23(27)	1.00(30)	0.79(10)	0.89 (8)
경북 청도군	1.24(28)	0.88 (6)	0.85(16)	- (66)
서울 관악구	1.24(28)	0.98(21)	0.90(27)	1.00(19)
서울 양천구	1.25(30)	- (43)	- (40)	- (4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해당 년도.

주: 2000년 기준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 년도의 순위임.

나. 시군구별 출산 가구의 자녀수 구성 비율

여기에서는 2000·2003·2005·2007년에 출산이 이루어진 가구 중에서 자녀수가 한 명·두 명·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시군구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시군구별 출산 가구의 자녀수 구성 비율의 차이를 최소값·최대값·평균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표 42). 2000년 이후 다자녀 비율은 대체로 일정한 가운데, 2000·2003·2005·2007년 각각 한자녀 비율은 45.3%·46.6%·49.0%·51.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두자녀 비율은 41.6%·40.4%·38.0%·36.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한자녀 비율이 48% 이상인 지역이 전라 지역과 충청남·북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그림 4-18]~[그림 4-20]). 한편 시군구별 한자녀·두자녀·다자녀 비율 상·하위 10개 지역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43>~<표 4-46>).²⁶⁾ 출산 가구 중 한자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각각 2000년에는 서울 서초구(59.1%)와 전남 완도군(35.9%)이며, 2007년에는 서울 강남구(64.1%)와 전북 장수군(34.8%)이다. 2007년의 경우 한자녀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64.1%)·서울 서초구(62.4%)·대구 중구(62.1%)·서울 마포구(61.7%)·서울 영등포구(61.5%) 순이었다. 서울 강남구·관악구·마포구·서초구는 지속적으로 한자녀 비율이 상위 10개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자녀 비율 상위 10개 지역은 대부분 서울의 자치구들이다. 두자녀 비율은 지속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두자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경기·충북·경상 지역에서의 하락과 관련된다. 반면 다자녀 비율은 시점과 무관하게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자녀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을 보면 대부분 전라 지역이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자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각각 2000년에는 전남 함평군(27.5%)과 서울 강남구(5.9%)이며, 2007년에는 전남 함평군(27.6%)과 경북 울릉군(4.8%)이다. 한자녀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두자녀나 다자녀 비율이 하위 10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마포구·관악구이다. 울릉군의 경우는 2007년에 다자녀 비율은 낮았지만 두자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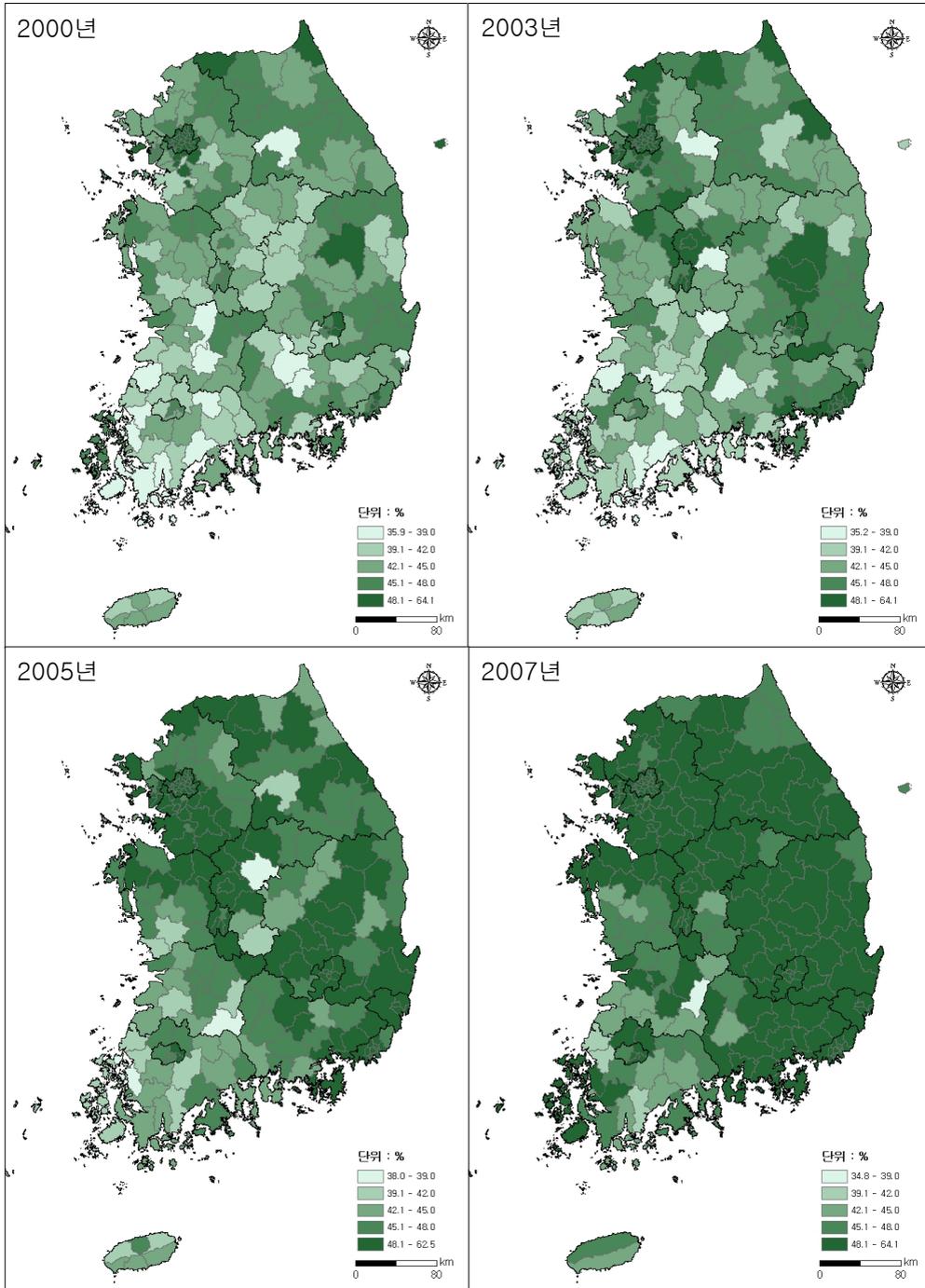
<표 4-42> 시군구별 출산 가구의 자녀수 구성 비율의 차이

(단위: %)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최소값	35.9	32.7	5.9	35.2	29.9	6.6	38.0	26.4	4.7	34.8	27.2	4.8
최대값	59.1	49.6	27.5	59.0	46.4	27.0	62.5	44.2	26.5	64.1	48.2	27.6
평균	45.3	41.6	13.2	46.6	40.4	12.9	49.0	38.0	13.0	51.2	36.5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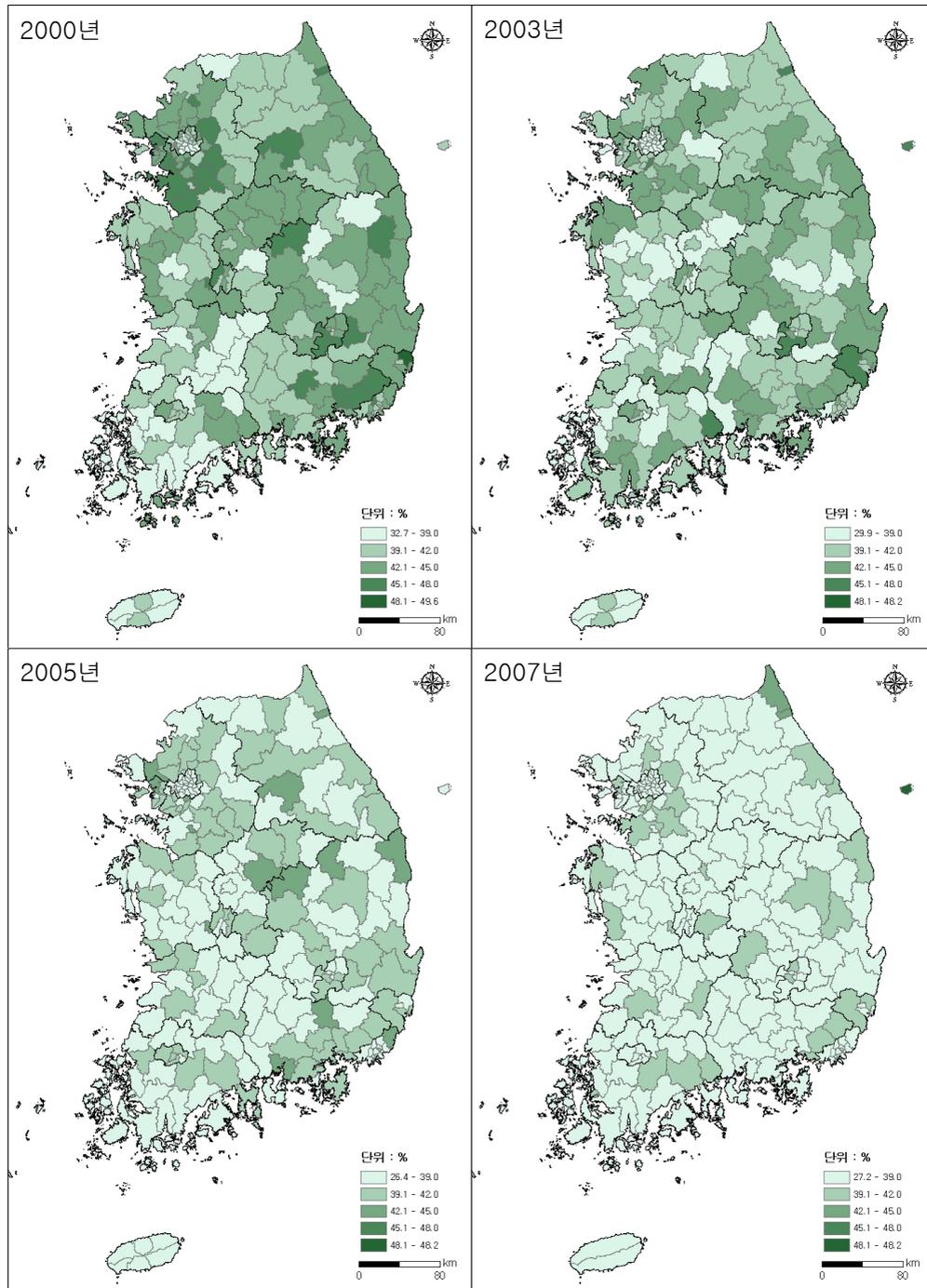
자료: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 년도.

26) 전체 시군구별 결과는 <부록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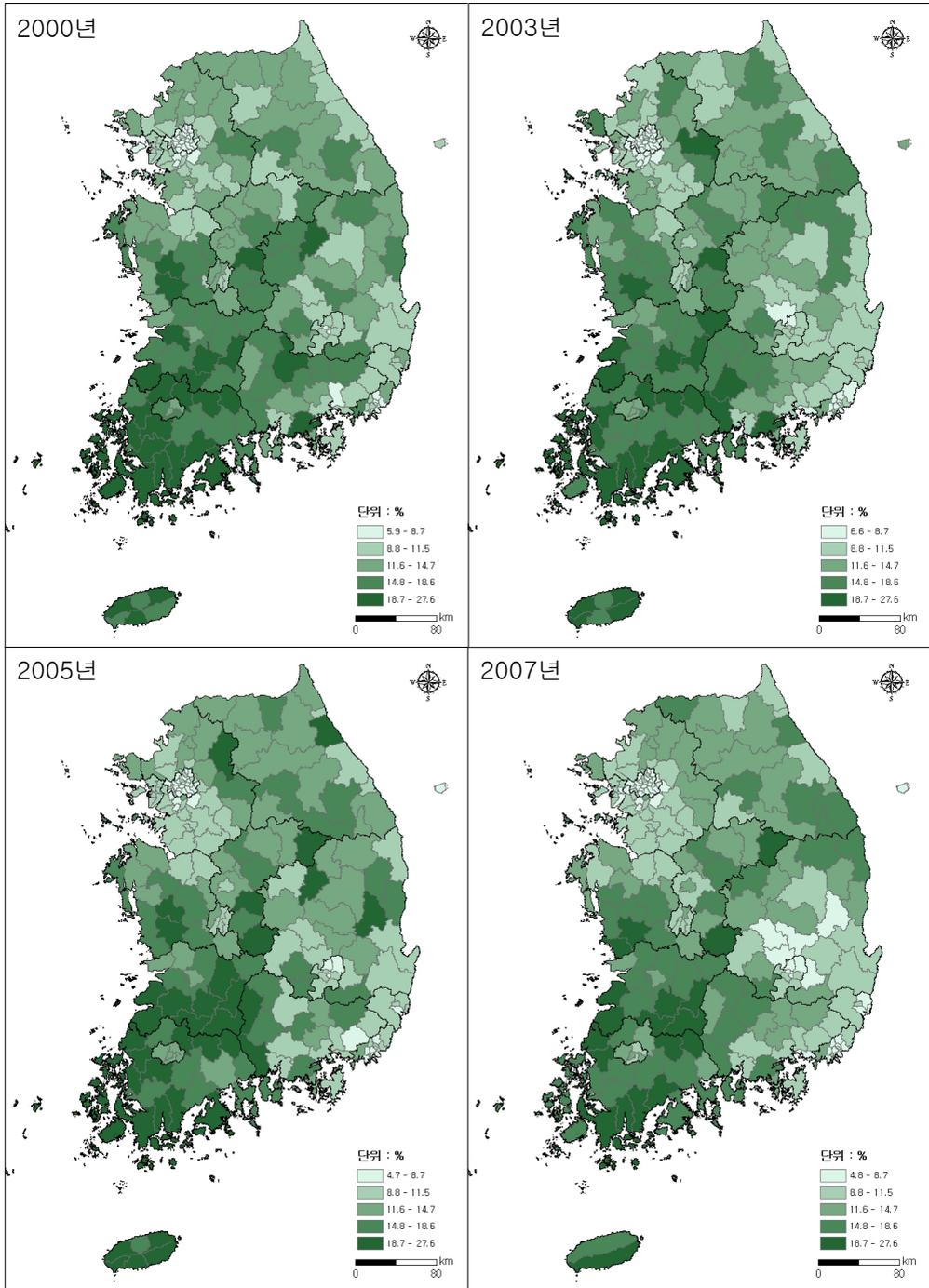
자료: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 년도.

[그림 4-18] 시군구별 출산 가구의 한자녀 비율(2000-2003-2005-2007년)



자료: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 년도.

[그림 4-19] 시군구별 출산 가구의 두자녀 비율(2000-2003-2005-2007년)



자료: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 년도.

[그림 4-20] 시군구별 출산 가구의 다자녀 비율(2000-2003-2005-2007년)

〈표 4-43〉 시군구별 출산 가구의 한자녀·두자녀·다자녀 비율 상·하위 10개 지역(2000년)

(단위: %)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서울 서초구	59.1	전남 완도군	35.9	울산 북구	49.6	전남 구례군	32.7	전남 함평군	27.5	서울 강남구	5.9
서울 강남구	58.5	전남 강진군	36.2	경기 의왕시	47.6	전남 신안군	33.5	전남 구례군	26.8	서울 서초구	6.0
부산 중구	55.6	전남 보성군	36.5	경기 시흥시	47.0	전북 순창군	33.8	전남 장흥군	25.7	서울 노원구	6.6
서울 마포구	55.3	경남 의령군	37.3	대구 달성군	46.7	전남 함평군	33.9	전남 보성군	25.5	서울 서대문구	6.7
서울 관악구	54.2	전남 곡성군	37.5	경기 광주시	46.6	서울 서초구	34.9	전남 진도군	25.4	서울 마포구	6.9
서울 송파구	54.1	전남 진도군	37.7	인천 서구	46.5	전남 장흥군	34.9	전남 강진군	24.8	서울 성동구	7.0
부산 동구	54.1	전북 고창군	38.0	경기 동두천시	46.1	전북 진안군	35.1	전남 무안군	24.7	경기 군포시	7.0
서울 서대문구	54.0	전남 무안군	38.0	경기 남양주시	46.0	서울 강남구	35.6	전북 임실군	23.7	서울 관악구	7.2
서울 용산구	53.6	경남 함천군	38.1	충남 계룡시	45.9	경북 예천군	35.8	전북 고창군	23.6	서울 중구	7.4
서울 중구	53.6	전남 해남군	38.1	경남 양산시	45.9	전남 담양군	36.0	전북 순창군	23.5	서울 용산구	7.4
-	-	-	-	-	-	충남 청양군	36.0	-	-	대구 남구	7.4

자료: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00.

〈표 4-44〉 시군구별 출산 가구의 한자녀·두자녀·다자녀비율 상·하위 10개 지역(2003년)
(단위: %)

상위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하위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상위
서울 강남구	전남 보성군	경북 울릉군	부산 강서구	전북 임실군	서울 영등포구	6.6
서울 중구	전북 고창군	울산 울주군	전남 함평군	전남 신안군	부산 부산진구	6.9
서울 마포구	전북 무주군	대구 달성군	서울 중구	전북 고창군	서울 성동구	6.9
서울 관악구	충북 보은군	강원 속초시	전북 임실군	경기 양평군	서울 동작구	6.9
서울 광진구	전남 장흥군	경기 의왕시	서울 강남구	전북 장수군	서울 송파구	7.1
서울 영등포구	전남 곡성군	전남 광양시	전남 신안군	전북 부안군	서울 서초구	7.2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경기 김포시	충북 증평군	전남 곡성군	서울 강서구	7.2
서울 동작구	전남 완도군	경기 남양주시	서울 종로구	전남 무안군	경기 군포시	7.3
부산 강서구	경남 산청군	충남 서산시	서울 관악구	전남 담양군	서울 노원구	7.3
서울 송파구	전북 순창군	경북 김천시	서울 마포구	전남 보성군	서울 광진구	7.3
-	-	-	-	-	서울 강남구	7.3
-	-	-	-	-	서울 구로구	7.3

자료: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03.

〈표 4-45〉 시군구별 출산 가구의 한자녀·두자녀·다자녀 비율 상·하위 10개 지역(2005년)
(단위: %)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상위			
경북 울릉군	62.5	전북 남원시	38.0	경남 창원군	44.2	충북 보은군	26.4	전남 진도군	26.5	경북 울릉군	4.7
서울 강남구	62.4	전남 무안군	38.8	충북 괴산군	44.1	전북 진안군	29.4	전남 신안군	24.7	서울 서초구	5.7
서울 서초구	62.1	충북 괴산군	39.0	경기 김포시	44.0	서울 강남구	30.5	충북 보은군	24.4	서울 성동구	5.8
서울 마포구	60.9	충남 부여군	39.3	경북 울진군	43.9	전북 임실군	30.6	전남 무안군	24.4	부산 수영구	5.9
서울 관악구	60.4	전북 정읍시	39.4	부산 중구	43.2	서울 서초구	32.2	전북 장수군	23.9	서울 마포구	6.4
서울 성동구	60.0	전남 진도군	39.7	경북 문경시	43.1	서울 관악구	32.3	전북 진안군	23.9	서울 중구	6.5
서울 영등포구	59.7	전남 장흥군	39.7	경기 오산시	43.0	충남 예산군	32.4	충남 청양군	23.8	서울 영등포구	6.5
서울 동작구	59.6	전남 함평군	39.8	부산 기장군	42.9	광주 동구	32.5	전남 영광군	23.4	서울 용산구	6.6
서울 구로구	58.7	전남 신안군	40.4	강원 속초시	42.8	충남 청양군	32.7	전북 고창군	23.0	경기 군포시	6.6
대구 남구	58.3	강원 횡성군	40.7	경기 과천시	42.8	서울 마포구	32.8	전남 장흥군	22.6	서울 동작구	6.8
-	-	-	-	-	-	경북 청도군	32.8	제주 북제주군	22.6	-	-
-	-	-	-	-	-	경북 울릉군	32.8	-	-	-	-

자료: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05.

〈표 4-46〉 시군구별 출산 가구의 한자녀·두자녀·다자녀 비율 상·하위 10개 지역(2007년)
(단위: %)

상위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하위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상위					
서울 강남구	64.1	전북 장수군	34.8	경북 울릉군	48.2	전북 임실군	27.2	경북 울릉군	27.6	경북 울릉군	4.8
서울 서초구	62.4	전남 장흥군	40.3	강원 고성군	43.1	경남 의령군	29.0	전북 장수군	25.8	서울 서초구	5.5
대구 중구	62.1	전남 함평군	40.8	강원 속초시	42.3	서울 강남구	30.2	전북 순창군	23.7	서울 마포구	5.6
서울 마포구	61.7	전남 영광군	41.6	울산 울주군	41.2	경북 의성군	30.5	전남 장흥군	23.3	서울 강남구	5.7
서울 영등포구	61.5	전남 강진군	42.2	인천 서구	41.1	전남 해남군	30.5	전남 해남군	22.4	서울 영등포구	6.2
서울 구로구	61.0	전남 보성군	42.3	경북 안동시	40.9	경북 성주군	30.7	전남 곡성군	22.1	서울 성동구	6.3
서울 광진구	60.4	전북 정읍시	42.8	경기 과천시	40.8	대구 중구	30.7	전북 고창군	22.1	서울 광진구	6.3
부산 부산진구	60.3	전북 순창군	42.8	경기 남양주시	40.5	강원 정선군	30.9	전남 보성군	21.9	서울 동작구	6.3
서울 용산구	59.2	전북 남원시	43.1	강원 강릉시	40.4	경남 하동군	31.0	충북 영동군	21.2	서울 구로구	6.4
서울 관악구	58.8	전남 화순군	43.6	경기 화성시	40.4	경북 봉화군	31.1	전북 남원시	21.1	서울 관악구	6.5

자료: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07.

3. 시군구별 차별 출산력의 원인

여기에서는 시군구별 차별 출산력의 원인을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34개 시군구를 분석 단위로 하여 평균 출생아수, 합계출산율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혼율·국제결혼 비율·일자리 증가율·인구 증가율 등과 같은 변수를 투입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47>).

먼저 2005년 시군구별 평균 출생아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주요 변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군구별 평균 출생아수와 국제결혼 비율·일자리 증가율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미혼율·인구 증가율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중 각 연도의 국제결혼 비율과 평균 출생아수의 상관계수는 0.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국제결혼 비율이 높은 시군구일수록 평균 출생아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증가 또한 평균 출생아수와 0.4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앞서 거제시나 울산 북구 등 산업이 발전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와 관련될 것이라는 추론을 지지해 주는 분석 결과이다.

인구 증가율이 평균 출생아수와 강한 부적 관계(-0.7)를 보이는 것은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 저출산 문제가, 출산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 지역에서 인구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시군구 출산장려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시군구 중 224개(96.6%)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9년 6월 13일자). 이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역과 출산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의 불일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향후 지역별로 차별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4-47> 2005년 시군구별 평균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과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 평균 출생아수	1.000	-	-	-	-	-	-	-	-
2) 합계 출산율	0.374**	1.000	-	-	-	-	-	-	-
3) 2005년 25~29세 미혼율	-.455**	-.793**	1.000	-	-	-	-	-	-
4) 2005년 30~34세 미혼율	-.476**	-.755**	.857**	1.000	-	-	-	-	-
5) 2000년 국제결혼 비율	.713**	.344**	-.431**	-.327**	1.000	-	-	-	-
6) 2002년 국제결혼 비율	.613**	.226**	-.360**	-.249**	.684**	1.000	-	-	-
7) 2004년 국제결혼 비율	.563**	.178**	-.264**	-.159*	.658**	.672**	1.000	-	-
8) 2000~2005년 일자리 증가율	.384**	.267**	-.351**	-.350**	.335**	.251**	.219**	1.000	-
9) 2000~2005년 인구 증가율	-.606**	0.125	0.008	-0.011	-.398**	-.404**	-.394**	0.007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 년도.

주: N=234개 시군구, ** p< 0.01 * p<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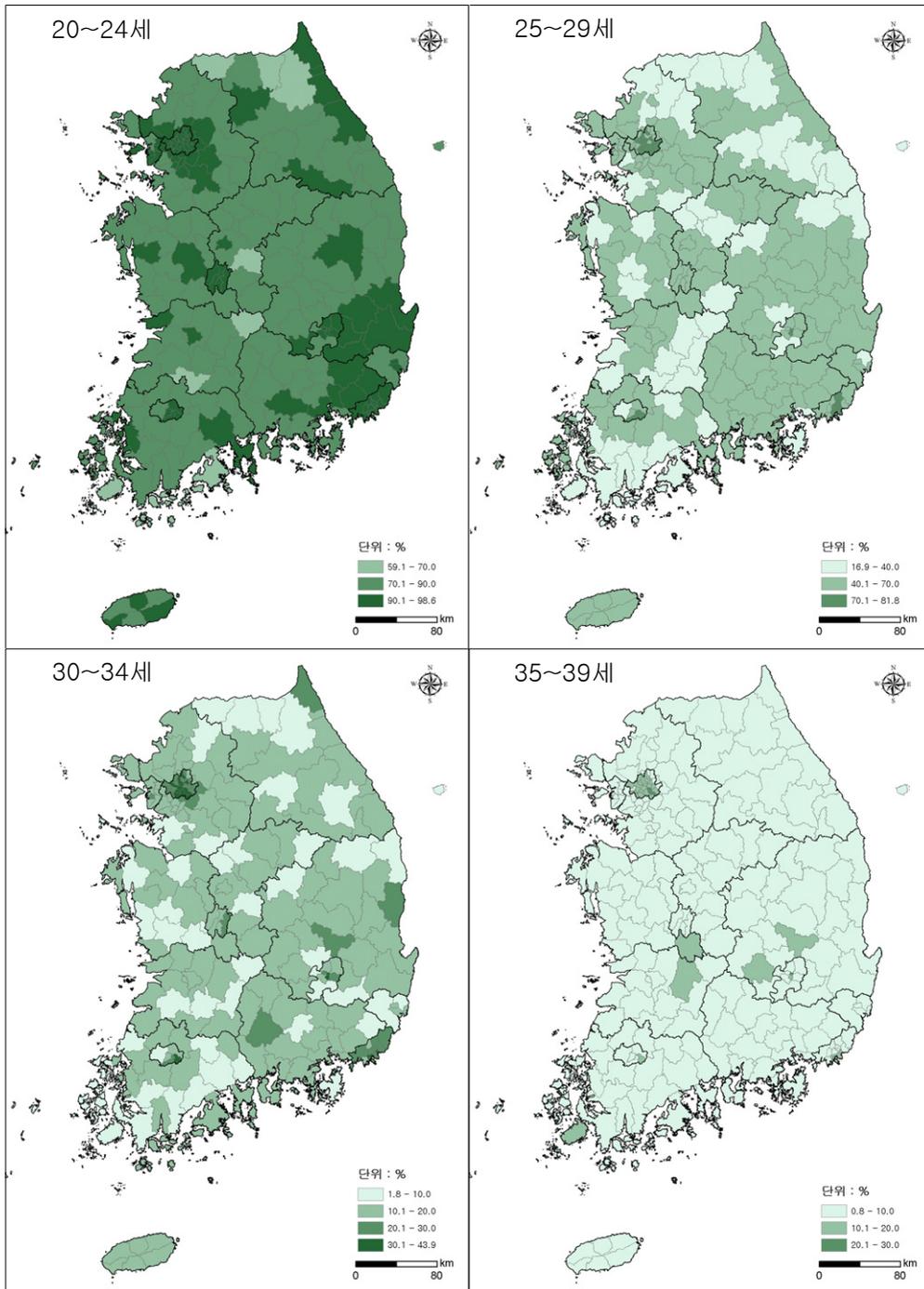


다음으로 2005년 시군구별 합계출산율과 여타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제결혼 비율·일자리 증가율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미혼율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평균 출생아수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던 인구 증가율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령대별 미혼율은 합계출산율과 -0.7 이상의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합계출산율에 미혼율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⁷⁾

평균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두 가지 변수에 일관되게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미혼율과 국제결혼 비율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그림 4-21]은 연령대별 미혼율을 시군구별로 제시한 것으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특·광역시 미혼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24세 여성의 미혼율은 대부분의 지역이 70~90% 구간 안에 있는데, 이 연령대의 미혼율이 90% 이상으로 높은 지역은 7대 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혼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98.6%), 서울 서초구(98.6%)·강남구(98.2%), 대구 수성구(98.0%), 부산 동래구(97.8%)인데, 거의 100%에 가까운 여성들이 미혼이다. 25~29세가 되면 여성의 미혼율은 급격하게 감소해서 대부분의 지역이 40~70% 구간 안에 있게 되는데, 서울 강남구(81.8%), 부산 서구(79.1%)·동구(78.7%)·수영구(77.4%), 서울 종로구(77.3%)에서는 여전히 미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5~29세 연령대의 미혼율이 낮은 강원 화천군(16.9%)·양구군(22.5%)·인제군(23.5%), 전남 영암군(25.2%), 충북 진천군(26.9%)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34세가 되면 여성의 미혼율은 더욱 급격하게 감소해서 대부분의 지역이 20% 미만의 미혼율을 보이는데, 7대 광역시에서는 여전히 30% 이상의 높은 미혼율을 보이는 지역이 관찰된다. 35~39세에서 서울의 미혼율은 현저하게 높았다. 35~39세의 미혼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서울의 대부분 지역은 10% 이상의 미혼율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21.0%)와 대구 중구(20.8%)에서는 미혼율이 20% 이상이었다.

평균 출생아수, 합계출산율과 함께 연령대별 미혼율 상·하위 10개 지역을 살펴보았는데(<표 4-48>), 미혼율과 출산율은 부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출산율 상위 지역과 미혼율 하위 지역을, 출산율 하위 지역과 미혼율 상위 지역을 함께 비교하였다. 출산율이 낮은 서울 서초구·강남구, 부산 중구, 대구 중구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미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산율이 높은 전남 신안군·영암군, 전북 진안군, 강원 화천군·인제군은 미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연령대에서 미혼율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특·광역시의 시군구였다.

27) 기혼 여성만이 계산에 포함되는 평균 출생아수에 비해 합계출산율은 그 계산식의 분모에 해당 연령의 전 여성이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포함되므로, 미혼율은 보다 직접적으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혼율의 부적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합계출산율에서 평균 출생아수에 비해 더 크게 나온 것은 본 연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

[그림 4-21] 시군구-연령대별 여성의 미혼율(2005년)

〈표 4-48〉 평균 출생아수합계출산율연령대별 미혼율 상·하위 10개 지역(2005년)

(단위: 명, %)

구분	평균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구분	미혼율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상위	전남 신안군	2.91	강원 화천군	1.71	강원 양구군	59.1	강원 화천군	16.9	전남 진도군	1.8	전남 무안군	0.8
	전북 진안군	2.79	강원 인제군	1.60	충북 보은군	61.7	강원 양구군	22.5	전남 보성군	4.3	울산 북구	1.5
	전남 장흥군	2.79	전남 영암군	1.59	강원 인제군	62.1	강원 인제군	23.5	전남 영광군	5.0	충북 증평군	1.9
	전남 진도군	2.78	강원 양구군	1.58	강원 철원군	65.8	전남 영암군	25.2	전북 무주군	5.3	강원 화천군	1.9
	전북 순창군	2.76	제주 남제주군	1.54	전남 완도군	66.1	충북 진천군	26.9	전남 신안군	5.4	전남 장성군	2.2
	전북 장수군	2.75	울산 북구	1.53	전남 고흥군	66.2	경기 가평군	27.3	강원 횡성군	5.6	전남 화순군	2.3
	전북 고창군	2.75	전남 강진군	1.52	전남 진도군	66.7	경북 울릉군	27.8	전남 광양시	5.7	충남 태안군	2.3
	전북 임실군	2.72	경기 화성시	1.52	전북 무주군	69.0	전북 부안군	28.3	전북 장수군	5.8	경북 청도군	2.3
	전남 함평군	2.72	경남 거제시	1.51	전북 순창군	69.2	경북 봉화군	28.6	울산 북구	5.8	전남 광양시	2.3
	전남 구례군	2.71	충북 증평군	1.50	충북 단양군	70.8	전북 장수군	28.6	전남 장흥군	5.8	강원 철원군	2.4
하위	서울 마포구	1.69	부산 중구	0.70	경기 과천시	98.6	서울 강남구	81.8	서울 강남구	43.9	서울 강남구	21.0
	서울 용산구	1.69	서울 강남구	0.71	서울 서초구	98.6	부산 서구	79.1	대구 중구	40.4	대구 중구	20.8
	경기 군포시	1.71	대구 중구	0.72	서울 강남구	98.2	부산 동구	78.7	부산 중구	39.3	부산 중구	18.1
	서울 영등포구	1.72	광주 동구	0.72	대구 수성구	98.0	부산 수영구	77.4	서울 종로구	35.2	서울 마포구	16.9
	서울 성동구	1.73	부산 영도구	0.73	부산 동래구	97.8	서울 종로구	77.3	서울 서초구	34.8	서울 종로구	16.6
	서울서대문구	1.74	부산 동구	0.73	서울 마포구	97.8	대구 중구	75.8	서울 관악구	34.4	서울 용산구	16.1
	서울 관악구	1.74	서울 종로구	0.76	부산 서구	97.5	서울 서초구	75.3	부산 수영구	33.5	서울 동대문구	15.4
	경기 오산시	1.74	부산 동래구	0.78	부산 수영구	97.3	대구 남구	75.0	부산 서구	33.2	서울 관악구	15.2
	경기 고양시	1.74	부산 금정구	0.79	서울 동작구	97.3	서울 동작구	75.0	서울 용산구	32.7	부산 수영구	14.7
	서울 서초구	1.74	대구 서구	0.79	서울 강북구	97.2	부산 동래구	74.9	서울 마포구	32.2	광주 동구	14.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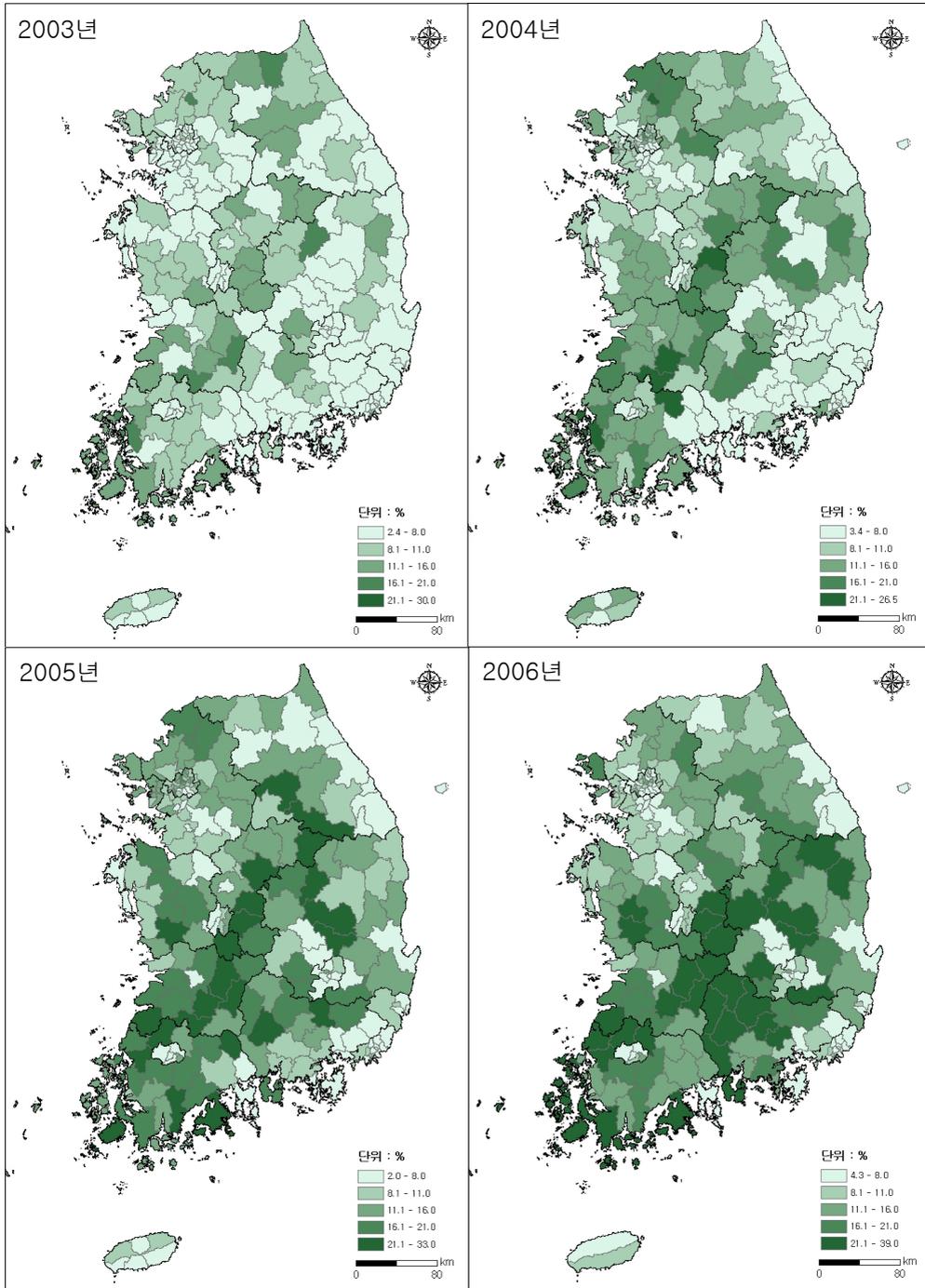
다음으로 국제결혼 비율과 평균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았다([그림 4-22]).²⁸⁾ 이미 몇몇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농어촌의 보편화된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구 재생산 위기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김민정, 2008; 이영주, 2008).²⁹⁾ 국제결혼 비율이 21% 이상인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특·광역시보다 도 지역에서, 그 중에서도 전라 지역의 비중이 높았다(임형백, 2007; 통계청, 2009).

국제결혼 비율은 출산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율 상위 지역과 국제결혼 비율 상위 지역을, 출산율 하위 지역과 국제결혼 비율 하위 지역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49>). 출산율이 높은 지역들은 국제결혼비율이 높은 지역들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균 출생아수나 합계출산율이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되는 전북 진안군·순창군·장수군·임실군, 전남 장흥군·진도군·함평군·강진군, 강원 화천군·양구군, 제주 남제주군, 경남 거제시는 국제결혼 비율 역시 상위 10개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평균 출생아수나 합계출산율이 하위 10개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에서 국제결혼 비율도 낮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 부산 동래구였다.

2000년의 시군구별 국제결혼 비율과 평균 출생아수의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남 곡성군·무안군·신안군, 전북 순창군·장수군, 경남 함양군과 같이 대체로 국제결혼 비율이 높은 지역은 평균 출생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결혼 비율이 낮은 지역은 평균 출생아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 서천군과 같이 국제결혼 비율은 낮는데 평균 출생아수가 많거나, 경기도 가평군과 같이 국제결혼 비율은 높는데 평균 출생아수는 적은 경우에 속하는 시군구의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3]).

28)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 1.2%에서 1995년 3.4%, 2008년 11.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5년 이전에는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 비율이 높았으나 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9) 이는 이미 일본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인구의 도시집중과 더불어 1970년대 이후 일본의 농촌사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젊은 여성의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필리핀과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결혼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박동성, 2008).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 마이크로데이터, 해당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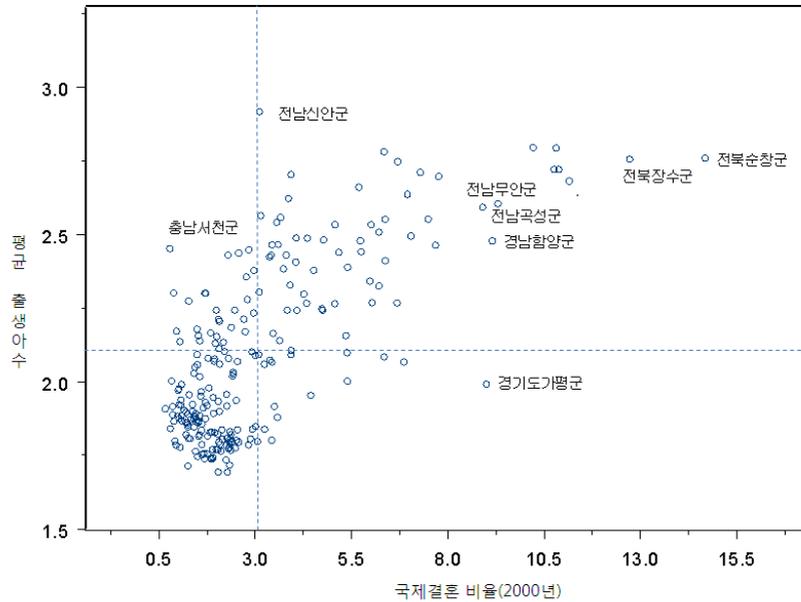
[그림 4-22] 시군구별 국제결혼 비율(2003-2004-2005-2006년)

〈표 4-49〉 평균 출생아수·합계출산율·연도별 국제결혼 비율 상·하위 10개 지역(2005년)

(단위: 명, %)

구분	평균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국제결혼 비율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위	전남 신안군	1.71	강원도 양구군	19.6	전북 임실군	26.5	경남 산청군	33.0	경남 함양군	39.0
	전북 진안군	1.60	전북 장수군	19.4	전북 순창군	25.0	전북 진안군	30.1	경남 의령군	35.0
	전남 장흥군	1.59	전남 영암군	18.0	경기 동두천시	24.2	전남 함평군	29.8	전남 진도군	30.7
	전남 진도군	1.58	강원 양구군	16.8	전남 곡성군	23.1	경남 창녕군	27.3	경남 남해군	30.0
	전북 순창군	1.54	제주 남제주군	16.3	경기 동두천시	16.3	충북 보은군	22.4	경북 의성군	28.7
	전북 장수군	1.53	울산 북구	16.2	전남 순창군	16.2	전남 무안군	21.0	충북 보은군	28.1
	전북 고창군	1.52	전남 강진군	16.0	충북 단양군	16.0	전남 장흥군	20.8	경북 의성군	27.4
	전북 임실군	1.52	경기 화성시	15.9	충북 괴산군	15.9	전북 임실군	20.6	전북 임실군	27.2
	전남 함평군	1.51	경남 거제시	15.8	강원 화천군	15.8	전북 장수군	19.6	충북 옥천군	26.8
	전남 구례군	1.50	충북 증평군	15.2	경남 합천군	19.4	경남 예천군	25.4	경북 영양군	26.4
하위	서울 마포구	1.69	부산 중구	0.70	경북 울릉군	0.0	경북 구미시	3.4	경북 울릉군	2.0
	서울 용산구	1.69	서울 강남구	0.71	경남 창원시	2.4	강원 강릉시	3.6	경남 진해시	3.9
	경기 군포시	1.71	대구 중구	0.72	충남 계룡시	2.6	울산 동구	4.0	평주 서구	4.5
	서울 영등포구	1.72	광주 동구	0.72	대전 서구	2.7	경남 창원시	4.2	서울 서초구	4.8
	서울 성동구	1.73	부산 영도구	0.73	경남 진주시	2.8	경남 거제시	4.3	부산 기장군	5.1
	서울 서대문구	1.74	부산 동구	0.73	대구 수성구	2.9	대전 유성구	4.3	경북 구미시	5.1
	서울 관악구	1.74	서울 종로구	0.76	경기 과천시	2.9	대구 북구	4.3	경남 거제시	5.3
	경기 오산시	1.74	부산 동래구	0.78	전남 순천시	3.1	경남 통영시	4.4	제주 제주시	5.3
	경기 고양시	1.74	부산 급정구	0.79	경북 칠곡군	3.1	서울 서초구	4.6	서울 강남구	5.4
	서울 서초구	1.74	대구 서구	0.79	대구 북구	3.2	광주 광산구	4.6	경남 양산시	5.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5; 인구동향조사(혼인) 마이크로데이터, 해당년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분석 대상 집단, 2005; 인구동향조사(혼인) 마이크로데이터, 해당 년도.

[그림 4-23] 국제결혼 비율과 평균 출생아수

시군구별 평균 출생아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50>). 2000~2005년 일자리 증가율 · 2005년 30~34세 미혼비율 · 2000년 국제결혼 비율이 2005년 시군구별 평균 출생아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증가율과 국제결혼 비율이 증가할수록, 미혼율이 낮아질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약 59%이다. 세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국제결혼 비율(0.593)이 평균 출생아수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두 변수에 비해서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혼율(-0.244), 일자리 증가율(0.119) 순이었다. 2005년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51>). 2005년 30~34세 미혼비율 · 2000년 국제결혼 비율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출생아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2000~2005년 일자리 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비율이 증가하고 미혼율이 낮아질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약 58%이다. 두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미혼율 -0.726, 국제결혼 비율 0.115로 미혼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0〉 2005년 시군구별 평균 출생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분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2000~2005년 일자리 증가율	0.001(0.001)***	0.119
2005년 30~34세 미혼율	-0.009(0.002)***	-0.244
2000년 국제결혼 비율	0.075(0.006)***	0.593
<i>F</i>	108.880	
<i>R</i> ²	0.58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인구동향조사(혼인), 해당 년도.

주: 괄호안은 표준오차임, *** p<0.001.

〈표 4-51〉 2005년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분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2005년 30~34세 미혼율	-0.018(0.001)***	-0.726
2000년 국제결혼 비율	0.009(0.004)***	0.115
<i>F</i>	159.285	
<i>R</i> ²	0.58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인구동향조사(혼인), 해당 년도.

주: 괄호안은 표준오차임, *** p<0.001.

제5절 결론

지난 수 십년 동안 출산율 감소 경향이 지속된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장·단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을 위해서는, 그 현황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적실한 자료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 현상과 관련 시군구 단위로 하위 인구 집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출산력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해서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출산력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기혼 여성의 출산율과 미혼율이 어떻게, 어떠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출산력의 변화 원인을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 출산력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기혼 여성의 출산율이라는 측면에서 그 원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49세 가임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980년에 2.94명이었으나, 1990년에는 2.13명, 2005년에는 1.74명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평균 출생아수의 감소 패턴이 연령대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완결 출산력을 보이는 40대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다자녀 출산이 두자녀 출산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며,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한자녀 출산의 증가와 두자녀·다자녀 출산의 감소 때문이다. 한편 혼인 연령의 상승과 첫출산까지 소요기간은 상쇄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남아선호에 의해 자녀의 성별이 추가적인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산업 국가들에서는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교육수준·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정적인 관계로 바뀌었으나, 우리나라의 기혼유자녀 여성을 분석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높은 사회적 지위가 출산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연령별로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커서, 연령 변수를 고려한 분석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점이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력의 관계를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석할 경우 사실과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 변수를 통제된 후 기혼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 출산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도 다른 산업 사회와 마찬가지로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경제활동참여가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과거의 경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완결 출산력을 보이는 40~49세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별·직업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출산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지만, 생애 동안 낳는 총출생아수는 교육수준이나 직업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일관되게, 여성의 경우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경합인구나 실업자에 비해 취업자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동향에 의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교육수준이 낮은 인구 집단과 농림어업직에서 급속하게 출산력이 감소하여 출산율의 하향평준화 경향이 관찰된다.

혼인·출산의 선택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하위 인구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상태나 직업에 있어서 남녀 차가 심할 뿐 아니라 여성 간에도 결혼과 자녀 출산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다. 미혼 여성은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전문직 비율 등에서 다른 집단과, 특히 다른 여성 집단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혼인과 출산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뚜렷한 상황은



자발적인 미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혼인·출산의 선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별화가 여성의 미혼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25~29세 여성 중 40%가 미혼이던 것이 2005년에는 60%로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미혼율이 30~34세는 10.5%에서 19.0%로, 35~39세는 4.1%에서 7.6%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40세 이후의 출산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20~30대, 특히 30대 미혼율의 급증은 출산율의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그 증가 속도로 볼 때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증가만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기혼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보다는 여성의 자발적인 미혼·비혼에 영향을 줌으로써 미혼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혼 여성의 출산율과 미혼율의 변화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지역별 차별 출산력의 변화와 원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유형·시도별 차별 출산력과 함께 저출산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수준에서 차별 출산력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를 통해 기혼 여성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기혼 여성의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 지역 유형별로는 대도시, 시도별로는 수도권의 서울·경기·인천이었으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였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기혼 여성 출산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합계출산율과 자녀수 구성 비율을 통해 미혼율과 기혼 여성 출산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의 차이가 큰 가운데 첫째,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이 높고 시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이 낮다. 둘째,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휴전선 부근의 지역, 산업이 발전한 남해안 지역, 전라 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셋째, 특정 지역에서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강북구·서초구·종로구, 부산 동구·서구·수영구·영도구·중구, 대구 중구 등은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서 저출산 현상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차별 출산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과 수도권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저출산 문제와 출산 정책의 공간 불일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력이 높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저출산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2000년 이후 최근 동향에 의하면 시군구별



다자녀 비율은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자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두자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의 저출산 문제가 다자녀 비율의 감소보다는 두자녀 비율의 감소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시군구별 차별 출산력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군구별 평균 출생아수에는 국제결혼 비율·일자리 증가율·미혼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국제결혼 비율과 일자리 증가율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미혼율이 낮아질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에는 국제결혼 비율과 미혼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미혼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인 미혼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35~39세 여성의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미혼 상태를 보이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의 미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농촌 총각’ 문제 만큼이나 도시의 미혼·비혼 여성 문제도 저출산 현상과 관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력의 변화와 차별 출산력은 시공간상에서의 강한 역동성을 특성으로 한다. 출산력의 감소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정도로 발생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출산력의 변화가 과거의 경향과 끊임없이 달라지고 복잡하게 진행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적인 결과도 출되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경제활동참여가 기혼 여성의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미혼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미혼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그동안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교육수준이 낮은 인구 집단과 농림어업직에서 급속하게 출산력이 감소하여 출산율의 하향평준화 경향이 관찰된다. 농림어업직의 출산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계열 측면에서 보면 출산율이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직업군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다자녀 비율 감소가 문제지만 최근 동향에 의하면 다자녀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두자녀 비율의 감소와 한자녀 비율의 증가가 더 큰 문제이다. 넷째, 서울·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와 수도권의 특정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미혼율이 높고 기혼 여성의 출산율도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 강은진, 1995, 출산·사망력의 지리적 차이와 그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미네 다카오, 인구감소 저출산사회의 미래: 고용과 생활의 질을 높여야, 노진귀 역, 2008, 노총 연구원신서.
- 권용은·김의철, 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211-226.
- 권태환, 2008, 출산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인구·주택, 통계개발원, 190-216.
- 김두섭, 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 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57-95.
- 김민정, 2008, 국제결혼 가족과 자녀의 성장: '여러 종류'의 한국인이 가족으로 살아가기, 한국문화인류학, 41(1), 51-89.
- 김보경·김한곤, 2005,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 6(2), 45-73.
- 김우영, 2003,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률의 동태적 분석, 노동정책연구, 3(1), 67-101.
- _____, 2007,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307, 1-27.
- 김정호, 2009,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개발연구, 31(1), 105-138.
- 김지경, 2004, 첫 자녀 출산 후 노동 시장 신규진입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1), 69-79.
- 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5, 출산력 저하의 원인: 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고서.
- _____, 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 출산력-인구센서스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1), 1-23.
- 김현숙, 2005, 기혼 여성 노동공급과 자녀보육 및 교육비용, 재정포럼, 1월호, 6-34.
- 류기철·박영화, 2009,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 32(1), 1-23.
- 민유기, 2006, '출산 파업'과 '민족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 프랑스 가족보호정책의 기원(1874-1914), 서양사론, 89, 143-176.
- 민희철, 2006,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재정포럼, 11월호, 27-44.
- 박경애, 2007, 최근의 출산력과 정책적 함의, 한국인구학, 30(3), 137-156.
- 박동성, 2008, 일본 과소지역에서의 '국제가족'의 형성과 지역사회의 대응: 야마가타현의 사례분석, 한국문화인류학, 41(1), 129-165.
- 박민자, 2004, 혼인 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16(1), 109-135.
- 박수미, 2005, 가족내 성 평등(Gender Equity)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4월호, 36-44.
- _____, 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4.
- 손승영, 2005,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노동 경험과 딜레마: 강한 직업정체성과 남성중심적 조직문화, 한국여성학, 21(3), 67-97.
- 신인철, 2009, Bayesian Geo-additive Model을 이용한 자녀출산계획의 공간효과 분석, 한국인구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 19-36.
- 신효영·방은령, 2008,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분석: 충청남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

- 복지학, 13(4), 205-227.
- 양승주, 1990, 고학력여성 취업 왜 어렵나, 한국논단, 8월호, 137-144.
- 원숙연, 2005,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둘러싼 수사(修辭)와 현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4(2), 157-275.
- 유삼현, 2006, 지역별 차별 출산력의 분석: 저출산 인과구조의 이해, 인구와 사회, 2(2), 53-76
- 윤소영, 2005, 저출산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59-166.
- 은기수, 1997, 지역, 교육 및 직업별 차별 출산력,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 _____, 2001a, 결혼연령 및 결혼분석 대상 집단과 첫 출산간격의 관계: 최근의 낮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6), 105-139.
- _____, 2001b, 첫 출산부터 마지막 출산까지 출산기간의 차별성,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6(1), 14-26.
- 이성용, 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 29(3), 111-137
- 이시원·김영기·이성진, 200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감소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8(1), 83-103.
- 이영주, 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3(1), 79-101.
- 이희연, 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법문사.
- 임형백, 2007,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의 특징, 농촌지도와 개발, 14(2), 471-491.
- 장지연, 2005,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의 국제비교, 국제노동브리프, 32-42.
- 장진경, 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 165-183.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 전광희, 2002, 출산력,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 1, 통계청, 81-113.
- _____, 2006, 한국의 혼인력과 출산력: 추이와 전망, 통계 32, 60-90.
- 정태연, 2006, 사회적 독립가능성과 결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143-162.
- 조혜중, 2006, 새 인구론: 인구의 공간적 사회적 접근, 푸른길.
- 최형재, 2008, 자녀교육과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 통계청, 2009, 2008년 혼인통계결과.
- _____, 2008, 사회통계조사.
- _____, 각년도, 인구동향조사.
- _____,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 _____, 각년도, 주민등록인구.
- 한유미·곽혜경, 2004,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여성사회참여,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29-40.
- 한은주·박정운, 2006, 한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11), 1-12.
- Ahn, Namkee and Mira, Pedro, 2002,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667-682.



- Allison, E. Vos, 2009, Falling fertility rates: new challenges to the European welfare states, *Socio-Economic Review*, 7, 485-503.
- Billari Francesco C. and Kohler, Hans-Peter, 2004,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 171-176.
- Boyle, P., 2003, Population geography: does geography matter in fertility research,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5), 615-626.
- Brewster, K. and Rindfuss, R. R.,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s of Sociology*, 26, 271-296.
- Budig, M. J., 2003, Are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histories interdependent? An examination of causal order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Social Science Research*, 32, 376-401.
- Chesnais, J. C., 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729-739.
- Dye, J. L., 2008, Fertility of American women: 2006, *Current Population Reports*, US Census Bureau, 1-22.
- Fahey, T. and Speder, Z., 2004, *Fertility and Family Issues in an Enlarged Europ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Franklin, R. and Plane, D. A., 2004, A shift-share method for the analysis of regional fertility change: An application to the decline in childbearing in Italy, 1952-1991, *Geographical Analysis*, 36(1), 1-20.
- General Register Office for Scotland, 2002, Scotland's population 2001: the register general's annual review of demographic trends, Edinburgh: General register Office for Scotland.
- Hoem, B. and Hoem, J., 1989, The impact of woman's employment on second and third births in modern Sweden, *Population Studies*, 43, 47-67.
- Kwon, T. H., 2007, Trends and implications of delayed and non-marriage in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3(3), 223-241.
- MacDonald, P., 2000,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7(1), 1-26.
- _____, 2008, Very low fertility consequences, causes and policy approaches,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6(1), 19-23.
- Martin, D., 1998, Optimizing census geography: the separation of collection and output geographies, *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cience*, 12(7), 673-685.
- Mason, K. O., 1997, Explaining fertility transitions, *Demography*, 34(4), 443-454.
- OECD, 2008,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 _____, 2009,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Pandit, K. and Bagchi-Sen, S., 1993, The spatial dynamics of US fertility, *Growth and Change*, 24, 299-246.
- Park, Kyung Ae, 2006, Fertility decline in Korea: trends, determinants, and policy implications, *인구와 사회*, 2(2), 77-113.
- Schnell, G. and M. S. Monmonier, 1983, *The Study of Population; Elements · Patterns · Process*,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Sleebos, Joëlle,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1999, *Future Expectations for Below-Replacement Fertility*, Population Bulletin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Issue Nos. 41/41.

http://www.oecd.org/document/45/0,3343,en_2649_34819_39651501_1_1_1_1,00.html: Babies and Boss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http://www.oecd.org/document/24/0,3343,en_2649_34637_2671576_1_1_1_1,00.html#data.



<부 록>

<부록 1> OECD 국가의 연도별 합계출산율의 변화(1970~2007년)

(단위: 명)

구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호주	2.86	1.89	1.90	1.82	1.76	1.73	1.76	1.75	1.76	1.79	1.81	-
오스트리아	2.29	1.65	1.46	1.42	1.36	1.33	1.39	1.38	1.42	1.41	1.41	1.38
벨기에	2.25	1.68	1.62	1.55	1.66	1.67	1.64	1.66	1.72	1.76	1.80	-
캐나다	2.33	1.68	1.71	1.62	1.49	1.51	1.50	1.53	1.53	1.54	1.54	-
체코	1.91	2.10	1.89	1.28	1.14	1.15	1.17	1.18	1.23	1.28	1.33	-
덴마크	1.95	1.55	1.67	1.81	1.77	1.75	1.72	1.76	1.78	1.80	1.85	1.85
핀란드	1.83	1.63	1.79	1.81	1.73	1.73	1.72	1.76	1.80	1.80	1.84	1.83
프랑스	2.48	1.95	1.78	1.71	1.87	1.88	1.86	1.87	1.90	1.92	1.98	-
독일	2.03	1.56	1.45	1.25	1.38	1.35	1.34	1.34	1.36	1.34	1.33	-
그리스	2.39	2.21	1.39	1.32	1.27	1.26	1.27	1.29	1.31	1.34	1.41	-
헝가리	1.97	1.92	1.84	1.57	1.33	1.31	1.31	1.28	1.28	1.32	1.35	-
아이슬란드	2.81	2.48	2.31	2.08	2.08	1.95	1.93	1.99	2.03	2.05	2.07	2.10
아일랜드	3.87	3.23	2.12	1.85	1.90	1.96	1.98	1.98	1.95	1.88	1.90	-
이탈리아	2.43	1.68	1.36	1.19	1.26	1.25	1.27	1.29	1.33	1.32	1.35	1.34
일본	2.13	1.75	1.54	1.42	1.36	1.33	1.32	1.29	1.29	1.26	1.32	-
한국	4.53	2.83	1.59	1.65	1.47	1.30	1.17	1.19	1.16	1.08	1.13	1.26
룩셈부르크	1.98	1.50	1.62	1.67	1.78	1.66	1.63	1.62	1.66	1.62	1.64	-
멕시코	6.77	4.97	3.44	2.95	2.70	2.62	2.48	2.35	2.25	2.21	2.17	-
네덜란드	2.57	1.60	1.62	1.53	1.72	1.71	1.73	1.75	1.73	1.71	1.72	-
뉴질랜드	3.17	2.03	2.18	1.98	1.98	1.97	1.89	1.93	1.98	1.97	2.01	-
노르웨이	2.50	1.72	1.93	1.87	1.85	1.78	1.75	1.80	1.83	1.84	1.90	1.90
폴란드	2.20	2.28	1.99	1.55	1.37	1.32	1.25	1.22	1.23	1.24	1.27	-
포르투갈	2.83	2.18	1.56	1.41	1.56	1.46	1.47	1.44	1.40	1.41	1.36	-
슬로바키아	2.40	2.31	2.09	1.52	1.29	1.20	1.19	1.20	1.24	1.25	1.24	-
스페인	2.90	2.22	1.36	1.17	1.23	1.24	1.26	1.31	1.33	1.35	1.38	-
스웨덴	1.94	1.68	2.14	1.74	1.55	1.57	1.65	1.72	1.75	1.77	1.85	-
스위스	2.10	1.55	1.59	1.48	1.50	1.38	1.39	1.39	1.42	1.42	1.44	-
터키	5.00	4.63	3.07	2.75	2.27	2.25	2.24	2.22	2.21	2.19	2.18	2.17
영국	2.43	1.90	1.83	1.70	1.64	1.63	1.64	1.71	1.77	1.79	1.84	-
미국	2.48	1.84	2.08	1.98	2.06	2.03	2.01	2.04	2.05	2.05	2.10	-
OECD-30개국	2.71	2.14	1.86	1.69	1.64	1.61	1.60	1.61	1.62	1.62	1.65	-

출처: OECD, 2009.

〈부록 2〉 OECD 국가의 교육수준별 실업률·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25~64세)

(단위: %)

구분		전체			남			여		
		고졸 미만	고졸 이상	대졸 이상	고졸 미만	고졸 이상	대졸 이상	고졸 미만	고졸 이상	대졸 이상
		호주	실업률	5.6	3.8	2.3	6.0	3.3	2.0	5.2
	참가율	67.2	83.5	86.3	80.1	90.8	92.1	57.5	73.1	81.4
	고용률	63.5	80.4	84.4	75.3	87.8	90.3	54.5	69.6	79.3
오스트리아	실업률	7.9	3.7	2.5	8.7	3.3	2.0	7.3	4.1	3.2
	참가율	60.5	78.7	88.1	72.8	84.3	90.5	54.1	72.5	84.7
	고용률	55.7	75.8	85.9	66.4	81.5	88.7	50.2	69.5	82.0
벨기에	실업률	12.3	6.7	3.7	10.7	5.5	3.5	14.8	8.4	4.0
	참가율	55.9	78.5	86.9	68.6	86.0	90.4	43.0	70.4	83.6
	고용률	49.0	73.2	83.6	61.2	81.2	87.2	36.6	64.5	80.2
캐나다	실업률	9.3	5.6	4.1	8.8	5.7	4.1	10.1	5.6	4.1
	참가율	62.7	80.6	86.2	72.9	86.4	90.5	51.4	73.8	82.5
	고용률	56.9	76.0	82.6	66.5	81.5	86.7	46.4	69.7	79.1
체코	실업률	22.3	5.5	2.2	23.4	4.2	2.1	21.7	7.3	2.4
	참가율	56.6	80.0	87.0	68.7	88.1	93.0	50.8	71.3	79.7
	고용률	43.9	75.6	85.1	52.6	84.5	91.1	39.8	66.1	77.9
덴마크	실업률	5.5	2.7	3.2	4.7	2.1	2.7	6.4	3.6	3.6
	참가율	66.4	83.5	90.3	74.4	87.4	92.4	59.7	78.8	88.4
	고용률	62.8	81.3	87.4	70.9	85.6	90.0	55.9	76.0	85.2
핀란드	실업률	10.1	7.0	3.7	9.2	6.4	3.2	11.5	7.8	4.0
	참가율	65.0	81.3	88.2	68.7	83.9	90.6	60.3	78.2	86.5
	고용률	58.4	75.6	85.0	62.4	78.5	87.7	53.4	72.1	83.0
프랑스	실업률	11.0	6.6	5.1	10.0	5.5	5.1	12.0	8.0	5.1
	참가율	65.3	80.9	87.5	73.2	85.5	91.4	58.4	75.7	84.1
	고용률	58.1	75.6	83.0	65.8	80.8	86.8	51.4	69.7	79.8
독일	실업률	19.9	9.9	4.8	21.4	10.1	4.5	18.4	9.7	5.3
	참가율	67.1	80.5	88.6	82.2	86.6	91.8	56.9	74.5	84.2
	고용률	53.8	72.5	84.3	64.6	77.8	87.6	46.4	67.3	79.8
그리스	실업률	7.2	8.7	6.1	4.8	4.7	4.3	11.8	13.8	8.2
	참가율	64.1	76.4	88.8	83.9	90.3	91.6	43.8	63.9	85.7
	고용률	59.5	69.7	83.3	79.9	86.0	87.6	38.6	55.1	78.6
헝가리	실업률	14.8	6.1	2.2	15.2	5.5	2.2	14.4	6.8	2.2
	참가율	44.8	74.9	83.7	54.2	81.7	88.4	38.5	67.5	79.9
	고용률	38.2	70.4	81.8	46.0	77.2	86.4	32.9	62.9	78.1



구분		전체			남			여		
		고졸 미만	고졸 이상	대졸 이상	고졸 미만	고졸 이상	대졸 이상	고졸 미만	고졸 이상	대졸 이상
아이슬란드	실업률	2.5	c	c	c	c	c	c	c	c
	참가율	85.7	90.3	92.9	91.7	94.3	96.4	80.2	83.8	90.0
	고용률	83.6	88.6	92.0	89.4	93.1	95.6	78.3	81.5	89.0
아일랜드	실업률	5.7	3.2	2.2	5.8	3.1	2.4	5.6	3.4	2.1
	참가율	62.3	79.9	88.4	78.9	92.3	94.1	42.0	67.9	83.5
	고용률	58.7	77.3	86.5	74.3	89.5	91.8	39.7	65.6	81.8
이탈리아	실업률	6.9	4.6	4.8	5.3	3.4	3.7	10.2	6.1	5.9
	참가율	56.4	78.0	84.7	75.5	86.9	89.5	37.1	68.9	80.5
	고용률	52.5	74.4	80.6	71.5	83.9	86.1	33.3	64.7	75.8
일본	실업률	-	4.6	3.0	-	4.9	3.0	-	4.1	3.0
	참가율	-	76.6	82.2	-	91.8	95.7	-	62.3	67.9
	고용률	-	73.1	79.8	-	87.3	92.8	-	59.8	65.9
한국	실업률	2.6	3.5	2.9	3.7	4.0	3.0	1.7	2.5	2.7
	참가율	67.9	72.9	79.5	81.2	88.3	91.9	59.4	57.0	62.4
	고용률	66.2	70.3	77.2	78.2	84.8	89.2	58.4	55.5	60.8
룩셈부르크	실업률	4.9	3.8	2.9	2.8	2.5	2.3	7.4	5.6	3.5
	참가율	63.9	76.3	87.7	78.8	84.6	91.5	51.8	67.4	83.3
	고용률	60.8	73.4	85.2	76.6	82.5	89.4	47.9	63.7	80.4
멕시코	실업률	2.2	2.6	2.9	2.3	2.4	2.8	2.2	2.8	3.1
	참가율	64.3	75.1	85.8	92.9	95.5	94.2	41.1	58.7	75.5
	고용률	62.8	73.1	83.3	90.7	93.2	91.5	40.2	57.0	73.2
네덜란드	실업률	4.8	3.5	2.3	4.0	3.1	2.3	5.8	3.9	2.3
	참가율	63.6	82.0	88.4	79.8	87.6	90.8	50.3	76.1	85.7
	고용률	60.6	79.1	86.4	76.6	84.8	88.7	47.4	73.2	83.7
뉴질랜드	실업률	3.1	2.2	2.4	3.1	1.9	2.1	3.2	2.6	2.6
	참가율	72.9	86.4	86.6	82.9	93.3	93.7	64.5	76.4	81.2
	고용률	70.6	84.5	84.6	80.4	91.5	91.7	62.5	74.4	79.0
노르웨이	실업률	4.7	2.1	1.8	4.9	1.9	2.0	4.4	2.5	1.5
	참가율	67.9	84.9	90.8	74.5	88.7	93.0	61.7	80.0	88.6
	고용률	64.7	83.1	89.2	70.8	87.0	91.2	59.0	78.0	87.3
폴란드	실업률	16.5	10.6	5.0	14.9	8.5	4.7	19.7	12.6	5.3
	참가율	64.2	73.4	87.9	74.5	82.9	91.1	51.0	66.4	85.5
	고용률	53.6	65.6	83.5	63.4	75.8	86.8	40.9	58.1	81.0

구분		전체			남			여		
		고졸 미만	고졸 이상	대졸 이상	고졸 미만	고졸 이상	대졸 이상	고졸 미만	고졸 이상	대졸 이상
포르투갈	실업률	7.6	7.1	5.4	6.2	6.5	4.5	9.4	7.8	6.0
	참가율	77.6	86.4	91.3	85.8	88.4	92.7	69.2	84.4	90.4
	고용률	71.7	80.2	86.4	80.4	82.7	88.5	62.7	77.8	85.0
슬로바키아	실업률	44.0	10.0	2.6	48.2	8.7	2.0	40.8	11.7	3.3
	참가율	41.9	79.9	87.1	54.1	88.1	92.6	35.7	71.4	81.2
	고용률	23.5	71.9	84.9	28.0	80.4	90.8	21.2	63.0	78.6
스페인	실업률	9.0	6.9	5.5	6.3	4.6	4.1	13.8	9.8	6.9
	참가율	65.7	81.6	88.2	83.3	90.8	91.9	47.6	72.1	84.6
	고용률	59.8	75.9	83.4	78.1	86.6	88.2	41.0	65.0	78.7
스웨덴	실업률	7.3	5.1	4.2	6.7	4.9	4.5	8.5	5.2	4.0
	참가율	72.2	86.3	91.1	79.6	89.9	92.0	62.4	82.2	90.4
	고용률	66.9	81.9	87.3	74.3	85.5	87.9	57.1	77.9	86.8
스위스	실업률	7.6	3.2	2.2	5.9	2.7	1.9	9.0	3.7	2.9
	참가율	70.7	82.8	92.2	81.9	90.6	95.5	63.0	76.5	86.3
	고용률	65.3	80.1	90.2	77.1	88.1	93.7	57.3	73.7	83.8
터키	실업률	8.3	9.0	6.9	8.8	7.5	5.9	6.5	16.5	9.0
	참가율	53.5	69.0	81.0	82.0	88.7	87.6	23.5	33.5	69.9
	고용률	49.0	62.7	75.5	74.8	82.1	82.4	22.0	28.0	63.6
영국	실업률	5.7	4.0	2.2	6.5	3.9	2.5	4.9	4.1	2.0
	참가율	70.3	84.1	90.1	77.3	88.1	92.1	64.6	79.1	88.0
	고용률	66.3	80.7	88.1	72.3	84.7	89.8	61.5	75.9	86.3
미국	실업률	8.3	4.6	2.5	7.6	4.8	2.7	9.4	4.3	2.3
	참가율	63.2	76.9	84.9	76.2	83.9	90.2	48.3	70.0	80.0
	고용률	58.0	73.3	82.7	70.4	79.9	87.7	43.8	67.0	78.2
OECD 전체	실업률	9.6	5.4	3.5	9.5	4.7	3.2	10.6	6.5	3.9
	참가율	64.1	80.0	87.4	76.9	88.2	92.0	52.7	71.1	82.5
	고용률	58.4	75.9	84.4	70.3	84.2	89.1	47.6	66.7	79.4

출처: OECD, 2008.

주: c는 신뢰도 미만을 뜻함.

〈부록 3〉 미혼율의 변화에 따른 합계출산율의 변화
 〈가상 집단〉

(단위: 명)

구분	연령대	여성수			출생아수	연령대별 출산율
		기혼 여성	미혼 여성	전체		
미혼율 0%	20~24세	500	0	500	50	100.0
	25~29세	500	0	500	50	100.0
	30~34세	500	0	500	50	100.0
	35~39세	500	0	500	50	100.0
	합계출산율	-	-	-	-	2.0
미혼율 10%	20~24세	450	50	500	45	90.0
	25~29세	450	50	500	45	90.0
	30~34세	450	50	500	45	90.0
	35~39세	450	50	500	45	90.0
	합계출산율	-	-	-	-	1.8

주: 출생아수는 기혼 여성 10명당 1명으로 가정함.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대별 집단〉

(단위: 명)

구분	연령대	여성수			출생아수	연령대별 출산율
		기혼 여성	미혼 여성	전체		
2000년	15~19세	12,819	1,764,790	1,777,609	1,282	0.7
	20~24세	195,986	1,621,997	1,817,983	19,599	10.8
	25~29세	1,209,206	817,270	2,026,476	120,921	59.7
	30~34세	1,770,168	217,555	1,987,723	177,017	89.1
	35~39세	1,909,550	88,354	1,997,904	190,955	95.6
	40~44세	1,821,702	51,040	1,872,742	182,170	97.3
	45~49세	1,363,254	25,373	1,388,627	136,325	98.2
	합계출산율	-	-	-	-	2.26
2005년	15~19세	6,005	1,468,140	1474145	601	0.4
	20~24세	110,342	1,635,879	1746221	11,034	6.3
	25~29세	741,372	1,072,143	1813515	74,137	40.9
	30~34세	1,648,441	387,928	2036369	164,844	81.0
	35~39세	1,891,619	155,498	2047117	189,162	92.4
	40~44세	1,966,768	73,846	2040614	196,677	96.4
	45~49세	1,892,799	46,241	1939040	189,280	97.6
	합계출산율	-	-	-	-	2.07

주: 출생아수는 기혼 여성 10명당 1명으로 가정함.

〈부록 4〉 시군구별 한자녀·두자녀·다자녀 비율(2000-2003-2005-2007년)

(단위: %)

시군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서울 종로구	51.6	38.6	9.8	54.7	34.7	10.6	55.1	34.8	10.1	58.1	31.4	10.5
서울 중구	53.6	39.0	7.4	57.8	33.0	9.2	57.2	36.3	6.5	58.3	33.6	8.1
서울 용산구	53.6	38.9	7.4	55.6	36.4	8.0	58.1	35.3	6.6	59.2	33.5	7.2
서울 성동구	53.0	40.0	7.0	55.5	37.6	6.9	60.0	34.2	5.8	58.5	35.2	6.3
서울 광진구	52.6	39.7	7.7	57.2	35.5	7.3	56.9	35.6	7.5	60.4	33.3	6.3
서울 동대문구	51.6	40.3	8.1	52.8	39.7	7.5	55.9	35.6	8.5	55.4	36.1	8.5
서울 중랑구	48.5	43.5	8.0	52.9	38.8	8.3	56.5	34.7	8.8	56.0	35.4	8.6
서울 성북구	49.8	41.7	8.5	54.8	37.5	7.7	55.2	36.8	8.0	57.1	35.9	7.0
서울 강북구	51.2	40.7	8.1	53.9	37.5	8.6	51.9	38.9	9.2	54.6	36.7	8.8
서울 도봉구	50.0	42.5	7.5	50.1	41.3	8.6	53.6	38.9	7.5	55.9	36.4	7.7
서울 노원구	52.0	41.5	6.6	52.2	40.5	7.3	54.3	38.4	7.3	55.5	37.7	6.8
서울 은평구	50.4	42.1	7.5	53.8	38.1	8.0	54.8	37.3	7.9	56.7	35.5	7.8
서울 서대문구	54.0	39.3	6.7	53.8	38.8	7.4	54.0	38.0	8.0	55.2	36.5	8.3
서울 마포구	55.3	37.8	6.9	57.7	34.9	7.4	60.9	32.8	6.4	61.7	32.7	5.6
서울 양천구	48.2	42.3	9.4	49.8	42.1	8.1	54.8	36.2	8.9	54.7	37.3	8.0
서울 강서구	52.1	40.1	7.7	56.0	36.9	7.2	56.9	35.7	7.4	58.5	34.6	6.9
서울 구로구	49.8	41.7	8.5	54.9	37.9	7.3	58.7	34.2	7.1	61.0	32.6	6.4
서울 금천구	47.9	42.7	9.4	51.7	39.9	8.3	52.7	38.0	9.3	54.0	35.5	10.5
서울 영등포구	51.9	40.3	7.8	57.1	36.4	6.6	59.7	33.7	6.5	61.5	32.3	6.2
서울 동작구	53.4	39.0	7.6	56.5	36.6	6.9	59.6	33.6	6.8	58.5	35.2	6.3
서울 관악구	54.2	38.6	7.2	57.6	34.9	7.5	60.4	32.3	7.3	58.8	34.7	6.5
서울 서초구	59.1	34.9	6.0	56.9	35.9	7.2	62.1	32.2	5.7	62.4	32.1	5.5
서울 강남구	58.5	35.6	5.9	59.0	33.7	7.3	62.4	30.5	7.1	64.1	30.2	5.7
서울 송파구	54.1	38.5	7.5	56.2	36.7	7.1	56.3	35.7	8.0	58.5	34.8	6.7
서울 강동구	49.9	41.6	8.4	53.0	39.0	8.0	57.4	35.0	7.5	57.6	34.6	7.8
부산 중구	55.6	36.8	7.7	55.0	35.8	9.2	48.8	43.2	8.0	56.3	33.5	10.2
부산 서구	49.3	39.9	10.8	52.5	38.0	9.5	54.2	35.3	10.5	52.7	37.6	9.7
부산 동구	54.1	37.9	8.0	50.5	38.9	10.6	53.2	39.2	7.6	57.1	33.5	9.3
부산 영도구	48.4	42.7	9.0	51.3	38.8	9.9	48.4	42.3	9.3	52.7	38.3	9.0
부산 진구	50.7	39.8	9.4	53.6	39.5	6.9	55.4	36.8	7.8	60.3	33.2	6.5
부산 동래구	49.9	41.5	8.6	50.8	40.8	8.4	54.9	36.0	9.1	55.1	37.2	7.7
부산 남구	49.1	42.2	8.7	50.5	41.5	8.0	53.4	38.4	8.2	55.5	36.2	8.3
부산 북구	45.7	45.2	9.1	48.6	42.8	8.6	51.4	38.8	9.9	54.3	37.7	8.0
부산 해운대구	48.0	43.4	8.7	48.6	41.6	9.7	51.3	38.6	10.1	56.5	35.5	8.0
부산 사하구	48.8	43.4	7.8	51.3	40.7	8.0	53.6	37.8	8.6	56.3	35.0	8.7
부산 금정구	51.5	40.2	8.2	52.2	39.5	8.3	54.9	36.6	8.5	56.6	35.1	8.2
부산 강서구	43.3	41.0	15.7	56.3	29.9	13.7	52.6	34.0	13.4	51.4	34.9	13.7
부산 연제구	49.8	41.9	8.3	53.1	39.1	7.8	52.6	39.4	7.9	56.0	37.3	6.7
부산 수영구	49.7	42.0	8.3	53.8	37.3	8.9	57.6	36.5	5.9	55.1	37.6	7.3



시군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부산 사상구	46.7	43.3	10.0	50.4	41.0	8.6	53.6	38.8	7.6	56.3	35.7	8.0
부산 기장군	45.1	42.5	12.5	50.9	41.2	7.8	46.1	42.9	10.9	52.9	36.4	10.8
대구 중구	53.5	36.1	10.4	48.6	38.7	12.7	55.7	36.5	7.8	62.1	30.7	7.2
대구 동구	48.4	42.3	9.3	50.1	40.0	9.9	52.9	38.5	8.6	53.6	38.0	8.4
대구 서구	48.4	43.3	8.3	50.1	40.4	9.5	54.0	36.8	9.2	53.5	38.3	8.2
대구 남구	51.6	41.0	7.4	54.6	36.2	9.2	58.3	34.6	7.1	57.8	34.7	7.4
대구 북구	46.2	43.4	10.4	50.1	41.4	8.5	52.7	38.6	8.6	52.5	39.2	8.3
대구 수성구	48.1	43.0	8.9	49.0	41.3	9.7	50.0	39.8	10.2	52.8	38.4	8.8
대구 달서구	45.7	45.1	9.1	47.9	42.9	9.1	51.3	39.8	9.0	51.4	39.3	9.2
대구 달성군	41.8	46.7	11.5	42.8	45.9	11.3	49.4	41.4	9.2	54.1	36.6	9.3
인천 중구	49.9	41.5	8.6	51.2	39.0	9.8	50.2	40.5	9.3	53.9	36.0	10.1
인천 동구	48.1	41.9	10.0	47.5	41.2	11.3	50.3	40.4	9.2	51.4	39.2	9.4
인천 남구	47.7	43.4	8.9	53.5	37.8	8.7	54.0	36.5	9.5	55.0	36.1	9.0
인천 연수구	47.8	43.0	9.3	48.7	40.9	10.4	48.4	41.7	9.9	51.7	38.5	9.7
인천 남동구	45.9	45.0	9.1	49.4	41.2	9.4	50.4	39.7	9.9	54.8	37.3	7.9
인천 부평구	47.3	42.9	9.7	50.5	39.9	9.6	51.8	39.2	9.0	55.3	36.2	8.5
인천 계양구	43.9	45.7	10.4	47.5	41.9	10.6	50.5	39.3	10.2	53.6	37.5	8.9
인천 서구	43.0	46.5	10.5	45.5	42.7	11.8	47.0	42.1	10.9	48.3	41.1	10.6
인천 강화군	42.7	44.4	12.9	43.4	41.5	15.0	50.9	34.5	14.6	49.4	38.6	12.1
인천 옹진군	46.9	40.0	13.1	40.9	43.8	15.3	42.2	41.2	16.7	47.3	37.2	15.5
광주 동구	44.1	39.9	16.0	47.9	35.8	16.3	53.5	32.5	14.0	51.5	35.8	12.7
광주 서구	45.3	41.2	13.5	44.7	42.2	13.1	47.5	39.9	12.5	50.1	38.2	11.7
광주 남구	43.5	39.9	16.6	46.8	40.1	13.0	46.7	40.3	13.0	52.8	36.2	11.0
광주 북구	45.2	40.9	13.8	46.0	41.1	12.9	48.4	39.2	12.4	51.8	37.2	11.0
광주 광산구	40.3	44.1	15.6	44.5	42.7	12.8	46.4	40.5	13.2	47.7	38.8	13.5
대전 동구	47.8	40.7	11.5	50.7	37.0	12.3	50.1	39.1	10.9	51.7	37.8	10.5
대전 중구	46.6	42.1	11.3	50.0	38.8	11.2	50.8	37.7	11.5	51.4	38.0	10.5
대전 서구	47.4	40.9	11.7	51.0	39.6	9.4	51.7	37.8	10.5	52.6	37.5	9.9
대전 유성구	42.9	45.3	11.9	46.9	42.2	10.8	48.5	40.0	11.6	53.6	36.8	9.6
대전 대덕구	45.9	42.5	11.6	45.5	43.8	10.8	47.3	41.5	11.2	49.9	38.4	11.7
울산 중구	47.9	41.7	10.4	48.3	41.2	10.5	53.9	36.4	9.7	54.0	37.0	9.0
울산 남구	46.5	43.6	9.9	49.4	41.2	9.4	52.5	39.1	8.4	56.2	35.2	8.6
울산 동구	44.2	44.9	10.9	47.9	42.6	9.5	49.8	39.6	10.6	55.7	36.0	8.3
울산 북구	38.2	49.6	12.2	46.0	43.5	10.6	53.7	37.4	8.9	52.1	39.6	8.3
울산 울주군	45.0	44.9	10.0	44.8	46.0	9.2	49.1	41.2	9.7	49.7	41.2	9.0
경기 수원시	48.2	42.9	8.9	48.8	41.6	9.5	52.0	38.6	9.4	54.1	36.7	9.3
경기 성남시	50.0	41.7	8.4	53.2	39.4	7.4	56.2	36.3	7.5	58.3	34.5	7.2
경기 의정부시	47.5	43.4	9.0	49.4	41.2	9.4	47.9	41.6	10.4	53.7	37.1	9.1
경기 안양시	49.4	42.6	8.0	50.9	41.5	7.6	54.8	37.7	7.5	55.8	37.2	7.0
경기 부천시	47.0	43.1	9.9	52.4	39.3	8.3	53.4	37.6	9.0	54.5	36.8	8.7
경기 광명시	47.2	43.8	9.0	52.0	40.3	7.7	52.5	39.1	8.4	53.0	38.0	9.0

시군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경기 평택시	44.3	45.2	10.5	45.3	42.9	11.8	49.3	39.3	11.4	50.9	38.2	10.8
경기 동두천시	44.6	46.1	9.3	50.0	39.4	10.6	47.2	41.1	11.7	49.1	38.5	12.4
경기 안산시	44.2	45.6	10.2	48.8	41.8	9.4	49.8	39.2	11.0	51.8	37.1	11.1
경기 고양시	45.9	45.0	9.1	48.1	43.0	8.9	50.7	40.2	9.1	52.6	37.3	10.0
경기 과천시	49.3	42.4	8.3	50.6	42.0	7.4	45.5	42.8	11.7	46.4	40.8	12.8
경기 구리시	46.1	43.3	10.6	47.6	41.6	10.8	49.9	40.3	9.8	53.1	38.7	8.2
경기 남양주시	42.8	46.0	11.2	43.6	44.8	11.7	46.1	41.8	12.2	48.1	40.5	11.3
경기 오산시	50.7	40.4	8.9	49.2	41.5	9.4	47.1	43.0	9.9	54.5	35.9	9.6
경기 시흥시	42.6	47.0	10.4	46.3	43.2	10.5	49.5	39.8	10.7	50.3	38.6	11.1
경기 군포시	49.0	44.0	7.0	52.1	40.6	7.3	53.3	40.1	6.6	53.5	39.3	7.2
경기 의왕시	41.4	47.6	11.1	46.0	45.3	8.6	49.8	40.8	9.4	52.1	39.1	8.8
경기 하남시	46.0	43.8	10.2	45.8	44.0	10.2	50.9	38.8	10.3	54.5	37.1	8.4
경기 용인시	44.0	45.1	10.9	47.6	43.5	8.9	49.2	41.2	9.6	50.6	39.8	9.6
경기 파주시	45.0	43.3	11.8	45.8	41.6	12.7	47.8	40.8	11.4	50.1	38.5	11.4
경기 이천시	47.0	42.3	10.7	45.4	43.3	11.3	48.4	40.1	11.5	49.9	39.0	11.1
경기 안성시	46.9	40.5	12.6	50.8	40.4	8.8	48.8	40.1	11.1	53.2	35.9	10.9
경기 김포시	44.9	43.9	11.3	44.9	44.9	10.2	44.4	44.0	11.6	49.7	39.0	11.3
경기 양주시	44.3	42.8	12.9	48.6	41.4	10.0	46.5	41.1	12.4	46.8	40.3	12.9
경기 여주군	44.2	41.1	14.7	44.4	39.5	16.1	46.9	40.1	13.0	50.9	37.4	11.7
경기 화성시	41.0	45.8	13.3	44.1	42.5	13.4	50.7	38.9	10.3	49.7	40.4	9.9
경기 광주시	40.9	46.6	12.5	45.4	41.0	13.7	49.7	39.3	11.0	49.5	39.4	11.1
경기 연천군	44.7	41.6	13.7	48.7	42.2	9.2	51.3	36.4	12.3	50.9	36.7	12.4
경기 포천시	45.3	42.4	12.3	43.3	39.8	16.9	46.8	39.2	14.0	49.1	37.4	13.5
경기 가평군	46.2	40.4	13.4	42.5	43.3	14.2	44.8	36.5	18.7	51.6	34.0	14.5
경기 양평군	43.0	41.0	16.0	37.8	38.2	24.0	47.7	37.3	15.0	50.1	35.6	14.3
강원 춘천시	47.4	41.3	11.2	46.3	42.5	11.3	48.7	39.3	11.9	50.7	37.6	11.7
강원 원주시	46.1	43.4	10.5	46.3	41.8	11.9	49.7	38.5	11.8	51.7	37.6	10.7
강원 강릉시	47.2	42.3	10.5	49.2	41.0	9.8	50.0	39.5	10.5	49.1	40.4	10.5
강원 동해시	45.1	44.7	10.2	44.4	44.2	11.4	50.1	39.3	10.6	47.1	40.1	12.8
강원 태백시	45.1	44.0	10.9	44.5	39.5	16.1	51.2	37.0	11.8	51.4	33.3	15.3
강원 속초시	45.0	45.4	9.6	44.0	45.6	10.4	46.6	42.8	10.7	46.7	42.3	11.0
강원 삼척시	44.6	42.1	13.3	42.2	42.9	15.0	47.3	39.9	12.8	48.7	34.5	16.8
강원 홍천군	46.5	39.5	14.0	46.8	41.0	12.2	47.5	39.2	13.4	51.6	33.7	14.7
강원 횡성군	38.2	45.3	16.4	45.1	41.7	13.3	40.7	42.5	16.8	53.0	31.8	15.3
강원 영월군	44.9	40.4	14.7	45.3	42.6	12.2	45.8	39.3	14.9	48.6	38.2	13.2
강원 평창군	45.2	42.3	12.5	41.3	42.9	15.8	48.4	36.8	14.7	51.4	35.4	13.2
강원 정선군	43.7	39.6	16.7	44.0	41.8	14.2	46.6	38.5	14.9	50.6	30.9	18.5
강원 철원군	49.5	36.8	13.7	46.7	40.2	13.2	49.7	36.8	13.5	46.9	37.5	15.6
강원 화천군	45.1	40.8	14.1	51.5	38.0	10.4	49.1	37.7	13.2	52.2	33.8	14.0
강원 양구군	44.9	41.5	13.6	47.7	39.5	12.9	44.2	39.2	16.6	50.5	38.1	11.5
강원 인제군	44.7	42.0	13.2	43.8	41.3	14.9	49.9	35.5	14.6	47.1	38.6	14.3



시군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강원 고성군	48.4	42.1	9.5	48.9	40.1	11.1	45.0	41.7	13.2	45.5	43.1	11.4
강원 양양군	46.0	43.0	11.0	46.8	40.4	12.8	43.3	37.9	18.7	47.8	36.8	15.3
충북 청주시	46.8	41.1	12.0	50.0	39.1	10.9	50.2	38.6	11.3	51.8	36.4	11.7
충북 충주시	44.2	42.6	13.2	45.0	42.3	12.7	48.3	39.5	12.3	48.6	38.2	13.2
충북 제천시	44.6	44.3	11.0	44.1	43.6	12.4	45.6	40.0	14.4	49.4	38.8	11.8
충북 청원군	43.1	43.3	13.6	48.5	38.0	13.5	49.8	37.5	12.7	56.9	32.9	10.2
충북 보은군	41.6	37.0	21.4	36.8	41.7	21.5	49.2	26.4	24.4	44.1	37.6	18.3
충북 옥천군	42.3	40.9	16.9	43.0	40.8	16.2	44.2	40.2	15.6	47.7	39.3	13.1
충북 영동군	41.2	40.2	18.6	43.1	42.0	14.9	41.3	39.9	18.8	45.6	33.2	21.2
충북 진천군	42.2	44.9	12.9	44.0	44.0	12.0	50.4	36.2	13.4	50.6	36.3	13.1
충북 괴산군	40.6	42.1	17.2	45.6	38.6	15.8	39.0	44.1	16.9	50.5	34.5	15.0
충북 음성군	41.6	44.4	14.0	41.7	41.1	17.2	49.7	35.3	15.0	48.6	35.7	15.8
충북 단양군	40.2	44.1	15.7	42.7	40.4	16.9	46.5	34.8	18.7	46.2	34.6	19.2
충북 증평군	44.6	41.9	13.5	52.3	34.4	13.2	53.3	33.7	13.0	48.4	39.1	12.6
충남 천안시	47.7	41.5	10.8	47.2	41.9	10.9	51.4	38.0	10.6	53.6	36.3	10.0
충남 공주시	42.9	39.6	17.5	42.7	38.9	18.4	45.9	38.0	16.2	47.8	36.2	16.1
충남 보령시	45.2	42.4	12.4	42.9	41.5	15.7	45.2	38.5	16.4	45.7	39.1	15.2
충남 아산시	45.4	43.6	11.0	48.8	39.6	11.6	48.8	39.9	11.2	52.5	37.8	9.7
충남 서산시	46.7	41.6	11.7	43.7	44.7	11.6	49.8	37.7	12.5	49.0	39.9	11.1
충남 계룡시	42.6	45.9	11.5	45.5	39.6	15.0	45.8	42.4	11.9	46.1	39.5	14.4
충남 논산시	41.5	42.7	15.9	41.5	40.4	18.1	45.1	38.0	16.9	45.5	37.2	17.3
충남 금산군	43.0	44.1	12.9	43.7	41.8	14.6	52.1	36.0	11.8	49.7	36.0	14.3
충남 연기군	43.8	40.4	15.7	50.3	37.5	12.2	50.4	37.8	11.8	51.0	36.5	12.5
충남 부여군	40.8	40.0	19.2	42.4	37.0	20.6	39.3	38.3	22.4	45.3	34.7	19.9
충남 서천군	42.2	44.7	13.1	44.9	39.4	15.8	41.5	41.2	17.3	45.8	35.1	19.2
충남 청양군	43.2	36.0	20.8	44.4	40.3	15.3	43.5	32.7	23.8	45.0	37.8	17.1
충남 홍성군	40.0	43.0	17.0	46.4	38.9	14.7	46.1	40.8	13.1	44.4	37.5	18.1
충남 예산군	44.1	42.2	13.7	44.3	38.7	17.0	50.5	32.4	17.0	50.8	36.5	12.7
충남 태안군	44.1	40.9	15.0	43.1	39.7	17.2	45.6	37.1	17.3	51.2	37.1	11.7
충남 당진군	44.0	41.6	14.4	40.9	44.2	14.9	45.2	40.4	14.4	49.4	37.3	13.3
전북 전주시	44.1	41.2	14.6	46.5	41.1	12.4	46.6	39.4	14.0	49.1	37.5	13.4
전북 군산시	46.7	41.4	12.0	46.5	40.7	12.7	46.0	41.0	13.0	50.2	36.6	13.2
전북 익산시	43.9	41.3	14.8	45.6	41.5	12.9	45.0	41.1	13.9	46.0	38.5	15.5
전북 정읍시	41.4	40.9	17.7	42.9	40.1	17.0	39.4	41.7	18.9	42.8	39.7	17.5
전북 남원시	44.3	37.7	18.1	39.6	42.1	18.3	38.0	39.9	22.1	43.1	35.8	21.1
전북 김제시	42.9	37.3	19.8	44.0	38.2	17.8	43.1	39.0	17.9	48.4	33.0	18.6
전북 완주군	39.0	44.6	16.4	41.8	40.1	18.1	47.9	35.6	16.5	47.6	37.3	15.1
전북 진안군	47.8	35.1	17.1	42.3	41.8	15.8	46.6	29.4	23.9	51.3	32.7	16.0
전북 무주군	46.0	37.7	16.3	36.1	43.3	20.6	51.4	33.0	15.6	44.2	38.5	17.3
전북 장수군	42.9	36.7	20.5	39.9	36.5	23.6	41.7	34.4	23.9	34.8	39.4	25.8
전북 임실군	38.5	37.8	23.7	39.8	33.2	27.0	47.4	30.6	22.0	53.6	27.2	19.2

시군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전북 순창군	42.8	33.8	23.5	39.0	43.7	17.3	43.6	37.0	19.4	42.8	33.5	23.7
전북 고창군	38.0	38.3	23.6	35.5	39.3	25.2	42.3	34.7	23.0	44.4	33.5	22.1
전북 부안군	41.9	39.5	18.6	39.3	37.1	23.5	45.0	34.6	20.4	44.2	36.0	19.9
전남 목포시	42.3	40.6	17.1	43.2	40.8	16.0	45.4	38.1	16.6	44.5	40.0	15.5
전남 여주시	42.6	41.6	15.8	41.4	41.9	16.7	45.0	39.1	15.8	46.9	36.8	16.3
전남 순천시	39.7	42.8	17.5	42.9	40.8	16.3	44.1	41.4	14.5	44.2	40.2	15.6
전남 나주시	42.6	37.0	20.4	41.8	40.4	17.8	42.9	37.7	19.4	46.4	36.2	17.4
전남 광양시	41.2	43.5	15.2	39.4	45.3	15.3	45.1	38.4	16.5	46.8	40.3	12.9
전남 담양군	41.6	36.0	22.4	42.1	35.2	22.7	47.2	34.0	18.8	50.7	35.3	14.0
전남 곡성군	37.5	42.5	20.0	37.6	39.2	23.2	44.1	37.1	18.8	45.1	32.8	22.1
전남 구례군	40.5	32.7	26.8	42.6	38.0	19.4	43.5	35.3	21.3	46.6	33.2	20.2
전남 고흥군	43.5	37.0	19.5	40.3	39.2	20.5	45.7	34.6	19.6	47.2	35.2	17.6
전남 보성군	36.5	37.9	25.5	35.2	42.1	22.6	45.8	35.5	18.6	42.3	35.9	21.9
전남 화순군	42.3	41.1	16.6	44.5	38.5	17.0	41.2	41.4	17.4	43.6	39.3	17.1
전남 장흥군	39.5	34.9	25.7	37.5	41.1	21.4	39.7	37.6	22.6	40.3	36.4	23.3
전남 강진군	36.2	39.0	24.8	39.1	42.1	18.8	43.5	36.3	20.3	42.2	38.6	19.3
전남 해남군	38.1	38.6	23.2	39.7	40.5	19.8	42.8	35.8	21.4	47.1	30.5	22.4
전남 영암군	41.3	40.0	18.7	42.2	42.5	15.3	43.3	38.6	18.1	49.4	33.2	17.4
전남 무안군	38.0	37.3	24.7	39.7	37.4	22.8	38.8	36.7	24.4	51.4	31.9	16.7
전남 함평군	38.6	33.9	27.5	46.6	32.3	21.1	39.8	40.2	20.1	40.8	31.6	27.6
전남 영광군	41.9	40.4	17.7	39.4	42.0	18.6	41.3	35.3	23.4	41.6	38.4	20.0
전남 장성군	40.8	39.8	19.4	46.1	38.6	15.4	46.0	36.9	17.1	49.8	34.4	15.8
전남 완도군	35.9	42.5	21.5	38.1	40.4	21.6	43.3	36.9	19.7	43.9	36.3	19.9
전남 진도군	37.7	36.9	25.4	40.9	40.5	18.6	39.7	33.8	26.5	49.6	31.8	18.6
전남 신안군	46.0	33.5	20.4	40.1	34.1	25.8	40.4	34.9	24.7	48.2	34.1	17.7
경북 포항시	46.0	44.7	9.3	47.1	44.0	9.0	51.1	39.9	9.0	52.1	38.0	10.0
경북 경주시	46.7	42.6	10.8	46.6	42.7	10.7	49.1	40.4	10.6	50.9	38.0	11.1
경북 김천시	44.0	43.4	12.5	43.2	44.3	12.5	50.9	38.2	10.9	50.0	39.7	10.3
경북 안동시	48.2	42.2	9.6	48.4	41.3	10.3	48.1	39.9	12.0	48.8	40.9	10.4
경북 구미시	46.9	43.3	9.8	46.8	44.1	9.1	49.8	41.2	9.1	54.7	36.8	8.4
경북 영주시	46.6	40.5	12.8	40.9	43.4	15.7	44.2	42.7	13.1	50.1	36.4	13.5
경북 영천시	45.5	42.7	11.8	46.3	41.4	12.3	46.1	39.2	14.7	52.6	37.5	9.9
경북 상주시	41.4	42.6	16.0	43.0	42.4	14.6	44.5	41.0	14.6	49.3	36.4	14.4
경북 문경시	39.7	45.4	14.9	45.5	40.5	14.0	45.5	43.1	11.4	50.8	33.3	15.8
경북 경산시	44.7	45.4	9.9	46.0	42.8	11.2	50.4	40.6	9.0	53.3	38.6	8.2
경북 군위군	44.4	38.0	17.6	48.2	40.4	11.3	51.9	34.8	13.4	58.6	32.8	8.6
경북 의성군	44.4	41.0	14.7	50.7	37.6	11.8	51.7	34.3	14.0	56.9	30.5	12.5
경북 청송군	42.8	43.2	14.0	47.1	37.4	15.5	44.3	36.2	19.5	53.8	39.2	7.0
경북 영양군	41.4	45.3	13.3	39.8	43.1	17.1	50.8	34.4	14.8	51.7	35.6	12.7
경북 영덕군	40.7	42.4	16.9	46.7	41.9	11.4	47.0	36.9	16.1	51.7	36.1	12.2
경북 청도군	45.4	39.6	15.0	51.7	38.0	10.3	51.7	32.8	15.4	55.8	32.0	12.3



시군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경북 고령군	40.9	44.9	14.2	44.7	41.2	14.1	47.5	36.1	16.4	51.9	33.1	15.0
경북 성주군	42.4	40.9	16.7	46.5	37.7	15.8	48.9	36.3	14.9	57.4	30.7	11.9
경북 칠곡군	47.0	42.1	11.0	48.0	43.5	8.5	49.0	40.8	10.3	55.5	37.6	6.8
경북 예천군	44.7	35.8	19.5	43.4	44.0	12.6	44.4	35.2	20.3	51.4	35.1	13.5
경북 봉화군	46.9	37.4	15.7	44.2	40.9	14.9	51.2	35.0	13.8	52.8	31.1	16.2
경북 울진군	45.1	42.2	12.7	44.8	43.8	11.4	45.6	43.9	10.5	45.6	39.6	14.8
경북 울릉군	50.0	40.4	9.6	41.1	46.4	12.5	62.5	32.8	4.7	47.0	48.2	4.8
경남 창원시	45.9	45.7	8.4	47.0	43.9	9.1	50.6	39.9	9.6	52.9	38.2	8.8
경남 마산시	46.0	43.4	10.6	49.7	40.9	9.5	51.8	39.3	8.9	54.2	36.4	9.3
경남 진주시	45.3	41.3	13.3	44.9	42.6	12.5	47.1	41.4	11.5	49.7	38.8	11.5
경남 진해시	47.9	43.1	9.0	49.4	43.0	7.6	49.9	40.8	9.3	52.3	39.3	8.4
경남 통영시	44.0	42.4	13.6	43.5	43.1	13.3	49.5	38.6	11.9	50.7	35.3	14.0
경남 사천시	46.2	42.4	11.4	45.8	43.8	10.4	47.9	42.3	9.8	52.9	37.5	9.7
경남 김해시	44.6	45.3	10.2	46.4	43.7	9.9	50.1	41.7	8.2	49.8	39.3	10.9
경남 밀양시	40.7	42.1	17.2	44.7	41.5	13.8	46.7	38.5	14.8	50.4	36.3	13.3
경남 거제시	46.2	44.3	9.5	46.2	43.4	10.5	49.5	39.8	10.7	53.7	36.5	9.8
경남 양산시	44.5	45.9	9.6	47.5	43.2	9.3	48.5	41.5	10.0	50.8	39.8	9.3
경남 의령군	37.3	45.8	17.0	40.3	41.9	17.8	49.7	34.8	15.5	58.0	29.0	13.0
경남 함안군	43.4	42.8	13.8	45.7	41.1	13.2	47.2	40.4	12.4	54.4	34.1	11.6
경남 창녕군	43.7	41.1	15.2	45.3	40.5	14.2	42.7	44.2	13.2	52.2	35.3	12.5
경남 고성군	39.3	39.5	21.3	41.0	40.2	18.8	44.9	39.7	15.4	49.3	33.2	17.5
경남 남해군	44.9	40.7	14.4	40.5	41.6	17.8	43.4	38.4	18.3	52.1	32.9	15.1
경남 하동군	43.7	39.7	16.6	42.5	37.9	19.7	44.0	36.4	19.6	51.0	31.0	18.0
경남 산청군	42.1	40.4	17.5	38.2	42.4	19.3	47.7	34.1	18.2	44.7	37.2	18.2
경남 함양군	45.6	39.7	14.7	46.5	36.7	16.8	45.9	35.0	19.2	54.2	31.4	14.4
경남 거창군	40.5	41.5	17.9	45.8	37.4	16.9	46.1	37.9	16.0	45.4	37.3	17.3
경남 합천군	38.1	40.7	21.1	42.9	39.3	17.8	54.3	34.9	10.7	49.3	35.8	15.0
제주 제주시	43.6	39.4	17.1	44.7	40.2	15.1	46.4	38.2	15.5	45.4	36.9	17.7
제주 서귀포시	42.1	39.2	18.7	41.1	40.3	18.5	44.6	36.5	19.0	44.6	36.1	19.3
제주 북제주군	41.6	37.0	21.4	41.8	37.5	20.7	40.9	36.4	22.6	-	-	-
제주 남제주군	42.7	38.9	18.4	42.6	35.0	22.3	43.4	34.9	21.8	-	-	-